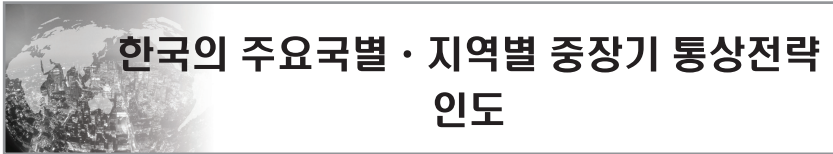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이순철 · 최윤정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인도 |

이순철 · 최윤정

.....

서 언

최근 인도경제는 연평균 8%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10.4%)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 등 세계유명 경제예측기관들은 인도경제가 향후 단기적으로는 8%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5~6% 이상 성장함으로써 2015년에 경제성장률면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2020년경에는 일본을 앞서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 철강 및 석탄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국과의 경협, 지시기반 산업의 부상,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 등을 갖추고 있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은 매년 인도와 100억 달러 상당의 교역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10%가 인도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삼성, LG전자 등 한국기업들이 인도시장에서 인도시장을 선점하여 1~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1억 이상의 인구나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 소비층 형성 등으로 인도가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는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의 대인도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포괄적이고 참신합니다. 내수시장, 서비스 산업협력, 투자, 지역경제통합분야 협력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이 다년차 과제로 진행 중인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라는 보고서가 출간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국별·지역별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 대

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다루는 총괄보고서와 함께, 국별, 지역별로 출간되는 12개의 보고서 중의 인도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에서 이순철 부연구위원, 최윤정 전문연구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 보고서는 집필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산자부의 노재민 팀장, KOTRA의 윤효춘 팀장, 본원의 김홍중 박사와 익명의 평가자들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한국의 대인도 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보고서에서 제안된 전략들이 향후 정부의 정책 제안과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고 아울러 정부의 대인도 통상정책을 평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과제가 학계에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인도진출을 위한 통상전략 중심 연구주제 중의 하나로 부상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7년 12월
원장 이 경 태

.....

국문요약

인도는 1947년 독립이후 폐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으로 소위 힌두성장률인 3~5%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인도정부가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경제는 2002년까지 연평균 6%대의 성장을 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연평균 8%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2005년부터 9%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인도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고속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2006년 기준 인도의 GDP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올랐으며,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에 따른 GDP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명 경제예측기관들은 인도경제가 향후 단기적으로는 8%이상, 중장기적으로는 5~6% 이상 성장함으로써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2020년경에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20~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의 대인도 교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여 2006년에 9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이중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55억 달러인 반면 수입은 36억 달러에 그쳐 한국은 2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또한 인도에 1991년부터 2007년 9월까지 271건에 총 10억 8,941만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한 인도의 7대 외국인투자국이기도 하다.

그 밖에 한국은 인도와 세관, 에너지 자원, 과학기술, 안보, 건설 분야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양국은 광의의 FTA라 할 수 있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한-인도 CEPA가 체결된다면 한국은 인도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대인도 통상전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대인도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배경 및 목표는 경제, 정치, 외교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하이테크 기술 협력, 대테러전의 동맹국 확보, 중국과 러시아 견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인도 협력을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우주공동개발, 군사훈련, WMD 확산 방지 등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도 인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자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있어 인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등 주요 통상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마찰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과의 통상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인도와의 FTA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원의 확보 및 개발에 있어서 인도와 경쟁하기 보다는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거대한 인도시장 진출, 우회생산 및 수출금지 확보, IT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거양 및 중국 세력 확대 견제 등 치밀한 정치·경제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대인도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와 FTA를 추진하는 한편 인프라 건설, 핵연료 및 기술제공, 합동군사훈련, UN 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ODA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EU 역시 거대한 시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균형자 역할이 가능한 인도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여, 인도를 EU의 전략적 통상확대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1) EU-인도간 외교 메커니즘 강화 2) 정치적 협력 심화 3) 인력 및 문화 교류 확대 4) 경제정책 협력 및 확대 5) 문화교류 확대 6) 무역 및 투자확대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인도 협력 전략을 수립하였다.

인도경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도 주변국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 한국과의 경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인도 통상전략을 다양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인도 통상전략의 기본방향은 인도가 1) 거대한 잠재적 소비시장 2) 남아시아의 전략적 허브지역 3) IT 등 지식기반산업의 강국인 점을 고려하여 1) 보완적 산업관계의 활용 2) 투자의 시너지 효과 증대 3) 우수한 인력의 교류 및 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 한·인도 CEPA를 적시에 체결하고,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 및 무역을 확대하며, IT·과학 및 기술보전/BT/의학·금속 및 광물개발 협력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남아시아 경제통합, 우주 및 항공분야 협력, 항만 개발 및 고속철도 등 인프라 분야 협력, 핵에너지 협력, 글로벌차원의 환경협력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차 례

서 언	5
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1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1
제2장 인도경제의 현황과 전망	23
1. 인도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25
가. 급부상하는 인도경제	25
나. 산업정책 및 구조의 변화	26
2.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32
가. 인도경제의 중장기 발전 전망	32
나. 경제발전 과제	37
3. 인도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43
가. 무역구조	43
나. 직접투자 추이	47
다. 대외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49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57
1.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협력	59
가. 무역	59

나. 투자	66
2.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73
가. 경제협력 현황	73
나. 주요 협력 이슈	77

제4장 주요국의 대인도 통상 전략 81

1. 미국	83
가. 인도-미국 무역 및 투자	83
나. 인도의 대미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86
다. 미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90
2. 중국	94
가. 인도-중국 무역 및 투자	94
나. 인도의 대중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97
다. 중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추이	100
3. 일본	103
가. 인도-일본 무역 및 투자	103
나. 인도의 대일본 경제협력 추진 분야	105
다. 일본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107
4. EU	112
가. 인도-EU 무역 및 투자	112
나. 인도의 대EU 경제협력 추진 분야	117
다. EU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119
5.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평가와 한국 통상전략에의 시사점	122
가.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요약	122
나. 한국 통상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	125

제5장 중장기 통상전략 기본방향 및 분야별 협력 전략	129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131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131
나. 한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기본방향	137
2. 분야별 협력 전략	142
가. 시장확대	142
나. 서비스업 협력	147
다. 발전 및 에너지 산업	151
라. 지식기반산업	152
마. 자원 및 환경분야 협력	155
바. 원조사업	157
제6장 요약 및 결론	159
참고문헌	165
Executive Summary	167

.....

표 차례

표 2-1. 2006년 인도경제의 세계적 위치(추정치)	26
표 2-2. 2006/07년 산업별 · 분기별 경제성장률	29
표 2-3. 제조업의 노동자 1인당 고정자본형성	31
표 2-4. 인도산업 및 제조업 분야의 구조 변화	31
표 2-5. 주요 기관의 인도경제성장률 전망	32
표 2-6. 인도기업의 경영성과	34
표 2-7. 인도의 엔지니어링 및 IT분야 노동 공급 현황	36
표 2-8. 중국과 인도간 인프라 비교(2002년 기준)	38
표 2-9. 주요 국가의 기업투자환경 비교	40
표 2-10. 인도의 비관세장벽 유형	41
표 2-11. 인도의 수출입 현황	44
표 2-12. 인도의 주요 수출품 현황	45
표 2-13. 인도의 주요 수출국	45
표 2-14. 인도의 주요 수입품 현황	46
표 2-15. 인도의 주요 수입국 현황	46
표 2-16. 인도의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53
표 3-1. 최근 5년간 양국 교역 추이	60
표 3-2. 한국과 인도의 수출입 상품군(2006)	61
표 3-3. 주요 교역품목별 교역현황	63
표 3-4. 한국과 인도의 관세율 비교	64
표 3-5. 산업별 실행관세율(%)	65
표 3-6. 인도의 對한국 수입 규제 현황(2006년 말 현재)	66
표 3-7. 인도의 국가별 FDI 유입액	68

표 3-8. 업종별 대인도 직접투자 현황(2007년 3월말 기준 누적치)	69
표 3-9. 인도의 對한국 직접투자추이(실투자 기준)	70
표 3-10. 한-인도 주요 에너지 협약	75
표 4-1. 인도의 대미국 교역 추이	83
표 4-2. 미국이 인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84
표 4-3. 인도의 상위 10대 투자국(1991년 8월~2007년 3월)	85
표 4-4. 인도의 해외투자 (1996년 4월~2006년 10월)	86
표 4-5. 인도의 항공기 탑승객 증감 추이	89
표 4-6. 인도의 대중국 교역 추이	95
표 4-7. 인도의 대중국 교역 비중 변화	96
표 4-8. 인도와 중국의 석유 수급 증가율 추이	97
표 4-9. ICT 개발 순위	98
표 4-10. 인도의 대일본 교역 추이	104
표 4-11. 인도의 지역별 수출 추이	112
표 4-12. 인도의 지역별 수입 추이	113
표 4-13. 인도의 FDI 유입 추이(1991년 8월~2007년 3월)	115
표 4-14. 인도의 국가별 FDI 유입 비중 (2006년 10월말 누적 기준)	116
표 4-15. 인도-주요국과의 핵심 협력 추진 분야 종합	127
표 5-1. (RCA분석에 따른) 한-인도간 교역확대 가능분야	138
표 5-2. 최근 인도정부가 발표한 인프라 사업 사례	140
표 5-3.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2004년도 국내기준)	143
표 5-4. 한국의 대SAARC회원국과의 수출입 현황	147
표 5-5. 인도의 주요 과학기술분야 및 협력 가능 분야	152
표 5-6. 제약업체 인도 진출 현황	154
표 5-7. 인도 주요 비연료 광물의 매장량 및 예상 수명	155
표 6-1. 단계적 대인도 통상전략(안)	163

.....

그림 차례

그림 2-1. 인도·중국의 GDP 증가율 비교	25
그림 2-2. 인도산업 구조	29
그림 2-3. 산업별 GDP 성장률 기여도	30
그림 2-4.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30
그림 2-5. 주요 대외개방 현황	33
그림 2-6. 인도의 국내총저축(GDS) 및 국내총고정자본형성(GFCF)의 GDP 대비 비중	35
그림 2-7. 주요국의 인구구조 추이	35
그림 2-8. 인도의 인구대비 빈곤층(Poverty) 비중	43
그림 2-9. 인도의 FDI 유입 추이	47
그림 2-10. 대인도 주요 FDI 진출국 현황	48
그림 2-11. 주요 FDI 진출 분야 현황	48
그림 3-1. 한국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비중(2006)	62
그림 3-2. 대인도 직접투자현황	67
그림 4-1. 인도와 중국의 석유수입 의존도 추이	97
그림 5-1. 인도경제 성장과 비즈니스 기회	132
그림 5-2. 인도 IT산업 성장 추이	134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도는 330만 km²로 세계에서 7번째로 넓은 국토와 풍부한 천연 자원, 11억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소비, IT를 비롯한 서비스 분야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2003년 이후 연평균 8%가 넘는 경제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5,000만 명 정도인 중산층이 2025년에 5억 8,300만 명에 달하여 현재 세계 12위에서 7계단 상승한 5위의 소비 시장을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250만 명의 대학 졸업생 중 30만 명이 자연공학 전공자이며, 이중에 15만 명의 IT 전문가들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젊은층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는 인도 인구구조의 특성상 2050년에는 세계 가용노동인구의 18%가 인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도의 우수하고 풍부한 청년 노동인력도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도는 또한 최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변국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파트너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지역 및 양자간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 논의는 글로벌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경제는 중단기적으로는 8%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중장기적으로는

5~6%의 성장을 달성하여 2025년 이후에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성장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동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서쪽으로는 중동 및 유럽,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 및 CIS 국가들을 두고 있는 등 지리적으로 중요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들이 인도경제의 부상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배경 하에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도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대국의 인도와의 협력은 경제적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미국, EU, 일본 등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한편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강대국들의 인도와의 협력관계 변화는 아시아 지역 및 주변국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인도의 통상협력 관계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의 교역은 지난 10여 년간 20~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3년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넘어서 2006년에 9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20%를 넘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인도에 1991년부터 2007년 3월까지 271건에 총 10억 8,941만 달러의 직접투자를 하였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인도시장을 선점하며 분야별 시장 점유율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로 대기업 위주로 제조업과 도소매 일부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 투자의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양국은 광의의 FTA라 할 수 있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한·인도 CEPA가 체결된다면 한국은 인도와 더욱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경제의 부상은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

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인도경제의 급성장이 한국경제에 주는 의미와 통상관계 강화를 통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앞으로 인도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인도 진출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인도와 통상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인도경제의 변화는 세계 경제의 판도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내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인도가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도경제 현황, 산업정책 및 전략의 변화, 산업구조, 인도경제의 성장요인 및 장애요인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무역 및 투자, 인도의 통상정책의 현황, 자유무역화 정책 추이와 전망 등을 통해 인도의 대외정책관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과 인도간의 경제 및 통상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와의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를 무역 및 투자 협력, 경제협력 주요 현황, 주요 협력 이슈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궁극적으로 양국간 경제 및 통상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한국의 대인도 통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도에 대한 주요국의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을 고찰한다. 인도의 4대 교역대상국인 미국, 중국, 일본, EU를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인도가 동 국가들과 어떠한 통상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동 국가들이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통상전략으로 인도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한국의 대인도 통상전략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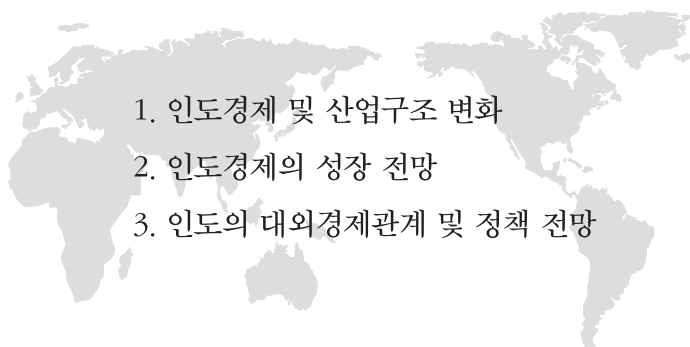
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인도경제 현황과 전망,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주요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등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이 대인도 통상전략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방향과 분야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총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인도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서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를 조사·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을, 제5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분야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제2장

인도경제의 현황과 전망



1. 인도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2.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3. 인도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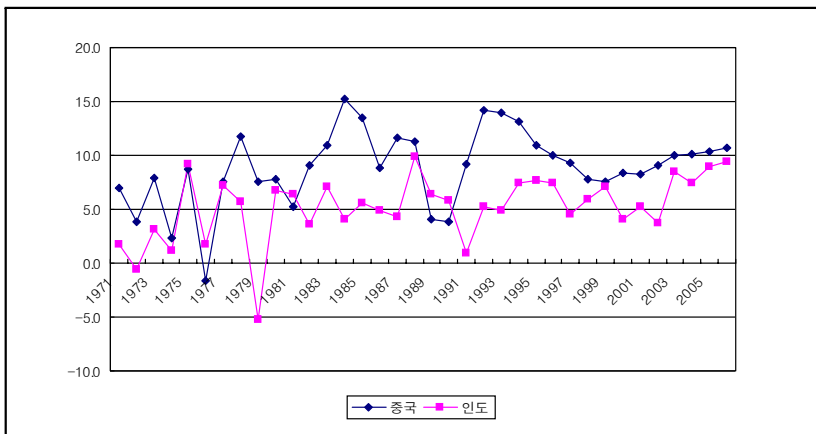
인도경제의 현황과 전망

1. 인도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가. 급부상하는 인도경제

1947년 독립 이후 인도는 구소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 모형을 도입하여 폐쇄적인 경제발전 계획으로 3~5%대의 소위 힌두성장률로 불리는 저조한 경제 성장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정부의 과도한 보호정책으로 인한 산

■ 그림 2-1. 인도 · 중국의 GDP 증가율 비교 ■



자료: Global Insight.

업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 정부재정의 고갈 등으로 금융위기를 맞은 인도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혁신적인 개혁 및 개방정책(‘신경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신경제 정책을 도입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6%대의 성장을 하던 인도경제는 IT산업을 필두로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수출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2003년 이후부터 중국(10.4%) 다음으로 높은 연평균 8%를 넘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나아가 2005년부터 인도가 9%대의 성장을 기록하자 인도경제는 고성장대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2006년 기준 GDP 규모가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로 올라있으며,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으로는 GDP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한다.

표 2-1. 2006년 인도경제의 세계적 위치(추정치) ■

구 분	PPP GDP		GDP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미 국	19.7	1	27.7	1
중 국	16.1	2	5.3	5
일 본	6.2	3	9.3	2
인 도	6.0	4	1.8	13
한 국	1.6	14	1.8	12

자료: IMF.

나. 산업정책 및 구조의 변화

1) 산업정책의 변화

인도의 산업정책은 크게 1991년 개방과 개혁 정책이 추진 된 기점을 중심으로 개방이전과 개방이후로 구분된다. 개방이전의 산업정책은 폐쇄적이면서도 공기업 중심의 공급정책이라고 한다면, 개방이후는 대외개방, 공공분야의 민영화,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의 친시장적이면서도 외부지향적 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방이전의 주요 정책으로는 중요 산업의 공기업화, 엄격한 노동법 적용, 외국인 투자 제한, 외환관리, 영세기업보호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선 인도정부는 민간부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주요 산업은 정부의 통제하에 공기업이 공급을 하게 하였다. 안보관련 산업, 원자력, 철도, 철강, 항공기, 조선 등 주요 산업은 전적으로 공기업에 의해 생산하거나 일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생산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산업개발법을 제정하여 생산품목, 생산시설 규모, 생산지역 등 생산활동에 대한 정부의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둘째, 엄격한 노동법의 적용이다. 인도정부는 산업정책의 주요 목표를 고용창출에 두었다. 따라서 모든 산업은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된 것은 물론 고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노동법은 고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고용창출의 기회조차 축소시키거나 노동쟁의의 빈발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비록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국인 투자도 엄격한 노동법 적용으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다.

셋째, 인도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산업발전을 위하여 외국자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외자본은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받도록 하였으며, 경영권은 전적으로 인도인에 속하게 만들었다.

넷째, 외국기업이 인도에 투자하여 인도에서 발생한 수입을 외국으로 전송하지 못하게 하는 외환관리법을 시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는 외환관리법은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다섯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세기업보호법(SSI)을 도입하여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가내수공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특정부분의 투자를 제한하여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91년 인도가 금융위기를 맞이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경제성장은 연평균 3~4%라는 소위 힌두성장률을 기록하게 하였다. 1991년 금융위기와 더불어 인도정부는 대대적인 개혁 및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인도정부가 1991년 과거의 네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신산업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이 정책은 인도산업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 인도정부는 이 정책을 통하여 기존의 정부의 허가가 필요로 했던 업종을 국가안보 및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였다. 또한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할 때 사전에 정부의 허가받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군수물자, 원자력, 철도운송, 석유, 석탄과 갈탄 등 주요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외국인 투자도 허용하였다. 외국인투자는 1) 자동승인 및 등록 업종 2) 일부 허가 업종 3)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을 구분하여 개방하였다. 특히 등록만하면 자동승인 부분을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들이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변화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에 인도경제는 매년 빠른 성장을 하게 된다. 1991년~2000년까지는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하여 왔다. 특히 최근 5년간 8%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인도경제는 고도성장기에 들어섰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2) 산업구조의 변화

최근 인도경제의 성장은 IT를 비롯한 서비스 분야의 성장은 물론 제조업, 건설, 부동산 등의 동반 성장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두 자리 성장을 계속함에 따라 향후 인도도 세계 공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 2006/07년 산업별 · 분기별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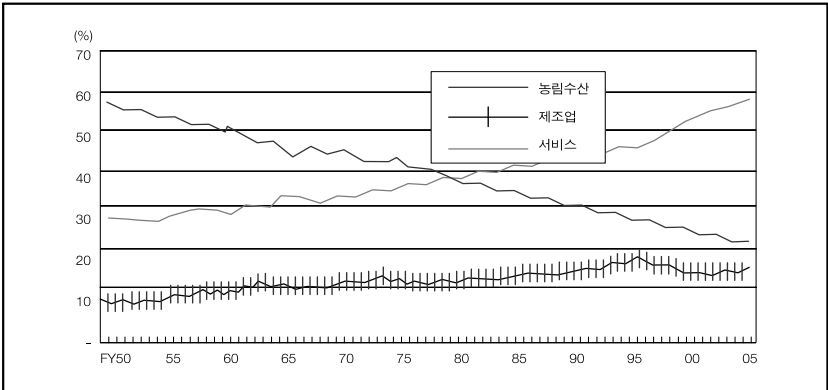
구 분	06/07 GDP		06/07 분기별 성장률(%)			
	추정금액 (천만 루피)	성장률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농수산업	525,875	2,7	2,8	2,9	1,6	3,8
광산업	56,912	5,1	3,7	3,9	5,5	7,1
제조업	442,503	12,3	12,3	12,7	11,8	12,4
전력, 가스, 수력	61,671	7,4	5,8	8,1	9,1	6,9
건설	196,555	10,7	10,5	11,1	10,0	11,2
무역, 호텔, 교통, 통신	768,578	13,0	12,4	14,2	13,1	12,4
재정 및 부동산	396,394	10,6	10,8	11,1	11,2	9,3
사회복지	399,668	7,8	11,3	8,3	6,7	5,7
총계	2,848,157	9,4	9,6	10,2	8,7	9,1

주: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며, 본고에서 회계연도는 모두 ‘년도’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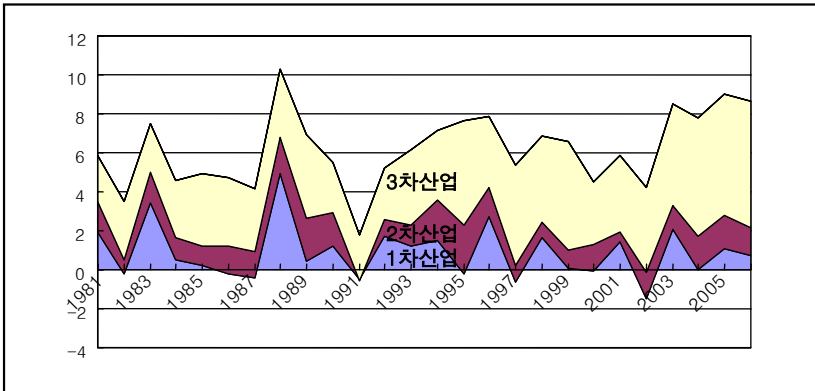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Government of India.

농업의 비중은 18.4%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광업 및 제조업(20.4%), 서비스업(61.2%)이 모두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내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어 인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는 한편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2. 인도산업 구조



■ 그림 2-3. 산업별 GDP 성장률 기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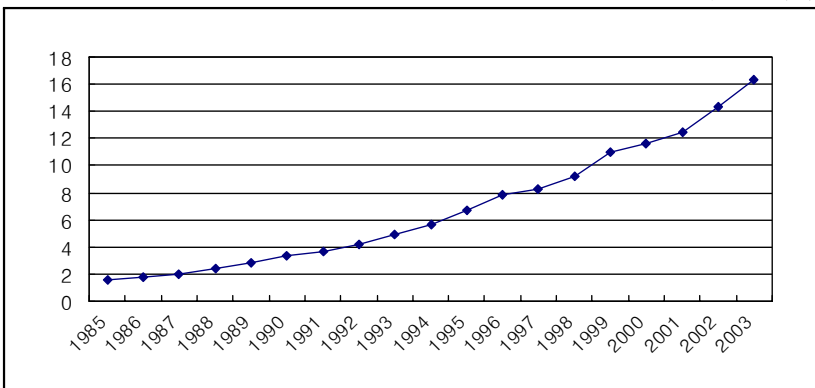
자료: 이순철, 양평섭(2007). 「중국 · 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별로 GDP 성장기여도를 산업비중에 성장률을 가중하여 계산한 결과를 1981년과 2006년을 비교해 보면, 농업 32.8%→8.5%, 제조업 26.6%→16.6%, 서비스업 40.6→74.9%로 대폭 변화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1991이전, 1992~1997년, 1998~2000년, 2001년 이후로 구분하여 점차

■ 그림 2-4.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

(단위: 10만 루피)



자료: 인도통계청.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 노동자 1인당 고정자본 형성을 보면, 1991년 개혁 및 개방 이전에는 노동자 1인당 고정자본형성이 20만 루피 이하였으나, 1991년 이후 1인당 고정자본형성이 증가하여 2001년에는 57만 루피,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60만 루피 이상이 되었다.

표 2-3. 제조업의 노동자 1인당 고정자본형성

(단위: 10만 루피)

1985	1988	1991	1992	1994	1996	2001	2002	2003
0.8	1.2	1.9	2.2	3.1	4.0	5.7	5.8	6.2

자료: 인도통계청.

이순철·양평섭(2007)에 따르면, 인도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 석유화학, 금속, 운송장비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입에서는 광산물, 운송장비가 제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2-4. 인도산업 및 제조업 분야의 구조 변화

구분	구조변화내용
산업구조	서비스업 중심, 제조업 성장, 농업영향 여전
제조업 비중	석유화학, 금속, 운송장비 증가 추세 섬유 및 의류 감소 추세
제조업 성장 기여도	금속, 석유화학, 운송장비
수출기여도	광산물, 운송장비, 섬유 및 의류
수입기여도	광산물, 운송장비, 금속

자료: 이순철, 양평섭(2007). 「중국·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구성.

2.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가. 인도경제의 중장기 발전 전망

골드만삭스는 2003년 보고서를 통하여 인도경제가 향후 5~6%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여 2030년경에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최근 인도경제는 안정적으로 8%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에 골드만삭스 등 다양한 경제전망 기관들이 인도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기 시작하였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인도는 중장기적으로 6~8%대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5년경에 경제성장률면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2032년경에는 일본을 앞서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수적인 Global Insight도 인도경제는 중장기적으로 5.7%의 성장을 계속하여 인도와 중국의 세계 GDP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인도정부도 우호적인 외부여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20년까지 8.5%~9.0%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2020년까지 고용창출, 빈곤 타파 및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하고 GDP 수준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승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2-5. 주요 기관의 인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단기(2007)	중기(2020)	장기(2050)
Goldman Sachs	7.5%	8.5%	6.2%
Global Insight	7.7%	5.7%	-
EIU	7.6%	-	-
인도정부 목표치	9.0%	8.5~9.0%	-

자료: Goldman Sachs (2007), Global Insight (2007), Government of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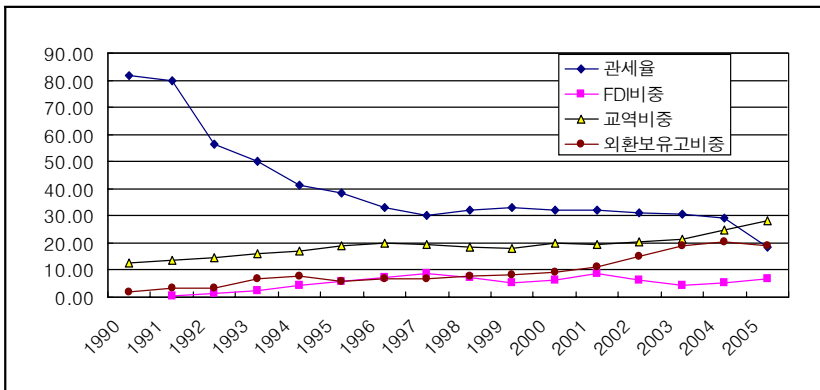
이러한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데에 다양한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인도경제를 급속히 성장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개방 및 개혁정책,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 철강 및 석탄 등 풍부한 천연자원, 대외적으로 미국 등의 주요 강국의 인도와의 경협분위기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은 지금까지 인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도 인도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첫째, 경제 개방 및 개혁정책이 지속이다. 인도정부는 거대내수시장 중심의 자급자족형 경제개발 모델에서 1991년 이후 친시장적 개방정책으로 경제개발 모델을 전환하였다. 투자 및 생산 활동, 기업 경영효율성, 외국인 투자, 대기업 투자 등을 저해하거나 제한하였던, 기존의 산업개발법, 노동법, 외환관리법, 영세기업보호법을 대폭 개선하거나 폐지하였다. 또한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였으며, 교역활성화를 위해서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개혁으로 외국인 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인도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의 개방 및 개혁정책 이후, 평균관세율은 80%대에서 10%대로 감소하였으며, 교역비중은 GDP대비 10%수준에서 30%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FDI

■ 그림 2-5. 주요 대외개방 현황 ■

(단위: %)



주: FDI비중=FDI유입액/GDP, 교역비중=(수출+수입)/GDP, 외환보유고비중=외환보유고/GDP.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유입은 비록 GDP 비중으로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유입액 자체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환보유고의 GDP 수준은 1%대에서 20%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경제를 더욱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 성장을 견인함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소비의 주요 대상인 중산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국립응용연구원(NCAER)에 따르면 실제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소득 20만~100만 루피(PPP 기준 2만~10만 달러)를 가진 중산층이 1990/91년 1,500만 명에서 현재 1억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산층의 증가는 강력한 소비계층을 형성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개방과 개혁정책이 인도기업들에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줌에 따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영성과가 크게 제고되고 있다. 가령, 2006/07년 상반기 중 인도 민간기업의 매출 및 이익 등 경영지표는 전년동기보다 20~30%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 표 2-6. 인도기업의 경영성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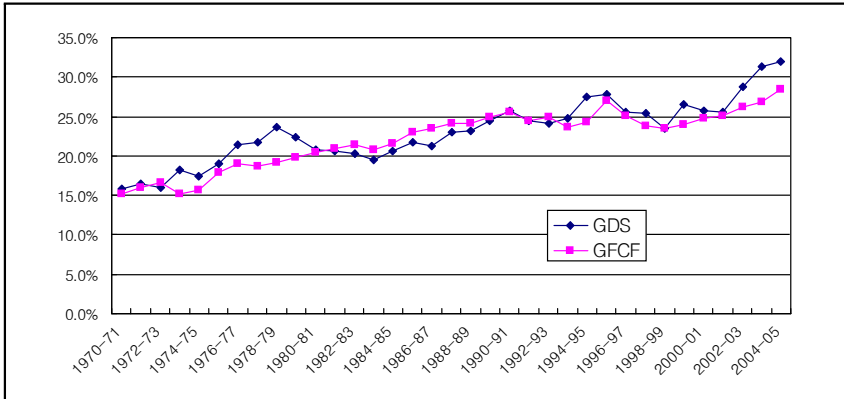
(단위: 천만 루피, %)

구분	2005/06상반기	2006/07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5/06 상반기	2006/07 상반기
매출액	333,169	424,565	17.2	27.4
영업이익	47,409	66,265	26.7	39.8
세전이익	39,663	56,906	38.0	43.5

자료: KOTRA, ‘인도기업들의 경영성과’, 2007. 5. 31, 재구성.

또한 경제성장의 잠재적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공급 능력(supply capacity)의 주요 지표인 국내총저축(Gross Domestic Saving: GDS)은 GDP대비 1971년 15%, 1991년 25%에서 2004/05년에 32%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총저축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민간부문 총저축은 1991년대비 2005년에 9배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GFCF) 역시 GDP대비 91년에 24.4%에서 2004년에 28.4%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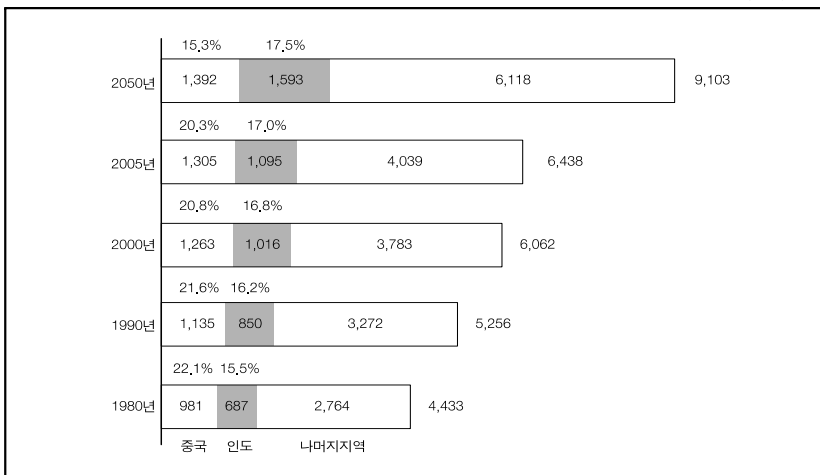
■ 그림 2-6. 인도의 국내총저축(GDS) 및 국내총고정자본형성(GFCF)의 GDP 대비 비중 ■
(단위: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둘째,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이다. 인도는 2006년에 11억 인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향후 30년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경에는 중국보다

■ 그림 2-7. 주요국의 인구구조 추이 ■
(단위: 백만명)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각 년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 The 2004 Revision, Volume III: Analytical Report.

더 많은 노동가용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를 통해 볼 때, 인도는 향후 세계 최대의 노동력 제공국가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인도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IT, NT, 물리 등 기초과학은 물론 응용과학 분야에 세계 최고의 과학 및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IT, 제약 등의 분야는 거대한 인력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인도 내에서 매년 배출되는 총 엔지니어링 학위자는 28만 4천명에 달하고, 이 중 IT 분야에 16만 4천 명 정도의 고급인력이 공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IT분야 인력이 총 15만 명 정도인 것을 비교해 보면 거대한 인력을 인도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인도의 엔지니어링 및 IT분야 노동 공급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03/04	2004/05
엔지니어링 졸업수	215	284
4년제 학위자	112	155
3년제 학위자	103	129
IT(컴퓨터, 전자, 통신) 인력수	141	165
4년제 IT 학위자	95	100
3년제 IT 학위자	46	65
IT 고용유입수	80	94
4년제 IT 졸업자	55	58
3년제 IT 졸업자	25	36
비 IT 전공자의 IT 분야 고용 유입수	40	40
기타 졸업자수	30	30
IT 노동인력 총 유입수	150	164

자료: NASSCOM Strategy Review 2005: The IT industry in India, 2005.

셋째, 풍부한 광물자원이다. 인도는 광활한 국토면적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부족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에 하나이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은 연료광물 4종, 금속류 11종, 비금속류 52종, 기타 광물 22 종 등 총 89종이며, 이중 금속류 광물은 철광석, 구리광, 크롬 및 아연 집적물, 금, 망간광, 보오크사이트, 납 등이 있다. 비금속류 광물로는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돌로마이트(dolomite),

바라이트(barytes), 카올린(kaolin), 석고, 인회암 등이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생산규모를 살펴보면, 운모류(Mica blocks 및 mica splitting) 1위, 크롬 3위, 석탄 및 갈탄 3위, 철광석 4위, 보오크사이트 및 망간광 각 6위, 알루미늄 10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

특히 인도의 내수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는 한편 풍부한 철강원료 개발을 통한 시장 확보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철강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향후 인도의 철강부문은 연간 5%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중국시장을 겨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넷째,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도 인도경제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인도와 과거 내정시대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도의 우수한 IT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확대, 1,000억 상당의 핵에너지 협력 등 미국의 대인도 협력은 인도경제 및 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대해 주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미국이 인도에 대하여 지지 및 협력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 및 대테러 방지 등 아시아 경제에서 인도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국간의 협력강화는 인도에 대한 투자위험을 줄여줌에 따라 대인도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직접투자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인도와 경제 협력을 당분간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인도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호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나. 경제발전 과제

인도가 8%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1) 인도 통상·투자 진출 안내서, 주인도대한미국대사관, 2007. p.163

되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인프라 부족, 노동시장 및 비즈니스 분야의 개혁부진 및 비즈니스 환경 열악, 제조업 분야의 숙련 및 전문인력 부족, 농업성장 미진, 여전히 거대한 빈곤층 상존 등이다.

첫째, 인프라 부족이다. 인프라가 매년 8%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도의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도정부는 전력, 도로, 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인프라 개선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도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특히 점차 경쟁적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의 인프라 수준의 차이는 매우 커서 인도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8. 중국과 인도간 인프라 비교(2002년 기준)

	중국(A)	인도(B)	A/B
GDP (10억 달러)	1,233	515	2.4
면적 (1,000평방 Km)	9,598	3,287	2.9
인구 (100만 명)	1,285	1,055	1.2
도로 총연장 (100만 Km)	116	3.3	35.2
항만 컨테이너 취급량 (1000TEU)	43,970	2,591	17.0
발전설비 (MW)	319,000	109,000	2.9
전화 가입자 (100만 명)	489	82	6.0
전화 보급률 (%)	38	8	4.8

자료: ICICI Bank.

인프라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전력과 도로 등 물류 인프라의 부족이다. 인도정부는 4차례의 걸친 전력법(Electricity Act)을 개정함은 물론 전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의 핵에너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전력 부족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 10차 5개년 계획기간(2002-2007) 동안 인도정부는 36,956MW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승인을 해주었지만, 이 중 23,250MW, 즉 승인액의 65%만이 실제로 전력 확보가 이루어졌다. 부족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욱 차질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골지역에서는 아직도 44% 가정만이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전력 공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10%의 전력 부족, 특히 피크타임에는 13%의 전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은 각 주(州)간 전력 공급방식의 차이에 의한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전(盜電)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빈민층들에 의한 도전을 방치하는 등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6만 5천 km, 주 도로 47만 km, 265만 km의 지방도로 등 인도는 비록 세계적인 규모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뭄바이-뽀네, 델리-노이다간 200여 km가 전부이다. 그리고 전체 도로수송의 40%를 총도로 연장길이의 2%밖에 안 되는 고속도로가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금의 사각도로 개선 작업을 추진하여 현재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완전개통에 이루기도 전에 개보수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장선을 가지고 있는 철도 역시 설립 후 150년 이상이 지남에 따라 고속화 및 화물수송 효율화를 위해 개보선 및 새로운 노선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항만 역시 제약적인 수용능력으로 혼잡이 매우 심한 편이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항만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으며, 항만 건설에 대한 비용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BOT 방식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현재 항만 효율성은 점차 개선되어 1999/2000년 5.1일이었던 평균 왕복시간(turnaround time)이 2005/06년에는 3.5일로 감소하였다. 또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시간당 평균 크레인 이동은 22회로 상대적으로 크레인 한대당 이동시

간도 상회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민간항공의 급속한 팽창으로 더욱 인도 공항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비효율적인 경영 및 시간 소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재 델리와 뭄바이 국제공항이 민간부문에 의해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향후 매 5년 단위로 4단계에 거쳐 20여년 동안 수행되며 이에 투자될 비용은 델리에 791억 루피, 뭄바이 공항에 613억 루피가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하이dra바드와 방갈로 공항 역시 새롭게 개선되고 있다. 인도공항 당국(Airport Authority of India)은 앞으로 인도 여객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35개 공항이 더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 및 비즈니스 분야의 개혁이 부진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인도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노동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조업에 즉시 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인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IT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IT 전문인력은 2008년 수요가 공급의 136%에 달하는 한편(McKinsey 2005), 이직률도 높아

■ 표 2-9. 주요 국가의 기업투자환경 비교 ■

지 표	인도	중국	한국
창업	116	126	97
허가취득	90	136	25
고용해고 여건	124	87	105
소유권 등기	116	24	64
융자여건	101	113	25
투자자 보호	29	100	87
납세	103	119	44
교역절차	130	48	16
폐업	118	59	13
종합순위	116	91	27

주: 각각의 수치는 국가별 순위를 나타내고 있음.

자료: 세계은행, 2005. Doing Business 2006.

표 2-10. 인도의 비관세장벽 유형

유 형	내 용
통관절차	• 통관의 지연 및 오류
수입규제	• 수입금지 품목, 수입선 지정 품목 등 운영
기술 장벽	•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인도 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 요구
보건 및 안전 규제	• 농산물 및 식품 수입시 까다로운 위생 및 식품위생 증명 요구
수출보조금	• 수출촉진 자본재에 대한 저관세 수입 제도 • 수출용 원자재 관세유예 제도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는 강력한 편이나 침해율이 높고 보호 메커니즘 역시 허술(특히, 의약품, 화공 제품 분야에서 선진국의 불만이 높음)
정부조달	• 소기업 고유품목 지정에 의한 입찰제한 • 중소기업에 대한 가격우대정책 • 자국기업 우대조치
투자 장벽	• 불공정 관행 등에 의한 투자진출 억제 • 엄격한 노동조합 보호 장치에 따른 고용 문제 •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과실송금 및 자금차입규제 • 현지부품 사용·수출의무 비율, 복잡하고 차등적인 세제

자료: 외교통상부, '2005년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 USTR, "200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일본 경제산업성, "2006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협회(NASSCOM) 역시 동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기술인력 및 전문인력 부족을 현지 경영활동의 주요 장애요인이며, 특히 인력난을 이용한 인도 노동자의 잦은 이직이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²⁾

또한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은 외국인 기업들이 대인도 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도의 기업투자 환경은 한국 27위, 중국 91위에 비해 매우 낮은 116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를 보장하고 1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근로자 해고 시 노조 동의가 필요하고 해고절차도 복잡하여 해고가 거

2) 이순철 외 (2006),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의 불가능한 경직적인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방면에 걸쳐 높은 비관세 장벽도 상존하고 있다. 통관지연, 국영기업 등 수입선 지정품목, 현지부품 사용비율 규제 등이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농업 성장이 부진에 따른 농촌 인구의 상대적인 빈곤의 심화가 인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의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노동 인구는 1991년 1억 8,530만 명에서 2001년에 2억 3,41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노동인력의 51%(2001년)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중 1억 2,730만 명만이 토지를 소유하여 경작을 하고 있고, 1억 680만 명은 토지 없이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표본조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농업분야의 1인당 매달 소비액은 503루피(2003년 기준 약 11달러)에 불과하며 대부분 토지나 가축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의 농부 중 약 81%가 2헥타르 이하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다수의 농부들이 빚을 지고 있는데 마하라슈트라주의 경우 전체 농업 인구의 55%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의 인구증가율은 인도 전체 인구증가율 2.1%보다 높은 2.5%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 계속되는 인구 증가는 농촌경제는 물론 인도경제 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전까지는 도 · 농간 빈곤 격차가 1.1~1.2%였으나 1991년 이후 1.4%를 상회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농촌의 상대적 빈곤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인도정부는 농업부문의 성장을 위해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동안(2007~12)에 매년 4%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인도의 농업생산 증가율은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신용대출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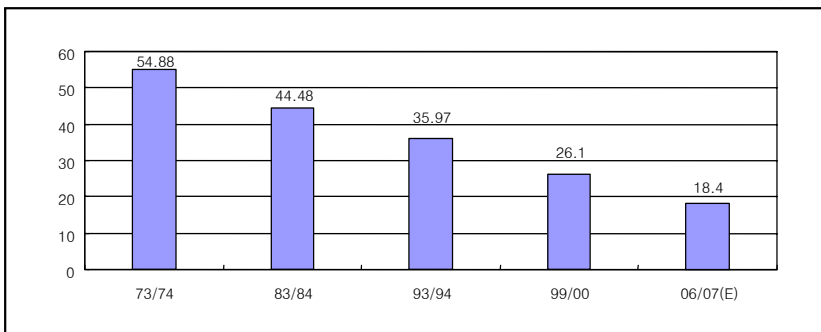
넷째, 거대한 빈곤층이 상존하다는 점이다. 인도 국민 중 한 달 소비 지출이 300~500루피에도 못 미치는 극빈층 비중은 1973/74년 전체 인구의 55%정도였으나, 1999년/2000년에는 26%, 2006/07년에는 18%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그

러나 아직까지 인구의 18%가 절대적인 극빈층으로 남아있어 인도경제의 발전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9/00년 기준 각 주별로 빈곤층이 40% 이상인 주는 Bihar(42.6%), Orissa(47.2%)가 있으며, 30% 이상이 빈곤층인 주는 Arunachal Pradesh(33.5%), Assam(36.1%), Madhya Pradesh(37.4%), Meghalaya(33.9%), Nagaland(32.7%), Sikkim(36.6%), Tripura(34.4%), Uttar Pradesh(31.2%)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주별로 빈곤층 형성이 다양함에 따라 경제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분배하는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그림 2-8. 인도의 인구대비 빈곤층(Poverty) 비중 ■

(단위: %)



자료: Planning Commission, Government of India, NCAER.

3. 인도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가. 무역구조

2002년부터 인도의 수출은 20% 이상 증가하고, 수입은 20~30%씩 증가하여, 2005년에 수출은 1,000억 달러대를 기록하고, 수입은 2004년에 1,000억 달러대를 기록하였다. 인도의 무역구조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폭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이 더 빨라 질수록 수입이 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도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업이 인도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속적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1. 인도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1990/91	18,145	9.2	24,072	13.4	-5,927
1991/92	17,865	-1.5	19,411	-19.4	-1,546
1992/93	18,437	3.7	21,882	12.7	-3,345
1993/94	22,237	20.0	23,306	6.5	-1,069
1994/95	26,330	18.4	28,654	22.9	-2,324
1995/96	31,797	20.8	36,678	28.0	-4,881
1996/97	33,470	5.3	39,132	6.7	-5,662
1997/98	35,006	4.6	41,484	6.0	-6,478
1998/99	33,219	-5.1	42,389	2.2	-9,170
1999/00	36,822	10.8	49,671	17.2	-12,848
2000/01	44,560	21.0	50,536	1.7	-5,976
2001/02	43,827	-1.7	51,413	1.7	-7,587
2002/03	52,719	20.3	61,412	19.5	-8,693
2003/04	63,843	21.1	78,150	27.3	-14,307
2004/05	80,672	26.4	106,630	36.4	-25,958
2005/06	100,606	24.7	140,237	31.5	-39,630
2006/07*	85,935	-14.6	125,345	-10.6	-39,392
2007/08*	105,751	23.1	176,353	40.7	-70,602

주: *는 추정치.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Government of India.

인도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 보석 및 귀금속, 유기화학물, 철강 및 강철, 면제품 등 1차 제품이다. 하지만 최근 의약, 기계 장비 등 2차 제품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제품은 석유관련 제품, 보석 및 귀금속,

다음으로는 유기화학물, 철강 및 강철, 면사 및 관련제품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 증가정도를 보면 보석 및 귀금속에서 석유제품으로 전환되면서 석유 관련 제품 수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2-12. 인도의 주요 수출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인도의 5대 수출품	2005/06	비중	2006/07(4-9월)	비중
석유제품: 원유 및 제품	11,866.6	11.5	10,079	16.5
보석 및 귀금속	15,857.9	15.4	7,795.3	12.7
유기화학물	3,281.53	4.7	2,828.1	4.6
철강 및 강철	2,717.34	3.7	2,646.1	4.3
면사 및 관련제품	2,437.69	5.2	2,602.9	4.2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Government of India.

인도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다음으로는 아랍 에미리트, 중국, 싱가포르, 영국 순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인도가 개도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면서 중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인도의 3, 4위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한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7%에서 14.9%로 낮아졌다.

표 2-13. 인도의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

인도의 5대 수출국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국	10895.8	20.7	11490.1	18.0	13765.8	16.5	17353.1	16.8	18866.2	14.9
UAE	3327.5	6.3	5125.6	8.0	7347.9	8.8	8591.8	8.3	12032.2	9.5
중국	1975.5	3.8	2955.1	4.6	5615.9	6.7	6759.1	6.6	8294.0	6.6
싱가포르	1421.6	2.7	2124.8	3.3	4000.6	4.8	5425.3	5.3	6068.9	4.8
영국	2496.4	4.7	3023.3	4.7	3681.1	4.4	5059.3	4.9	5618.0	4.5

자료: Export Import Data Bank, Department of Commerce, Government of India.

인도의 최고 수입품은 원유제품이며, 다음으로 정밀귀금속, 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유기화학 등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수입품은 경제성장에 따라 수요

가 팽창하고 있는 원유이며, 최근에 가장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는 제품은 기계류이다. 이러한 수입성향은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확대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이러한 제품의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4. 인도의 주요 수입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인도의 5대 수입품	2005/06	비중	2006/07(4~9월)	비중
원유 및 관련제품	50,310.1	33.7	31,820.1	36.4
정밀귀금속	20,690.5	13.9	10,557.2	12.1
보일러 및 기계류	13,915.0	9.3	8,763.6	8.1
전기 및 전자기기	11,898.8	8.0	7,039.1	3.5
유기화학	5,144.2	3.4	3,041.5	3.2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Government of India.

인도는 주로 미국 중심의 수입형태에서 최근 중국으로부터 제조업 관련 제품을 집중적으로 수입하여 수입국 순위가 바뀌었다. 2003년까지 인도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이었으나, 점차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원유 수입의 증가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표 2-15. 인도의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인도의 5대 수입국	2005/06	비중	2006/07(4~9월)	비중
중국	10,868.1	7.3	7,991.9	9.1
사우디아라비아	1,632.3	1.1	7,193.4	8.2
미국	9,454.7	6.3	4,422.4	5.8
UAE	4,354.1	2.9	3,933.6	5.1
스위스	6,666.8	4.3	3,891.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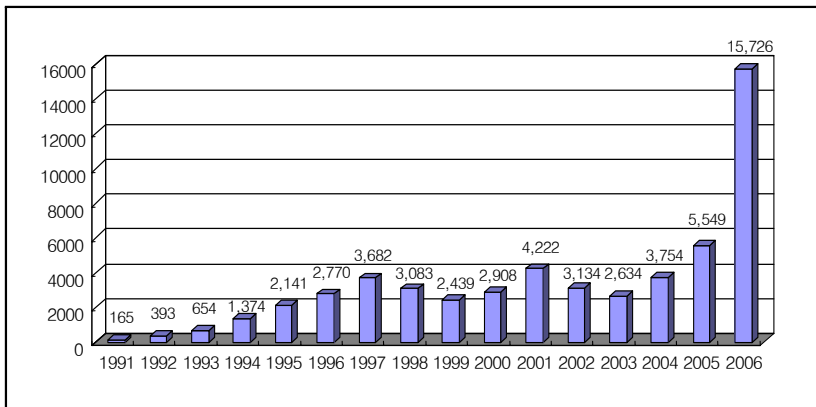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Government of India.

나. 직접투자 추이

1991년 이전에 인도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FDI)는 거의 없었으나 1991년 이후 개방 및 개혁정책이 추진되면서 FDI 유입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2005년 FDI 유입액은 5,549억 달러로 1992년 393억 달러에서 1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무려 18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그림 2-9. 인도의 FDI 유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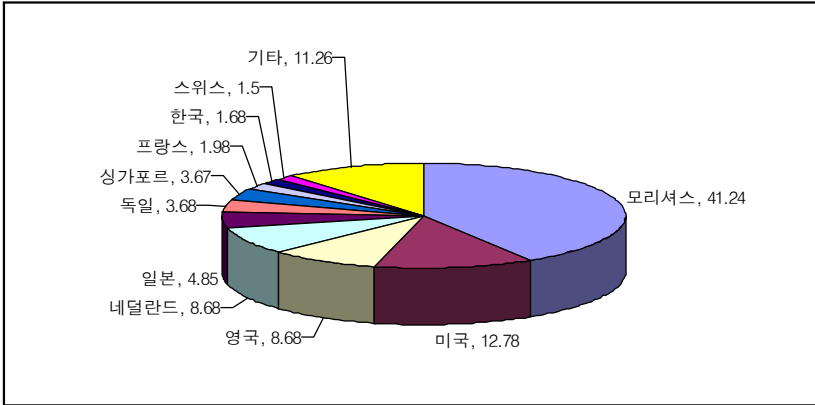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Industry and Commerce, Government of India.

인도에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모리셔스이지만, 이는 모리셔스와 인도와는 조세면세(Tax Heaven)조약에 의해 다국적 기업들이 모리셔스를 거쳐 인도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다음으로 영국이다. 최근에 일본의 투자가 급격히 상승하여 미국, 영국, 네덜란드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대 인도 투자는 9위이다.

그림 2-10. 대인도 주요 FDI 진출국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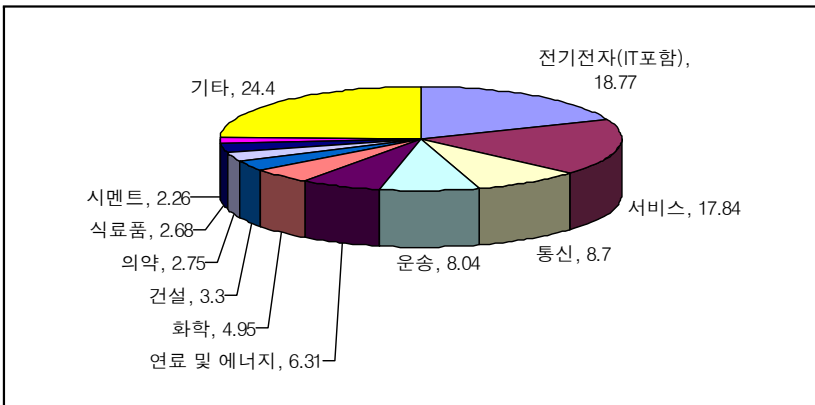


주: 1991.8~2007.3 누적치 기준

인도에 가장 많은 FDI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IT 소프트웨어, IT응용분야(IT Enabled Service, ITES) 등 IT 분야가 포함된 전기전자분야이며, 다음으로는 서비스 분야이다. 그 외 통신, 운송, 연료 및 에너지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11. 주요 FDI 진출 분야 현황

(단위: %)



주: 1991.8~2007.3 누적치 기준.

자료: Government of India.

최근 인도는 FDI 유입만이 아니라 ODI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2006/07년간 인도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75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2007년 인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5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기업들은 해외 M&A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인도 기업의 해외 M&A건수는 2001년 37건에서 2006년에는 17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2006년 타타 그룹의 타타 차(TaTa Tea)는 미국의 에너지 음료업체인 글라소(Glaceau)를 6억 7,700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타타철강(Tata Steel)이 영국의 코러스(Corus)를 136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달코(Hindalco) 그룹도 노벨리스(Novelis)를 60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다. 대외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1) 통상정책 개요

1947년 독립 이후 네루 모델에 따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했던 인도는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3~5%의 고질적인 힌두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도는 1980년대 부분적인 개방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평균 관세가 100%에 육박하였고 수입에 엄격한 규제를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과도한 보호정책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정부재정 고갈 등으로 1991년 금융위기를 맞게 되자, 인도 정부는 인도경제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한편 무역과 투자의 점진적인 자유화를 통해 세계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개방적인 통상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인도는 1991년 개방경제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도 국내 산업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변국과 먼저 점진적으로 교역장벽을 완화하는 소극적인 통상정책을 실시하였다. 인도는 1991년부터 각종 수출 진흥 조치를 도입·운용하는 한편, 수입관세 인하, 수입허가제 철폐, 수입수량제한(QR) 해제 등을 통해 대외무역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인도정부의 수출진

홍 정책은 절차 단순화, 거래비용 절감, 수출용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부담의 완화(관세감면 및 환급), 농업 · 수공업 · 보석류 · 신발 · 피혁 등 중점분야의 선정 · 지원 등을 통해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인도는 국제사회의 수입 자유화 요구에 대하여 2001년 4월 수입수량 규제를 완전 철폐하였다. 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인도 주요 공산품의 최고 관세율(peak rate)은 2005년 20%에서 15%로 인하된 후, 2006년 다시 12.5%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수입제품에는 기본수입관세(Basic duty) 외에 16%의 부가세(additional duty), 2004년부터 도입된 2%의 교육세(Educational cess)가 부과되고 있어 많은 제조업 품목의 실질수입관세율이 34%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관세제도를 통하여 인도는 세계적으로 여전히 관세장벽이 높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각종 수입개방 조치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등 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7년 6월 까지 12년간 인도의 반덤핑조사 실시 건수는 모두 474건으로 기록하여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덤핑국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도의 반덤핑 실시건수는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미국과 EU를 제쳤으며, 실제 반덤핑조치를 실시한 건수에서도 2002년에 미국과 EU를 제쳤으며 2007년 6월 기준 총 347건으로 미국(242건), EU(237건) 등 2, 3위국보다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³⁾

2) 인도의 무역자유화 정책 추이와 전망

인도정부는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선진국의 시장개방 확대와 개도국 우대조치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자협상에서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FTA 체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인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 소수의 주변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3) WTO, 2007, 『Trade Policy Review: India』

소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 인도는 1985년 남아시아 7개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의 협력체인 남아시아경제협력연합(SAARC)을 결성하고 1995년 특혜무역협정인 SAPTA를 발족하는 등 역내 무역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인도의 FTA는 전무하였으며,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등 인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과 특혜무역협정(PTA) 등을 기반으로 부분적인 경제협력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FTA를 통한 지역통합 움직임을 가속화함에 따라 인도 정부도 고립을 탈피하고, 자국의 교역 및 투자유치 증대, 인접국 및 주요국과의 경제관계 강화 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협력 대상국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1992년 라오총리가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실시하면서 ASEAN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서 인도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인도의 동방정책은 세계적인 지역 경제통합으로 인한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각국의 FTA 확대에 의한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및 세력구도 재편에 대응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남아시아 7개국 모두가 참여한 특혜무역협정인 SAPTA(1995)를 발족하고 BIMST-EC(1997), BOBCOM(1997)과 같이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지역협력연합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스리랑카와 인도 최초의 FTA(인-스리랑카 FTA)도 발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는 비슷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인접국(SAFTA, 스리랑카, BIMSTEC 등)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다소 소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였다.

인도 FTA 정책에 전환점이 된 것은 2000년 클린턴 美 대통령의 인도 방문과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의 조력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한 인도가 서방세계의 경제체제가 철회되는 한편 2003년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부터였다. 2001년부터 인도는 경제발전단계가 인도보다 다소 앞선 나라(태국, 싱가포르 등)를 상대로 급격한 수입 급증은 견제하는 동시에 투자 유치 확대를 주목적으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2001년부터 ASEAN 중에서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던 태국과 역외국으로는 처음으로 전

격적인 FTA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양국간 FTA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간의 공동연구 및 협상을 통하여 2003년에 양국은 FTA 기본협정문에 서명하였고, 우선적으로 82개 품목에 대하여 조기관세자유화 조치(EHS)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싱가포르와도 FTA 협상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2005년 6월 협상을 완료하고 두 달 후인 2005년 8월부터 2009년까지 5단계로 나누어 관세철폐 또는 인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한편 SAARC 국가들간의 특혜무역협정 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를 확대하여 2006년 1월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를 출범하고 이후 10년간 두 단계에 걸친 관세인하를 통해 2016년까지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이후 인도의 FTA 대상국은 발전단계 및 경제 규모가 인도보다 높은 국가들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한·인도경제동반자 협정(CEPA)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과의 FTA 협상은 2005년 공동연구 완료 후 2006년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늦어도 2008년 초까지 협상을 마칠 예정이다. 일본·인도경제협력협정(CECA)은 2006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 9월 3차 협상을 마쳤다. 인도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후생효과가 높아지는 한편⁴⁾ 최근 일본이 인도에 2010년까지 화물전용열차선 건설, 델리-뭄바이 회랑 건설 등 27개 FDI 사업에 55억 달러 이상 투자할 의사를 발표한 이후 일본과의 FTA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ASEAN과의 FTA는 네거티브 리스트와 민감품목 선정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 2007년 1월로 예정된 발효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인-ASEAN FTA 협상은 인도의 네거티브 품목 축소와 서비스 및 투자분야의 포함여부가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가 팜오일, 커피, 고추 등을 민감품목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경우 인도는 ASEAN과의 FTA 협상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3년 6월 인도 바즈파이 前총리의 중국 방문시 양국간 경제협력을 추진하

4) 2006년 KIEP오늘의 세계경제 06-04호 “한 · 인도 CEPA에 임하는 인도의 FTA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향” 참고.

기로 합의하고, 2004년 4월 중국원자바오 총리의 인도 방문시 FTA 체결 타당성 검토연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중국과의 FTA는 공동연구만 두 차례 실시하였을 뿐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 정상회담에서도 FTA 추진에 대한 합의는 없이 양자 교역확대라는 원론적인 내용만 확인하였다.

그밖에도 인도가 FT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은 매우 다양하다. 인도는 현재 EU와 10월에 2차 협상을 마쳤으며 육류, 밀, 낙농제품, 유제품 등 약 10% 품목을 양허예외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인도는 모리셔스와도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들과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협의 중에 있다. 또한 BIMSTEC, GCC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MERCOSUR와는 2005년 체결한 PTA를 FTA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추구하며 3대륙 대표로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가 참여중인 IBSA에서도 FTA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표 2-16. 인도의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

	자유무역협정(FTA)
주요내용	역내 무역자유화, 역외 독자적 관세주권
기체결	스리랑카(합의: 1998/발효: 2000) 태국(합의: 2003/82개 품목 조기실시계획 시행, 발효: 미정) 싱가포르(합의: 2005. 6/발효: 2005. 8) SAFTA(합의: 1995/발효: 2006. 1부터 단계적 발효, 최종합의: 2016 예정)
협상중	ASEAN(합의: 2002/종결: 미정) 방글라데시(합의:2002/종결: 미정) 한국, 일본, EU, 모리셔스
검토중	미국, 중국, 칠레,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이집트, MERCOSUR, IBSA, GCC

자료: 정부 발표 및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현재 인도와 활발하게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 일본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한국과 일본은 인도와 무역 및 투자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도는 동방정책의 주요 대상국인 한·중·일에 대하여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한국과는 조기에 CEPA 협상을 마무리를 하고, 일본과 집중적으로 CECA 협상을 추진하여 양국 모두 2008년에는 협상을 타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유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과는 두 차례에 걸쳐 FTA 타당성을 조사하는 공동연구만 추진하였을 뿐 아직까지 FTA 협상을 개시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도 급증하고 있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FTA를 실시할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경제적인 측면과 중국 견제라는 정치적 측면이 함께 고려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는 FTA와는 성격이 다른 지역경제협력이라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태국과의 조기자유화가 국내 산업 및 양자 교역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아 국내 산업계 및 정계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FTA를 비롯한 무역자유화 노력에 일정 정도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내 부적으로 FTA의 반감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인도의 FTA 정책은 제조업 제품의 개방보다는 투자유치는 물론 인도가 강점을 지닌 분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를 추진하는 인도 정부의 전략도 상품 부분의 자유화 수준은 최대한 낮추는 반면 인도의 강점분야인 인력인동, IT 분야의 협력, 투자협력 강화 등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강점분야를 인도의 FTA 정책의 주요 추진 분야로 선정하고, 모든 협상에서 동 분야가 FTA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 협상대상국으로부터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ASEAN과의 FTA 협상이 위와 같은 인도 FTA의 새로움 모델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협상이 마무리된 후 양허품목 수를 놓고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다. 즉 400여개의 민감품

목을 지정한 인도는 더 이상의 품목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한 후 ASEAN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서 협상 타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인도는 이처럼 서비스와 투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파트너 국가로 주변국 및 지역에서 벗어나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EU와 모리셔스뿐만 아니라 미국, 칠레, 이집트, 호주, MERCOSUR, GCC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협상국과의 FTA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추진 될 전망이다. 즉 인도 정부는 인도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FTA, CEPA, 또는 CEPA 등 다양한 무역자유화협정을 추진하면서도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투자협정이나 단순한 특혜무역협정(PTA) 등에 국한한 협력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과 같은 국가와는 특별히 FTA를 추진하지 않고 인력이 동 및 IT 분야 협력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FTA를 제안한 방글라데시와도 PTA 이상의 협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1.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협력

가. 무역

1) 현황

한국과 인도의 교역은 지난 10여 년간 20~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넘어선 양국 교역은 2004년 55억 달러, 2005년 67억 달러, 2006년에는 9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연평균 20%를 넘는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 전체 교역량의 1%에 미치지 못하였던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은 2003년부터 전체 교역량의 1%를 넘어선 1.1%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2005년 전체 교역량의 1.2%, 2006년 1.6%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양국 교역의 급성장에는 대인도 수출이 기폭제가 되었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비중은 1993년 2.2%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2년 까지 비중이 점차 축소됨으로써 인도는 한국의 20대 수출대상국에 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3년 대인도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106%)로 한국의 총수출 중 인도의 비중은 약 1.5%를 기록하였으며 인도는 15번째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3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함으로써 인도는 한국이 10억 달러 이

상 수출한 31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04년 27.3%(36억 달러), 2005년 26.6%(6억 달러), 2006년 20.3%(55억 달러)로 매년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 5년간 13억 달러에서 55억 달러로 약 4.2배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인도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시장점유율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00년 1.6%였던 한국 상품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2.2%(2001) → 2.5%(2002) → 3.6%(2003)로 증가함으로써 2003년에는 미국(6.9%), 중국(4.9%) 등에 이어 9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빠른 속도로 인도시장을 잠식하는 동시에 이란,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산유국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이 급증하면서 한국 상품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2004년과 2005년 각각 3.2%, 3.1%로 떨어지면서 2006년에는 시장점유율 2.7%, 총 14위로 하락했다.

급증하는 수출과 달리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2002년 0.8%, 2003년 0.7%로 2003년까지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인도 수입은 2004년 5% 증가한 19억 달러, 2005년 14.2% 증가한 21억 달러에서 2006년 무려 72.4%가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했고, 2007년 상반기에도 5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20~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과 인도의 총 교역규모 역시 해마다 20~30% 사이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규모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도는 2007년 한국통계 기준으

표 3-1. 최근 5년간 양국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증감율	2006	증감율	2007.1~5	증감율
총교역	4,086	5,482	6,710	22.4	8,994	34.0	4,364	23.1
수출	2,853	3,632	4,598	26.6	5,533	20.3	2,486	9.7
수입	1,233	1,850	2,112	14.2	3,461	72.4	1,878	47.0
수이지	1,620	1,782	2,486	39.5	1,892	△23.9	608	△38.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로 한국의 11위 수출국, 18위 수입국, 16위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한편 한국은 2006년 인도통계 기준으로 인도의 14위 수출국과 14위 수입국으로 전년대비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

한편 한국의 대인도 무역수지는 1991년 1,600만 달러, 1992년 3,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1993년부터 14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한국의 대인도 무역흑자는 전체 무역흑자의 10.8%, 대인도 수출액의 56.8%인 25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다만 2006년부터 인도로부터의 수입 확대폭이 수출증가율을 앞서고 있으며, 인도의 경제규모가 아직까지 ASEAN의 1/10에 해당할 만큼 작은 것을 고려할 때, 대인도 교역으로부터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중국, 일본, 미국 등 5대 수출입 대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까이 될 만큼 특정국가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도로 교역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양국의 교역은 매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대상 품목을 비교해보면 매우 제한적인 부문에서만 수출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양국의 교역품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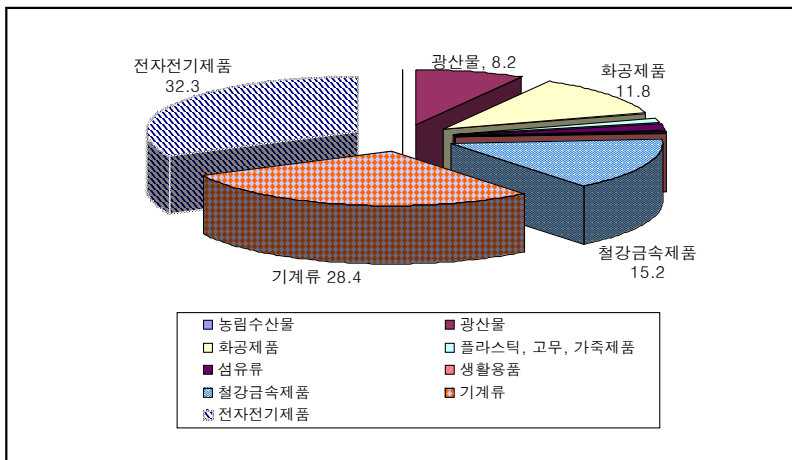
■ 표 3-2. 한국과 인도의 수출입 상품군(2006) ■

HS 4단위	전 세계 교역품목	한국의 수출		한국의 수입		인도의 수출	인도의 수입
		전 세계	대인도	전 세계	대인도	전 세계	전 세계
상품군	1,242	1,186	638	1,228	597	1,209	1,205

위 [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양국 교역의 대상은 제한적이다. 한국과 인도의 전세계 수출입은 HS 4단위 수준에서 1,200여개 품목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국의 교역은 약 600여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대인도 수출을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대인도 수출품은 대부분이 제조업 제품으로 2006

년의 경우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서 제조업 부문이 전체 수출의 약 95%를 차지하였다. 각 산업별 수출비중은 전기전자제품 32.3%, 기계류 28.4%, 철강금속 15.2%, 화공품 11.8%, 광산물 8.24% 등으로 전자·기계류가 전체 수출의 약 2/3에 달하고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림 3-1. 한국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비중(2006) ■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판, 석유제품(유탄유, 경유), 합성수지 등이다. 휴대폰과 무선전화기⁵⁾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은 2003년부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자동차 관련제품의 수출도 현지진출기업의 완성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2억 5,300만 달러) 수요의 증가에 기인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수입주중품목은 석유제품(나프타), 면사, 대두박, 철광, 고철, 아연광 등이다. 이처럼 양국간 교역구조는 한국이 휴대전화, 자동차부품 등 내구소비재

5) 2003년 휴대폰의 대인도 수출은 전년대비 889.6% 증가한 6억 4,6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기타 무선전화기는 9,500만 달러의 수출로 전년대비 352.3% 증가하였다.

를 수출하고 인도에서 천연섬유, 석유 및 광물 등 1차산품을 위주로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인도는 특히 철광석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주요 자원 공급지로서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표 3-3. 주요 교역품목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별	2006		2007.1~5		품목별	2006		2007.1~5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전체	5,533	20.3	2,486	9.7	전체	3,641	72.4	1,878	47.0
1	자동차부품	626	46.6	377	53.7	석유제품	1,752	118.1	908	128.3
2	철강판	494	37.1	246	36.3	식물성물질	181	63.9	152	32.1
3	무선통신기기	1,237	5.8	218	-69.3	천연섬유사	246	11.3	88	-15.7
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43	-76.9	160	6,326.1	기타금속광물	118	61.5	87	910.4
5	석유제품	423	91.4	143	24.5	합금철선철 및 고철	95	-13.3	77	105.6
6	합성수지	183	-18.6	82	10.2	철광	85	73.2	72	74.9
7	금형	5	-9.7	80	549.1	아연광	216	483.7	41	-78.2
8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76	147.4	76	-9.7	기초유분	42	746.4	38	224.5
9	기타기계류	163	105.9	70	-8.1	농약 및 의약품	38	-0.5	30	66.5
10	기타 석유화학제품	88	32.4	65	69.9	정밀화학원료	77	16.2	30	-5.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주: MTI 3단위 기준.

인도경제의 지속성장과 이에 따른 인도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및 수입 수요 증가로 자본재,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대기업(현대자동차, 삼성전자, POSCO)의 현지 투자와 연계된 부품 및 기자재 수출, 대형 플랜트 수주에 따른 설비 수출의 비중이 큰 바, 향후 한국 진출기업의 투자 및 플랜트 수주 확대에 따른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도는 아직 저가품 위주의

시장인 관계로 향후 휴대전화, 컴퓨터 등 소비재 분야에서는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예로서 휴대전화기의 경우 중국산 저가품(Nokia 중국 공장 등)의 공세로 우리제품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3년 46%에서 2004년 34%로 하락한바 있다.

2) 인도의 對한국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한국이 인도산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관세는 전품목 기준으로 실행세율이 11.2%이며 농산품을 제외하면 6.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인도는 아직까지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산 수출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2004년 현재 인도의 실행관세율은 평균 29.1%⁶⁾에 달하여 한국에 비해 17.9% 포인트가 높으며, 한국의 주력 수출분야인 비농산품만 고려하면 무려 21.2% 포인트가 높다.

표 3-4. 한국과 인도의 관세율 비교

국 명	단순평균 양허세율(%) 최종 기준			단순평균 실행세율(%) (한국: 2006년, 인도: 2005년 기준)		
	전품목	농산품	비농산품	전품목	농산품	비농산품
한 국	17.0	59.3	10.1	12.1	47.8	6.6
인 도	49.2	114.2	34.9	19.2	37.6	16.4

자료: UNCTAD, TRAINS online service.

따라서 한·인도CEPA 협상에서 관세철폐(0%) 및 인하(0~5%까지 인하) 품목이 전체(품목 수 및 교역액 기준) 80%에 달할 경우, 2004년 기준 20% 포인트 이상의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인도는 양허세율(49.8%)과 실행세율(29.1%)의 차이가 크다.

표 3-5. 산업별 실행관세율(%)

산 업	인도 (2005)	한국 (2006)
농산물	37,6	47,8
비농산물	16,4	6,6
수산물	30,0	16,1
광물 및 금속	15,4	4,8
석유	14,0	5,1
목재 및 펄프	13,5	2,4
섬유	20,2	9,2
의류	22,4	12,6
가죽 및 신발류 등	15,4	7,9
화학제품	15,0	5,8
수송기계	24,8	5,4
기계	14,3	6,0
전자	12,3	6,0
기타제조업	13,9	6,4
평균	19,2	12,1

자료: UNCTAD, TRAINS online service.

높은 관세 외에 인도 정부는 빈번한 반덤핑 제소 활용으로 한국기업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적으로도 반덤핑 규제를 가장 많이 남용하고 반덤핑 조사 등 제도운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인도는 현재 세계 2위의 반덤핑 제소국이며, 특히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건수가 많다.

표 3-6. 인도의 對한국 수입 규제 현황(2006년 말 현재) Ⅱ

규제 형태	품목	제소 년도	규제 확정일
반덤핑관세	NBR 합성수지	1996	1997. 7
	아크릴산 섬유	1996	1997. 10
	SBR(합성고무)	1998	1999. 6
	시아화나트륨	1999	2000. 3
	EPDM	1999	2000. 8
	POY(부분연신사)	2001	2002. 8
	PIB(Poly Iso Butylene)	2001	2001. 12
	가성소다	2001	2003. 8
	수황화나트륨	2002	2003. 12
	폴리올	2002	2004. 10
	탄산칼륨	2002	2004. 1
	냉연압연물	2002	2003. 7
	염화메틸렌	2003	2004. 8
	PG(Propylene Glycol)	2003	2004. 8
긴급수입제한	녹말류	2004	2005. 2
조사 중	폴리에스터 안(PFY)	2005.6	-
	나일론 필라멘트사(NFY)	2005.7	-

나.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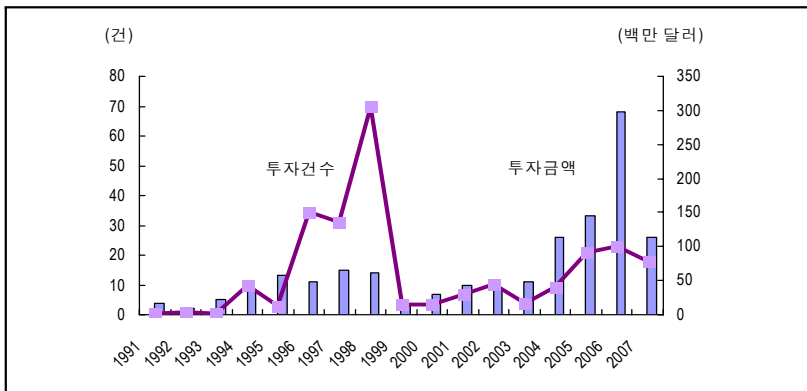
1) 투자규모

2007년 3월 말 현재 인도는 한국의 14대 해외투자국이며 한국은 인도의 9대 외국인 직접투자국이다. 1991년부터 2007년 3월까지 한국의 대인도 누적 투자 신고건수는 271건이고 투자신고금액은 10억 8,941만 달러에 이른다.⁷⁾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2004년

7) 이 수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에서 인용하였다. 인도와 한국의 FDI 집계 기준이 상이한 관계로 투자금액에 대한 양국의 발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참고로 인도측 수치는 인도 상공부 산업 정책진흥과(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과 2005년 들어 對인도 투자는 전년대비 2.4배와 2.2배 각각 증가하였으며, 2006년 9.4% 증가에 이어 2007년 1/4분기에만 전년 총투자금액의 79%에 달하는 투자를 실현하는 등 우리기업들의 對인도 투자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인도 투자의 급증은 최근 경제의 고성장과 더불어 거대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시장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 그림 3-2. 대인도 직접투자현황 ■



주: 2007년은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2007.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부터 과감한 투자와 이후 지속적인 현지화 노력을 통해 인도에서 높은 인지도와 함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 최신 기술과 제품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도 소비자층의 구매력을 감안한 가격, 디자인, 이미지 등을 통해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진출한 기업들의 연구, 생산기지 확대 등 투자규모 확대와 더불어 사업영역의 확장, 신규 투자의 증가 등으로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당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991년 이후 인도 정부의 국가별 FDI 투자액은 모리셔스 181억 4,700만 달러 (41.2%), 미국 58억 9,400만 달러 (12.8%), 영국 38억 5,700만 달러 (8.7%) 등으로 상위 3개국이 인도 외국인투자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실투자액은 8억 2,300만 달러로 유입액 기준 9위이며 인도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표 3-7. 인도의 국가별 FDI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

	1991~03	2004	2005	2006	누적합계	비중
모리셔스	567	1,129	2,570	6,363	18,147	41.2
미국	360	669	502	856	5,894	12.8
영국	167	101	266	1,878	3,857	8.7
네덜란드	489	267	76	644	2,638	5.9
일본	78	126	208	85	2,209	4.9
독일	81	145	303	120	1,702	3.7
싱가포르	37	184	275	578	1,628	3.7
프랑스	38	117	18	117	895	2.0
한국	24	35	60	71	823	1.7
스위스	45	77	96	56	692	1.5
전체	2,634	3,754	4,549	15,726	54,628	100.0

자료: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기업 규모로는 대기업과 계열사를 중심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말 현재 기업규모별로 본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대기업 계열사가 50여개로 금액으로는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기업 협력업체와 기타 독립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총 107개사가 진출하여 금액으로는 10%를 조금 초과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가기준으로 제조업 투자는 141건, 7억 5천만 달러로 대인도 전체 투자에서 투자건수로는 73.8%, 금액으로는 84.6%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인도 투자가 아직 초기 단계로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 중심의 투자에 의

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도소매업이 11건, 1억 77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20건, 2,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외 여타업종의 대인도 투자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표 3-8. 업종별 대인도 직접투자 현황(2007년 3월말 기준 누적치) (단위: 건수, 백만 달러)

업 종		총 계	농림어업	광 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창고업	통신업	숙박 음식점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신고	건수	302	2	1	211	14	22	6	2	6	36	2
건수	비율	100.0	0.7	0.3	70.1	4.5	6.7	1.8	0.9	2.2	12.1	0.4
신고	금액	1,668,982	1,044	667	1,447,171	16,793	132,985	8,598	1,205	818	57,171	2,530
금액	비율	100.0	0.1	0.0	87.0	0.4	8.6	0.4	0.0	0.0	3.4	0.1
투자	건수	271	2	0	198	12	18	5	2	5	28	1
건수	비율	100.0	1.0	0.0	73.8	4.7	5.8	1.0	1.0	2.1	10.5	0.0
투자	금액	1,089,405	1,043	0	934,747	10,003	110,400	2,038	1,205	408	27,961	1,600
금액	비율	100.0	0.1	0.0	86.6	0.3	12.4	0.0	0.0	0.0	2.8	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아직까지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도소매업, 건설업, 광업 및 부동산업 등 업종별로 다양하게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실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업의 경우에도 최근 투자 신고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인도에 상가 및 주거지 개발붐이 조성되는 한편 인도 정부가 부동산 부문 외국인 투자규정을 완화하고 있어 부동산업은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유력 투자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인도 진출은 거대 인도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KIEP가 2006년 인도에 진출한 65개의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현지시장의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값싼 현지 노동력을 이용하는 ‘시장추구형’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전체매출중 현지판매가 48%, 수출이 52%(2005년말 기준)로 인도를

제3국 진출의 제조기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999년부터 매년 건수는 10건 이상, 금액으로는 60~80만 달러 정도가 유입되던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소규모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인도 기업들의 한국 진출과 특히 인도 대기업들의 한국 기업 인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3월 인도의 타타그룹(Tata Group) 계열사인 타타모터스(Tata Motors)가 대우상용차(Daewoo Commercial Vehicle Co, DWCV)를 5,123만 달러에 인수했고, 기타 계열사들의 철강, 금융분야 한국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표 3-9. 인도의 對한국 직접투자추이(실투자 기준)

(단위: 천 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누적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6	765	16	697	30	52,645	68	3,735	46	2,512	93	5,792	339	70,978
제조업	1	85	2	86	1	51,272					3	862	18	53,578
서비스업	15	681	14	611	29	1,373	68	3,735	46	2,512	90	4,930	320	17,342
전기·가스 ·수도건설	-	-	-	-	-	-	-	-	-	-	-	-	1	57

주: 2007년 통계는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임.

누적합계는 1962년부터 2007년 2사분기까지의 건수 및 금액의 총합계임.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cie.go.kr>).

또한 최근 인도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IT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출이 빠르게 이루어짐으로써 양국간 투자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IT서비스 업체인 타타컨설팅서비스(Tata Consultancy Services), 인포시스(Infosys), 사티암 등이 국내에 진출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인도진출 한국기업 현황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1990년대말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우리 대기업이 인도에 처음 진출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1996~98년 3년간 5억 4,400만 달러), 이후 이들 대기업의 증설투자 및 협력업체의 진출, 롯데제과, LG화학, POSCO 등 기타 대기업의 투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기업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세탁기(46%)와 에어컨(56%) 등 백색가전은 1위이며, 자동차는 21%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8월 기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는 지역별로 텔리 약 110개사, 첸나이 62개사, 뭄바이·뭄네 32개사, 방갈로 10개사 등 약 220개사이며, 최근 진출업체는 주로 LG전자 및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텔리 인근과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첸나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지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LG전자나 삼성전자는 현지인의 수요, 문화 및 제도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⁸⁾ 또한 자동차분야에서 소형차 부문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여름에 장기간의 우기를 대비하여 차량바닥을 코팅하고, 도로사정이 열악한 것을 고려하여 차체를 높임과 동시에 브레이크와 경적(horn) 성능을 높이는 현지화전략을 추구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문철우 외(2005)에서도 인도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진출 전략의 적합성보다는 진출 후 현지적응능력이 더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도와 한국간의 비즈니스 격차가 매우 커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여 더 많은 현지화 적응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의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대기업과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가 대부분이고 중소기업은 소수이나, 다만 최근 중소기업의 인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다양한 규모의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막대한 시장 잠재력에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 과도한 관료적 규

8) 日本總合研究所, 2005

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상관행의 차이 등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다.

3) 진출기업 지원현황

한국 정부는 현지공관 및 KOTRA,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한 진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사관 및 영사관(뭄바이)에서 진출기업을 위하여 투자기업관련 법률, 정책, 제도 등 정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관에서는 매년 「인도 통상 · 투자 진출 안내서」를 발간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KOTRA는 뉴델리, 첸나이, 뭄바이 등 3개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시장 개척단, 투자유치 및 진출지원, 시장 정보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및 수출보험공사는 인도시장조사, 수출입업자 신용조사, 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각 2007년 3월과 7월에 뉴델리 현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도 2006년 11월 델리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중소기업의 인도진출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관들 외에 기타 유관정부기관이나 경제단체의 지원은 부재하여 부족한 정보입수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 해소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중국진출 기업들이 대한상의, 무역협회, 전경련 등 각종 경제단체와 해외IT지원센터, 표준협회, 전자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Copyright Center 등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정부 및 관련기관 제공서비스 자체도 산발성, 중복성, 접근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진출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⁹⁾

이에 현재 양국 정부는 양자간 협력채널 확대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및 제

9) KIEP(2006년)의 연구결과 한국기업들의 현지진출시 정보입수처는 기 진출업체(44.6%), 지인과 인도 현지기관(각각 7.5%), 정부 등 지원기관(6.6%), 컨설팅 회사(4.5%)의 순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이 기업들의 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투자촉진협의회를, 외교통상부는 경제공동위를 인도의 상무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는 인도의 재무부와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간 채널을 활용한 지원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나아가 한국정부는 현재 현지공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연계된 종합 진출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지원기관 확대 설립 등 협력 시스템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2.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가. 경제협력 현황

1)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추진

2006년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추진을 개시한 이래 양국은 2007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JTF 회의를 개최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분야의 자유화 및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 협정은 2007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약 2개월 간격으로 양국 대표단(JTF: Joint Task Force)이 교대로 방문, 협상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년 3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JTF 제1차 회의¹⁰⁾에서는 협상추진 세부일정,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정문·양허안의 교환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인 협상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제2차 회의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상품 자유화의 방식 및 정도, 비관세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기본원칙 등 협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3차 회의는 7월 뉴델리에서

10) 1차회의시 한국측은 김종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인도측은 S. N. Menon 상공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였으며, 이후 2차회의부터는 한국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였고, 인도측은 상공부의 차관보 및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개최되었으며, 양자 세이프가드,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조항 합의문안 마련, 서비스 · 투자 및 협력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JTF회의에서는 투자 자유화 방식, 원산지 일반기준, 서비스 분야 양허 · 유보안 협의, 무역 · 투자진흥 · 섬유 등 협정문 초안 마련 등이 진행되었다.

2007년 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5차 JTF회의에서는 상품분야 양허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 도출, 투자분야 네거티브 자유화방식 채택에 대한 합의 등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어, 합의된 기한내(금년말) 협상타결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JTF회의에서는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미진한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개방 요청(Request) 등을 진행하여 협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2007년 12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9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 타결에 대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관련 지원제도 및 협정체결 현황

가) 세관분야 협력 현황

한국과 인도는 1994년 이후 관세분야 협력을 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2006년 2월 인도 대통령 방한시 동 협정에 서명을 하였다. 동 협정은 관세관련 정보교환, 관세법 위반 범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 등에 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방한시 노무현 대통령은 IT기술을 적용한 한국의 신속한 통관시스템을 소개하고, 양국간 세관협력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에 2006년 하반기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를 예정하였으나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최근에 이에 대한 재협상 준비를 하고 있다.

나)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 현황

2005년 11월 한국과 인도의 에너지장관 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한-인도 에너지분야의 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에너지 유형별 주요 MOU는 아래 [표

3-10]과 같다.

표 3-10. 한-인도 주요 에너지 협약

분야별 MOU	한국측 주관기관	인도측 주관기관
석유가스 포괄적 협력 MOU	산자부	석유·천연가스부
석유전락비축 협력 MOU	석유공사	석유산업개발위원회
석유자원개발 협력 MOU	석유공사	국영석유공사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술협력 MOU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단	DGH
수소·CNG 협력 MOU	가스공사	IOC R&D 센터
수소·연료전지 기술협력 MOU	KIST	IOC R&D 센터

또한 한-인도간 제3국 자원개발사업 공동참여 사업으로 2005년 8월 나이지리아 탐사광구는 한국 컨소시엄 65%, ONGC 25% 참여로 낙찰되었으며, 동년 10월 미얀마 A-3 지분양도 계약도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분 일부(30%)를 인도 회사(ONGC 20%, GDIL 10%)에 양도함으로써 성사된바 있다. 그밖에 2005년 8월 제4차 공동위에서 인도측의 제의로 에너지안보대화 창설에 합의하였으나, 아직 인도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은 없는 상황이다.

다) 과학·기술분야 협력 현황

2006년 Maran 인도 정통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인도 정보통신장관 회담을 개최한바 있다. 그러나 핵심사안이었던 한국과 인도 양국의 공동 IT인력 양성 문제는 인도측 주관사인 인도 Aptech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국내 하드웨어 기술, 인력지원 사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SW) 협력센터 설립방안을 검토, 인도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2007년에 1만 여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임베디드 SW와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SW 전문인력의 도입방안 검토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인도는 한국이 1995년 인도 마드라스에서 ‘우리별 3호’ 위성을 발사한

이후 동 분야에서 인도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 이스라엘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주발사체 사업을 추진 중 이어서 동 분야의 협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라) 안보 분야 협력 현황

양국간의 국방분야 협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1990년 경비정 1척(200만 달러) 외에 한국의 대인도 방산 수출은 없으며, 국방대학교 상호교류, 한국군 위탁생 파견(1~2명), 순항함대 상호방문 등 수준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결된 양국간의 군수·방산분야 협력 MOU는 군수·방산협력 관련 정보교환, 연구개발, 공동생산 및 훈련분야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제1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오는 12월 17일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합동으로 외교안보대화를 뉴델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해적에 의한 선박탈취 상황을 가정하여 양국 경비세력(양국의 경비함정 각 1척, 헬기 특공대)이 합동으로 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의 인도 방문시 양국 해양경찰청간 협력 MOU에 서명하고 △ 해적 등 국제범죄 관련 정보교환, △ 해상수색구조 관련 협력, △ 해양안전분야 합동훈련 (2007년 5월 인도 첸나이항에서 1차 합동 훈련 실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국간 해운협정 체결도 추진 중이나, 1983년 논의를 시작한 이후 인도측이 한국이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제철원료에 대한 인도 선사의 수송권 확보를 위해 화물의 균등적취를 주장함에 따라 양측간 문안 합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측은 국제 해운시장의 자유경쟁에 위배되는 균등적취의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해운협정의 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마) 건설분야 협력 현황

2005년 인도 상공부는 인프라개발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2012년까지 총 5,02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대인도

건설시장 진출은 2006년 1월까지 총 77건에 66억 달러 수주 규모이다. 현재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및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석유화학, 해양플랜트 등 31억 달러 규모의 7개 사업의 수주를 추진 중이며, 추가 사업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주요 협력 이슈

1) 양국간 협력 과제

한국과 인도는 상호보완적인 산업 및 수출 구조를 활용하여 경제협력의 분야와 폭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먼저,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활용하여 한국은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인도는 원자재 및 기초산업제품을 중심으로 교역을 확대해나가되 점차 양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기타 품목으로 교역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인도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에 있어서도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우리의 우수한 기술의 현지투자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제3국 진출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와 한국의 강점인 하드웨어 개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IT분야 상호보완관계의 협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인도 인력의 우수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및 양국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BT, NT, ET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하고 높은 기술의 지식기반을 상호 활용하고 파트너관계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지역 유일의 경제협력체인 방콕협정¹¹⁾은 2005년 11월 중국 베이징에

11) 방콕협정은 UN산하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개발도상국 회원국간의 지역협정이다. 본 협정은 1975년 5개국(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을 회원국으로 하여 1976년 발효하였으며,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

서 아·태 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로 특혜관세 품목을 확대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협정 체결국인 한국과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6개국은 2006년 7월 1일부터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현재의 223개에서 3,221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현재 회원국간에 101개 품목에 대하여 양허관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양허관세 시행 품목은 18개이다. 이처럼 APTA가 거대시장 인도와 중국을 포괄하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로 최근 동 협정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UN 산하기구인 UNCTAD에서 한국, 인도를 포함한 44개 개도국간 특정품목에 대해 양허를 하고 있는 관세협정인 GSTP를 통해서도 한국과 인도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다. GSTP는 모든 회원국이 아닌 참여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양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인도로부터의 수입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양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92년 이후 15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인도 무역수지의 불균형에 대한 인도정부의 관심을 고려하여 APTA와 GSTP의 양허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대인도 수입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남아시아경제통합 및 경제자유화공동체의 선도국가로 SAARC와의 협력가능하며, 이를 통해 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 전통적으로 인도와 긴밀한 교류가 있었으나 한국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인도가 허브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협력 가능 분야 및 이슈

10억이 넘는 인구에 최근 5년간 연평균 8%대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는 한국기업들에게 거대시장과 함께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벽 제거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혜 무역협정이다. 2005년 합류한 중국까지 총 6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 있다. 먼저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인도정부가 전력,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 민간 및 외국자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므로 발전소, 도로, 항만 등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건설업체들의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제조업 지원정책 강화 및 각종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라 인도정부가 수입을 장려하는 분야에 대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지식산업 성장에 따른 소득증대와 신소비계층 형성 등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진입확대로 기술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의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식산업의 생산기지를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자동차, 백색가전을 필두로 한국 기업의 시장선점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인도 진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산업과 관련하여 2006년 인도 정상의 기제안 사업의 추진으로부터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2006년 2월 한-인도 정상회담시 칼람 대통령이 양국간 새로운 협력가능 분야로 ‘World Knowledge Platform’ 및 ‘e-business network’ 구축의 추진을 제안한바 있다. 세계지식플랫폼(World Knowledge Platform) 구축은 한국, 일본 및 아시아 각국이 각자의 핵심능력을 경합하여 지식상품(knowledge products)을 공동으로 개발·생산·판매하는 제도적 협력관계를 칭한다. 동 사업은 각국 연구개발기관, 대학, 기업체들을 연결하는 광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택된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으며, 추진분야로 제안된 사업부문은 에너지, NT, BT, IT(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센서 등이었다. 전자상거래 네트워크(e-business network) 구축사업은 양국의 기업 및 무역업체간 e-business network를 구축하여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파트너간 교육프로그램 및 지식연계망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

제4장

주요국의 대인도 통상 전략



주요국의 대인도 통상 전략

1. 미국

가. 인도-미국 무역 및 투자

1) 무역

인도-미국의 무역은 양자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6/97년간 101억 달러이던 양자 무역량은 2005/06년에는 268억 달러로 증가

■ 표 4-1. 인도의 대미국 교역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총교역	무역수지
1996~1997	6555.5	3617.1	10172.6	2938.3
1997~1998	6735.4	3714.2	10449.6	3021.2
1998~1999	7199.6	3640.3	10839.8	3559.3
1999~2000	8395.6	3560.2	11955.8	4835.4
2000~2001	9305.1	3015.0	12320.1	6290.1
2001~2002	8513.3	3149.6	11663.0	5363.7
2002~2003	10895.8	4443.6	15339.3	6452.2
2003~2004	11490.1	5034.9	16525.0	6455.3
2004~2005	13765.8	7001.4	20767.1	6764.4
2005~2006	17353.1	9454.7	26807.8	7898.3
2006~2007 (4~9월)	9385.2	5066.7	14451.9	4318.5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하였고, 그 내역 또한 수출입이 균형적으로 발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인도의 대미수출은 1996/97년의 65억 달러에서 2005/06년의 173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인도의 대미수입은 동일 기간 36억 달러에서 94억 달러로 역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 기간 중 양자 무역량이 큰 증가를 보였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이 최근에 발생한 점이다. 동 기간을 구분하면, 1996/97년부터 2001/02년 기간 사이에는 양자 무역량이 15억 달러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그 이후 3년의 기간 동안은 무려 115억 달러 이상의 괄목할 만한 증대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동 기간 동안 인도가 지속적으로 대미 흑자 기조를 유지해 나갔다는 점이다. 1997/98년 기간동안 30억 달러의 흑자규모는 2005/06년에 이르러서는 789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전체 무역량 및 무역수지에 대한 추세 분석 다음으로는 양자간의 무역 파트너 관계의 심화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이 인도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 도표를 살펴보면 미국이 인도의 교역

표 4-2. 미국이 인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

	인도 총수출 중 비중	인도 총수입 중 비중	인도 총교역 중 비중
1996~1997	19.6	9.2	14.0
1997~1998	19.4	9.0	13.7
1998~1999	21.7	8.6	14.3
1999~2000	22.8	7.2	13.8
2000~2001	20.9	6.0	13.0
2001~2002	19.4	6.1	12.2
2002~2003	20.7	7.2	13.4
2003~2004	18.0	6.4	11.6
2004~2005	16.5	6.3	10.6
2005~2006	16.8	6.3	10.6
2006~2007 (4~9월)	15.3	5.8	9.7

자료: 인도 정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자료 재구성.

상대에 차지하는 비중이 1996/97년의 14%에서 2005/06년의 10.6%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인도의 수출시장으로서의 비중과 수입시장으로서의 비중에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인도가 중국과 ASEAN 등 여타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한데 기인한 면이 크다.

2) 인도-미국 투자관계

국가별 직접투자 유입액 분석시, 모리셔스에 의한 해외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인도는 1991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181억 달러에 달하는 FDI를 유치했으며, 이중 모리셔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41.24%에 달한다. 미국은 모리셔스 다음인 1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8.68%), 네덜란드(5.94%), 그리고 일본(4.85%)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4-3. 인도의 상위 10대 투자국(1991년 8월~2007년 3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FDI 유입액(누적)	비중
1	Mauritius	18146.8	41.24
2	USA	5893.9	12.78
3	UK	3857.3	8.68
4	Netherlands	2637.9	5.94
5	Japan	2208.5	4.85
6	Germany	1701.6	3.68
7	Singapore	1628.2	3.67
8	France	895.4	1.98
9	South Korea	822.7	1.68
10	Switzerland	692.2	1.50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인도의 대외투자액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미국이 인도의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국임을 알 수 있다. 1996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기간중 미국은 인도의 대외투자국 총 투자액 중 12.4%를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12.7%를 차지하고 있다. 모리셔스 또한 9.7%에 달하는 인도 대외투자액을 유치하고 있다.

표 4-4. 인도의 해외투자 (1996년 4월~2006년 10월)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승인 투자액	비중
Russia	2830,6	12,7
USA	2768,3	12,4
Mauritius	2150,7	9,7
U.K.	2149,6	9,6
Netherlands	1524,8	6,8
Singapore	1154,9	5,2
Sudan	1144,7	5,1
British Virgin Island	984,6	4,4
Cyprus	718,7	3,2
Hong Kong	679,9	3,1

주: 인도의 투적 승인 투자액은 합작 및 자회사 포함 금액.

자료: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나. 인도의 대미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1) 농업

농업은 인도-미국 양자협력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최근의 인도경제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높은 실적에 기인하고 있는데 반해, 농업 분야에서의 저성장률은 인도 거시경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제8차 경제계획(1992년-97년)에서의 4.7%에서 제9차 경제계획(1997년-2002년) 기간중 2.1%로 급락했다는 수치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저생산성, 공급에 치우친 생산구조 및 비효율적인 시장 인프라가 농업 분야에서의 저성장률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도-미국간의 농업협력은 인도 농업분야의 장기적인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인도는 미국과의 농업 관련 지식 및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 에너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05년도에 개최된 고위급 에너지 대화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재활용, 그리고 민간 원자력 협력 등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미-인도 협력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인도가 전세계 상용 에너지 수요량 중 3.7%를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가장 낮은 에너지 수요량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발전과 인구증가는 에너지 수요를 에너지 발전량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다. 인도의 점진적인 에너지 수요는 전세계에서 가장 클 것으로 보이며, 연 8% GDP 성장률은 5.2%의 에너지 수요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미-인도간의 에너지 협력은 인도의 에너지 수급 균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인도는 양국간 가능한 협력 분야로는 에너지 다각화, 청정 석탄 기술 및 발전 추진, 신연료 개발 협력, 효율적 에너지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3) 과학과 기술

과학과 기술분야 협력은 양국간 꾸준한 협력분야로 잘 알려져 있다. 50여년 동안 양국의 협력은 과학자 및 과학 아이디어의 교환, 협력적 연구 프로젝트 추진, 첨단 기술협력, 공동 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왔다.

교육 및 연구분야에 있어서 양국은 인도의 우주부와 미국의 과학기술부간의 MOU를 통해 기상관측 기술 및 인공위성 생산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해 왔으며 인도의 농업연구위원회와 코넬대학교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과학 협력과 연구인력 교환을 강화해 왔다.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은 첨단 과학분야 활성화를 위해 관련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4) 정보기술(IT)

최근 10여년 동안, 인도는 소프트웨어와 IT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2005/06년 기간동안 인도의 IT 산업은 전년 대비 3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96억 달러의 매출액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현재 인도의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는 전세계 102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Fortune-500 기업체 중에서 3/4가 인도의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

인도의 IT 산업의 성공은 인도 정부와 민간부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체제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인도는 매년 5만여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36만명의 공학도를 배출하고 있다. 인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최첨단 소프트웨어에 익숙해 있으며 인도의 IT 기업들은 ISO-9000 인증을 받고 있을 정도로 높은 기술적 수준을 자랑한다. 따라서 인도는 IT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양국 업체간의 협력 강화, 공동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5) 인프라 분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인프라 부문의 구축에 달려 있음을 감안, 인도 정부는 동 분야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통해 인프라 구축이 민간부문의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교각, 항만 등에 100% 해외투자를 허용했다. 그럼에도 인프라가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하지 못함에 따라 인도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인프라 건설에 3,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도는 PPP하에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도의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한편, 특별경제구역(EEZ) 개발을 통해 미-인도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미국의 풍부한 자본을 이용한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는 등 미국 정부에게 인프라를 위시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6) 통신 분야

인도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통신망을 갖추고 있으며, 성장률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다음으로 높다. 아울러, 통신밀도 또한 1999년의 2에서 2006년도에는 16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급격한 통신분야에서의 성장은 1990년대의 통신분야 민영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에 따라 브로드밴드 및 WLL에 대한 통합접근인가 제도 도입 및 통신 관련 관세율 인하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

통신분야에 있어서 현재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통신기기 및 PC, 연구개발 분야, 그리고 DCMA 및 GSM 서비스 공동 개발 등에서 미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7) 항공 분야

항공분야에 있어서의 인도 시장의 역동적 부상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항공수요의 기하급수적인 증대는 많은 민간 항공운수업체들의 시장 참여를 가져 왔으며, 이에 따른 국내 항공산업 또한 많은 발전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인도 항공시장에의 진출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평가되며, 항공산업의 부품 제공,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인력 개발 및 자문 제공 등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4-5. 인도의 항공기 탑승객 증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국제선		국내선		합계	
	백만 명	증가율(%)	백만 명	증가율(%)	백만 명	증가율(%)
2003/04	17	12	32	11	49	12
2004/05	19	17	40	24	59	22
2005/06	23	18	51	28	74	24

자료: Ministry of Civil Aviation, Government of India.

8) 소매업

인도의 중산층이 경제 성장에 따라 급성장하면서 소매업은 국제 유통업체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소매업이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임을 감안, 미국의 인도 소매시장 진출 전망은 매우 밝다. 현재, 민간소비 중 소매업은 62%를 차지하고 있으나, 조직화된 소매업은 2,150억 달러의 인도 소매시장에서 3% 뿐이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그럼에도 이 분야에서의 성장률은 매년 25-3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인도 정부는 미국 유통업체가 합작 사업의 형태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 미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1)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미국은 인도 독립지원 및 민주주의 정치 체제 공유 등으로 인하여 독립직후에는 인도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었다. 하지만 냉전체제가 확산되면서 인도의 군사블럭 불가담원칙, 인도의 중국 승인, 인도-파키스탄 전쟁시 미국의 파타스탄 지지 등으로 양국의 협력체제는 와해되었다.

냉전종식과 더불어, 미국은 인도와의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해나간다. 특히 미국은 인도와의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인도가 1998년 5월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은 인도에 대하여 경제제제를 취하게 되면서 경제 및 군사적 협력은 소강상태에 이르게 된다.

2000년에 양자간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협력 체제를 재구축하게 된다. 미국의 911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인도가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양국간 협력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최근에는 미국은 인도의 정치·경제·지역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반테러, 반핵확산, 중국견제,

경제협력 등을 위하여 글로벌적·지역적 차원에서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를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도는 11억 인구에 최근 6~8%의 급성장하는 경제를 소유하고 있어 거대 잠재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글로벌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지역 즉, 중동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도는 최소한 비회교 국가이면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넷째,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의 군사적 강대국이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은 인도와 1990년대 이전에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98년 인도의 핵 실험과 아프가니스탄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과의 공조로 인도와는 비우호적 관계로 발전한다.

그러나 최근 부시정부는 클린턴 정부와는 달리 현재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도 아니며, 또한 핵무기 비확산이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되지도 못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대신에 미국의 입장에서 인도와 강한 동맹관계를 구축할 경우 미국은 중국이 서남아,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로의 확장에 대한 확고한 한계를 그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즉, 미국은 인도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간주한다. 이에 미국은 인도와 경제분야는 물론 군사분야까지 협력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은 인도와 민간핵에너지 협력 등과 같은 시급한 인프라 개선 사업은 물론 합동군사훈련, 공동 무기생산 등도 협력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걸프 지역과 중동지역으로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새로운 거점으로 미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처럼, 미국과 인도는 기술과 방위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인도가 미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간자 또는 허브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 지역에서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도는 미국의 기술, 경제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 더 쉽게 아시아 지역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이다. 인도에게는 미국의 영향력이 아시아에 진출할 경우 남아시아 지역에 군사적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이점을 준다. 한편, 인도가 UN 안정보장이사회에 회원국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인도는 많은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하고, 인도의 가장 중요한 수출 산업 중에 하나인 IT산업이 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 및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양쪽의 니즈(needs)가 일치하면서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은 인도와 경제협력 및 무역증진, 에너지 안보 협력, 우주공동개발, 군사 협력, WMD 확산 방지 공동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미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추이 및 전망

미국의 대인도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협력체제로 변화해 나가면서 국제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미국-인도와의 협력관계 증대는 소련,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 영향을 준다. 러시아는 중요한 인도의 파트너로 미국이 인도에 제공하지 않은 무기와 핵 기술을 공급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인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이며, 정치적으로도 러시아가 인도에게는 부담을 적게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년간 중국과 인도간의 무역은 확대되면서 중국-인도간의 관계가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국경분쟁 문제도 상호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인도-중국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서비스 분야, 중국은 제조업 분야로 양국간에 상호보완적 경제발전관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에너지와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공동 대등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더욱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유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도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중동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인도의 인구 130만 명이 회교도라는 점에서 회교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인도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인도는 주변국들이, 특히 회교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의 아시아권에서 헤게모니를 잡는 것도 인도가 바라지 않고 있다. 인도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경상수지를 흑자를 내고 있는 미국과의 교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가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인도와의 경제적 협력 및 정치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마찰, 지역 안보를 위한 핵확산 방지, 테러와의 전쟁, 인권, 보건, 에너지, 그리고 무역 및 투자 기회 확대 등의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인도 중점 협력 분야는 군사협력, 핵에너지 협력, 우주개발 협력 세 분야이다. 군사적 협력은 미사일 방어체제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이 분야의 협력을 위한 미국은 인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미사일 협력은 우주개발과도 연관성이 깊다. 탄도체 개발은 우주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5년에 상업위공위성 협력을 하기로 상호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인도와 민간 핵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수차례 인도와 협상을 추진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물론 인도와 미국 의회의 승인문제가 남아있지만, 양국간 동 분야의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면에서도 미국은 인도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 비록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빈곤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국은 장기적인 면에서 인도의 경제적 잠재성이 엄청

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의 방갈로나 하이dra바다 중심으로 하이텍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미국의 대인도 직접 투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FDI가 인도로 유입되고 있는 FDI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미국 FDI의 대부분이 IT 및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통신장비, 민간항공, 보석류, 비료, 화학제품 등의 분야에서 교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또한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보다도 인도에 빈곤퇴치 원조를 더 많이 하고 있다. 1947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이 인도에 동 분야에 지원한 원조금액은 150억 달러가 넘고 있다. 2006년에는 미국은 인도의 1) 경제성장 2) 보건 3) 재난관리 4) 에너지 및 환경 5) 교육 및 사회체제 개선 등을 위해 6,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2002~2005년까지 2억 8,800만 달러 상당의 무기거래를 한 것으로 美국방부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지역적 · 정치적인 면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력은 하이테크 중심의 기술협력은 물론 테러와의 전쟁, 소련 및 중국 견제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대대적인 인도 지원은 인도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의 지지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 기반도 제공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인도와의 협력은 여타 국들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국

가. 인도-중국 무역 및 투자

1) 무역

최근 수년 동안 인도-중국의 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1998/99년

동안 15억 달러 규모의 무역량은 2000/01년에 들어서서 48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4/05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12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비록 중국의 인도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인도가 중국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는 것이다. 2005/06년 기간 동안 중국은 인도의 3대 수출국이었으며 인도의 총수출에서 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총 교역량에 있어 인도는 1%에 불과하다.

인도의 대중국 교역은 만성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996/97년 인도의 대중 적자는 약 1.4억 달러 규모였으나 2005/06년에 들어서서는 41억 달러로 폭 증가였고 2006년도 상반기 중에만 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아래 도표에 따르면 인도의 대중 수입량은 2005/06년 동안 71억 달러에서 109억 달러로 53.3% 증가한데 비해 수출은 56억 달러에서 68억 달러로 20.4% 증가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인도의 대중국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총교역	무역수지
1996~1997	614.8	756.9	1371.7	-142.1
1997~1998	718.0	1112.1	1830.0	-394.1
1998~1999	427.2	1096.7	1523.9	-669.6
1999~2000	539.0	1282.9	1821.9	-743.9
2000~2001	831.3	1502.2	2333.5	-670.9
2001~2002	952.0	2036.4	2988.3	-1084.4
2002~2003	1975.5	2792.0	4767.5	-816.6
2003~2004	2955.1	4053.2	7008.3	-1098.1
2004~2005	5615.9	7098.0	12713.9	-1482.1
2005~2006	6759.1	10868.1	17627.2	-4109.0
2006~2007(4~9월)	3445.5	7992.0	11437.5	-4546.4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최근 몇 년 동안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1996/97년 기간동안 중국은 인도의 총교역량에서 1.9%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2005/06

년에는 7%로 증가하였다.

■ 표 4-7. 인도의 대중국 교역 비중 변화 ■

(단위: %)

	인도 수출 중 비중	인도 수입 중 비중	총교역 중 비중
1996~1997	1.8	1.9	1.9
1997~1998	2.1	2.7	2.4
1998~1999	1.3	2.6	2.0
1999~2000	1.5	2.6	2.1
2000~2001	1.9	3.0	2.5
2001~2002	2.2	4.0	3.1
2002~2003	3.7	4.5	4.2
2003~2004	4.6	5.2	4.9
2004~2005	6.7	6.4	6.5
2005~2006	6.6	7.3	7.0
2006~2007(4~9월)	5.6	9.1	7.7

자료: 인도 정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자료에서 제작성.

2) 투자

UN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2003년도에만 570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투자를 유치하였을 정도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의 투자 대상국으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대외투자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1980년대에 4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외투자는 2005년도에는 12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인도의 대외투자도 앞에서 살펴보았듯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06년도에는 4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대외투자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인도는 중국의 투자 대상국으로서 부각되지는 않았으며 인도 또한 중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대인도 투자는 1991년~2007년 동안 36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1996/2006년 동안 인도의 대중투자 또한 1.7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나. 인도의 대중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1) 에너지

인도와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며 동 추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속 성장에 따라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국내 생산과 이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키느냐에 있다. 아래 도표에 따르면 향후 2030년까지 양국의 석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그에 따르는 공급은 감소함에 따라 수급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표 4-8. 인도와 중국의 석유 수급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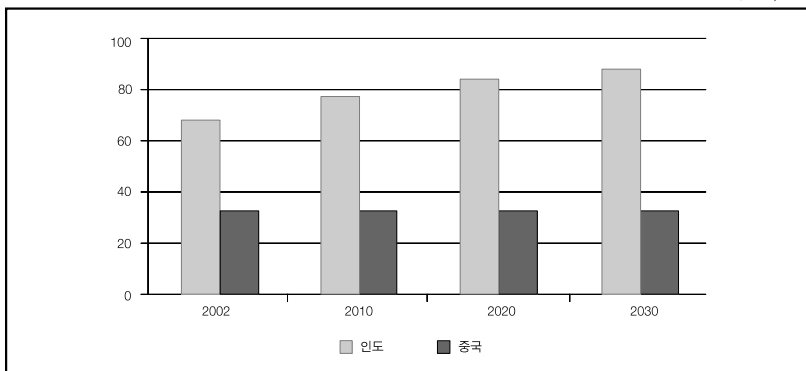
	2002	2010	2020	2030	2002-2030(%)
인도의 석유 수요	2.5	3.4	4.5	5.6	2.9
인도의 석유 공급	0.8	0.7	0.6	0.5	-1.6
중국의 석유 수요	5.2	7.9	10.6	13.3	3.4
중국의 석유 공급	3.4	3.3	2.7	2.2	-1.5

주: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

자료: World Energy Outlook 2004, IEA.

그림 4-1. 인도와 중국의 석유수입 의존도 추이

(단위: %)



자료: World Energy Outlook 2004, IEA.

결국, 양국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양자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 업체간 교류를 통한 이해 심화, 국제 송유관 건설 모색, 원유 비축 시설 개발 등의 주요 협력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2)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도와 중국은 저비용 임상실험, 연구개발, 분자 융합 부분 등에 있어서 아시아 여타국보다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양국 모두 저렴한 임금의 과학자 및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과학과 관련된 연구소와 자연자원까지 풍부하여 BT 개발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인도는 중국과 면역접종, 동물 임상실험 협력, 중국의 SEZ를 활용한 공동사업 추진 등 동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IT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¹²⁾ 중국은 IT 하드웨어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2004년에 들어서서 중국은 전세계에서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표 4-9. ICT 개발 순위

국가	2004-2005 순위	2003-2004 순위	순위변동
싱가포르	1	2	↑
아이슬랜드	2	10	↑↑
핀란드	3	3	-
덴마크	4	5	↑
미국	5	1	↓
인도	39	45	↑↑
중국	41	51	↑↑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IT Report 2004-2005'.

12) 미국 참고.

디지털 카메라 등 각종 IT 기기의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1996년에 중국의 IT 품목 수출액은 350억 달러 규모였으나 2004년에 들어서는 3,29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인도-중국간 협력 유망 분야로는 소프트웨어, 신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공동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의약품

인도의 의약품 산업은 현재 80억 달러 규모이며 전 세계 시장에서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USFDA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미국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임금의 1/10에 불과할 정도로 국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 또한 의약품 산업의 고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바, 현재 세계 제7위 규모의 의약품 산업은 2010년에는 제5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인도는 중국과 의약품 초기개발 및 임상실험, 양국 업체간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기술과 노하우의 공유와 같은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금융 서비스

인도의 금융부문은 민간 업체의 금융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은행부문의 자유화를 통해 인도의 금융 효율성 및 현대화가 가속화되었으며 보험부문 또한 2000년도의 민영화 및 시장 개방을 통해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은행부문이 장기자본의 주요 공급처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 은행은 정부 소유이며 높은 GDP 증가율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15%의 대출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은행부문은 다량의 부실대출채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및 중국은행감독위 등은 부실채권에의 초기 대응에는 비교적 성공을 거뒀으나 동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위험관리 체제 개선, 회계의 투명성, 해외지분의 허용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는 중국에게 인도의 앞선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 중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추이

1) 인도의 중요성과 전략

중국이 인도를 전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데에는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일방주의 견제, 중국의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 확대, 양국간 경제 및 자원협력 등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일방주의 견제에 따른 아시아 지역에서의 고립회피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은 물론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 견제 및 고립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지난 40여 년간의 불편했던 인도와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인도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경우 24억의 인구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국경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자제하고 주둔군 간부들이 수시로 회동하면서 오해의 소지도 없애 나가고 있다.

둘째,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인도와의 협력은 필수라는 점이다. 중국은 인도와 최근 에너지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미국으로부터 핵개발 우려 및 무장단체 지원, 인권유리 등으로 이란, 시리아 등을 끌어들이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중국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인도의 석유 및 가스공사들과 합작 또는 협력하여 석유 및 에너지 확보 및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셋째, 양국의 경제적 협력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 중심의 대외경제협력을 분산시키고, 잠재적 거대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이에 중국은 인도에 FTA를 적극 제안하고 하였다. 이에 양국은 FTA를 위한 공동연구를 1,2차에 걸쳐 수행하였다. 특히 양국은 산업구조면에서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제조업 중심이지만, 인도경제는 IT 및 서비스 중심이라는 점에서 매우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인도와의 FTA 협상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인도 통상협력 전략은 양국간 FTA, 정치적·외교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주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인도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서술할 수 있다.

첫째, 인도와의 FTA 추진이다. 양국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세계경제 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양국의 명목 GDP는 세계 경제규모의 6.7%(중국 2조 달러, 인도 8천억 달러)이나, 구매력기준으로는 13조 달러로 세계 21%를 차지하며 이는 미국실질 GDP(20%)보다 크다. 또한 양국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24억 명(중국 13억, 인도 11억)으로 단일 시장을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면에서 두 나라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과 NAFTA, EU와 함께 세계 3대 지역통합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의 교역이 FTA 후 500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인도가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과 인도는 아시아 역내에서 주도권을 형성해 나갈 것이며,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내에서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교역의존도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인도와의 FTA 추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 또는 인도시장에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협상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안정적인 자원확보이다.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GCC6개국, SOC 회원국, 호주, 칠레, 브리질 등이 있다. 인도는 전세계 석탄매장량의 10%, 철광석 매장량의 5%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와 FTA 추진시 에너지 안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출시장 확대 및 무역마찰 회피이다. 중국이 인도와 FTA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무역마찰소지가 큰 선진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개도국시장 개척하려는 의도이다. 실제 대인도와의 교역 최근 2년간 6~7% 증가를 보이고 있다.

넷째, 외교안보적 측면이다. 아시아에서 미국, 일본과 역내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지역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주의의 구축 수단으로 양국간 협력확대는 매우 좋은 방안이 된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ASEAN 후발 4개국과 농업부문 등 불리한 조기 관세철폐 합의하는 등 인도는 물론 ASEAN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 대인도 통상 과제와 전망

중국이 인도와 장기적으로 통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간 해결해 나가야할 주요 과제들이 있다.

첫째, 국경지역 영토 분쟁이다. 중국은 인도와 1962년에 국경지역 영토 전쟁을 치렀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역은 아직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둘째,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파트너십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매우 주요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간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간에 분쟁이 일어날 때 중국은 언제나 파키스탄의 편을 지지해 왔다. 따라서 인도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원유수입 해상통로인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 문제이다. 중국의 원유 수입 80% 이상이 인도가 통제하고 있는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해상통로에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넷째, 인도는 일본 및 동남아국가와 군사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일본과 역사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은 많은 중국인들을 강제로 군대에 입대하여 전쟁터로 보냈다. 또한 중

국은 동남아 국가와 남차이나해에서 영토분쟁을 하고 있다. 일본 및 동남아국가들과 인도가 협력을 확대해 나갈 때 중국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중국은 인도와 FTA를 체결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마치고 지속적으로 본 협상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FTA 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중국과의 FTA를 체결할 경우 제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전혀 본 협상을 추진하려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교역을 미국 등 주요국에서 다른 국가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도와의 FTA가 중요하다. 또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는 철강, 석탄 등 중국이 필요로 하는 천연자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도와의 FTA를 꼭 추진해야할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인도만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인도와의 협력관계는 미국, EU,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에 인도가 쉽게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밀접하게 갖고 가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중국의 인도와의 협력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인도 교역은 국경지역의 교역 확대 등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중국의 FDI에 대한 불허입장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인도 FDI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본

가. 인도-일본 무역 및 투자

1) 무역

1993/94년에 인도의 3위 교역대상국이었던 일본은 2004/05년 6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2005/06년 인도의 대일본 수출은 24억 8천만 달러로 인도 총수출의 2.4%에 불과하여 십여년전의 7.8%에 비해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수입 역시 동기간 중 6.6%에서 2.7%로 비슷하게 낮아졌다. 2003년 이후 양국간 교역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으나 일본이 인도의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06 2.59%에 불과하다.

표 4-10. 인도의 대일본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총교역	무역수지
1996-97	2005.96	2187.45	4193.41	-181.49
1997-98	1892.07	2144.90	4036.97	-252.83
1998-99	1652.00	2465.72	4117.72	-813.72
1999-00	1685.37	2535.80	4221.17	-850.43
2000-01	1794.48	1842.19	3636.67	-47.71
2001-02	1510.44	2146.44	3656.88	-636.00
2002-03	1864.03	1836.33	3700.36	27.70
2003-04	1709.30	2667.69	4376.99	-958.39
2004-05	2127.91	3235.13	5363.04	-1107.22
2005-06	2481.26	4061.10	6542.36	-1579.84
2006-07(4~9월)	1216.48	2114.93	3331.41	-898.45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인도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2002/03년 2,800만 달러의 소규모 흑자를 경험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최근 적자폭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양국간 교역의 구성은 변하지 않았다. 인도의 대일본 수출은 보석 및 준보석, 해산물, 광물과 섬유제품 등 대부분 1차산품에 국한되어 있으며, 수입은 원자로 등의 기계류, 운송장비, 전자제품 및 강철제품과 같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인도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고부가가치인 제조업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양국 교역의 불균형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투자

일본의 대인도 FDI는 1991년 8월부터 2007년 3월 기간 중 총 22억 달러로 기간중 유입 FDI의 4.85%에 불과하다. 주요 분야는 운송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섬유 등이다. 한편 인도의 일본 투자는 IT 및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의 투자는 중국 및 ASEAN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에 투자한 일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상당량이 일본에 재수출됨에 따라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FDI가 생산과정에 인도를 통합함으로써 1차산품이 아닌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가공하여 일본에 재수출하는 형태의 투자를 희망한다.

나. 인도의 대일본 경제협력 추진 분야

1) 자동차 부품

인도 기업이 일본의 자동차 부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일본 기업과 R&D 계약을 맺고 제품 런칭 수년 전부터 일본측 파트너와 디자인 및 개발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 기업은 인도내 생산을 위해 일본의 자동차 관련사와 장기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본내 생산기지를 설립하여 저임의 인도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인도 기술인력은 노령화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일본 노동시장이 공백을 채워줄 것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비자 및 고용허가를 위해 양국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2) 화학 및 제약산업

인도의 제약과 농화학 산업은 최근 인도 수출의 유망품목이다. 일본의 인구 구성을 고려하면 의약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이미 일본 기업에 의한 인도 의약품 품질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본에 진출한 인도 기업도 있다. 특히

일본 기업은 가공 단계의 약제품의 수입을 선호하므로 중간과정을 아웃소싱하는 형태의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인도 제약기업은 일본의 제약 및 화학 기업과 합작으로 고품질의 연구소 및 생산기지를 인도내에 설립하고 인근 공항을 통하여 일본에 직수출할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되면서, 동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3) 정보기술

일본의 소프트웨어 매출은 2003년 9조 엔에 달하여 전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 시장이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은 총 매출의 61%를 차지하였고, 제품은 13%, 관리 및 운영 등이 나머지 1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문인력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본은 첨단 기술 교육을 받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수가 부족하여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 기술자에 의존해왔다. 인도는 중국에 비해 지식기반 산업에서 앞서 있으나 언어의 장벽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일본어습득이 진출의 우선 요건이 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인정받은 IT 기업을 통한 아웃소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 가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4)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도는 바이오테크 산업은 영어구사가 가능한 저임의 기술인력들이 미국 및 EU 기준에 맞는 제조과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임상실험 및 위임 연구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바 일본에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본 제약사들은 신약개발 비용 절감의 압력을 받고 있으므로 인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가능하다. 따라서 양국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 보건서비스

인도가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중동, 미국, EU, 동남아 등지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사회에서 노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간호할 간호사, 물리사와 같은 보건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한편 일본내 인도 회사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다. 일본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1) 일-인 협력관계의 발전과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인도와 일본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의 문화적 유대감, 2차 대전 기간 영국군과 독립전쟁시 일본군의 인도 지원 및 2차 대전 이후 동경 국제전범재판시 일본에 대한 R. B. Pal 인도 법관의 호의적 판결 등에 기초하여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양국은 1952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Nehru(1957), Indira Gandhi(1969), Rajiv Gandhi(1984,1985), Narasimha Rao(1992) 총리의 일본 방문 및 나까소네(1984), 가이후(1990) 총리의 인도 방문 등 양국 간 고위인사 상호방문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냉전기간 중 일본의 외교정책은 친미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인도는 비동맹외교노선 및 구소련과의 밀월관계를 맺어 일본과는 정치적인 괴리감을 형성하게 된다. 일본은 1962년 중-인 전쟁에서 인도가 패배하면서 인도를 파키스탄과 동격인 제3세계 국가로 인식하게 되면서 인도보다는 중국에 초점을 맞춘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인도의 폐쇄된 경제체제가 양국 통상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데다가 결정적으로 일본이 1998년 5월 인도 핵실험 직후 서방국가들과 함께 대인도 경제제재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대인도 투자가 위축되는 등 일본의 대인도 경제협력은 오히려 후퇴하게 된다.

일본의 대인도 외교관계가 재개된 것은 2000년 클린턴 美대통령의 인도 방문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조한 이후 일본도 인도 친화적으로 입장을 선회한다.

우선 일본은 고위급 외교 중심으로 인도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양국은 2001년 12월 Vajpayee 총리의 방일시 "21세기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1998년 핵실험으로 부과한 대인도 제재조치의 해제, 고위인사 교류 확대, 안보대화 창설, 군사 분야 교류 확대, UN 개혁관련 협력 및 반테러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의 2005년 4월 방문, 2006년 1월초 신임 아소 따로 외상, 2007년 8월 아베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는 등 최근 인도와의 협력강화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가 일본에게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부상한 배경에는 치밀한 정치·경제적인 고려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 2003년 이후 11억 인구를 가진 인도가 매년 8% 이상 급성장과 더불어 젊고 강한 소비력을 지닌 중산층을 중심으로 거대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각되면서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한계를 느낀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내 고비용 생산구조로는 더 이상 국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도와 같이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우회생산 및 수출기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도가 세계적인 IT 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일본은 앞선 기술력을 보강해줄 수 있는 생산의 하부구조의 인력 수급과 동시에 인도가 앞선 소프트웨어 기술 및 디자인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IT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하던 일본이 2000년 초 미국 IT 버블 붕괴가 일본 IT 성장세에 악 영향을 미치자 일본의 IT 업체는 미국과의 협력에서 제2의 IT강국인 인도와의 협력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 밖에 미국 경기가 수년간 침체되고 세계적으로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미국에 치우친 일본의 경제 협력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대인도 전략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새로운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인도를 모두 파트너 국가로 삼아 정체된 일본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인도 시장 진출 시기는 한국보다 앞섰으나 이후 현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동차, 전자 등 일본이 비교우위를 가진 주요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어준 경험이 있다. 이에 외교력까지 동원하여 인도 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본격적인 시장쟁탈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로 급부상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진 일본은 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역내 중국의 경쟁국가인 인도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무역 진흥회(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의 FTA 보고서는 일본이 BRICs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와의 FTA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장래성이 높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목적과 동시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¹³⁾ 이와 더불어 일본은 또한 중국의 빠른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도를 비롯하여 미국, 호주를 포함한 4개국 합동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치·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일본의 대인도 통상전략 추이 및 전망

2000년까지 일본-인도와의 경제관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일본 기업들은 까다로운 행정 규제 및 절차, 인프라 부족, 강성노조 등을 이유로 인도에 대한 수출과 투자에 모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인도의 대외 교역이 연평균 9.5%씩 증가할 때에도 대일본 교역은 매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도

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편』에서 재인용

요타, 소니 등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인도 진출에서 잇단 좌절을 경험했으며, 1998년 인도가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라 투자를 철회하는 등 인도에 대한 투자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부터 정부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지속하여 왔으며, 이러한 경제협력 관계는 최근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2년부터 일본은 중국에 대한 ODA 자금을 축소하고 인도에 대한 ODA를 확대함으로써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ODA를 인도에 공여하는 최대 원조국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인도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인프라 개발 분야에 ODA를 우선 투입하고 동 분야에 대한 일본기업의 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인도 시장에 대한 일본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인도와 일본의 협력 논의는 인프라 건설, FTA 체결, 인도에 핵연료 및 기술 제공, 합동 군사훈련, UN 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7년 8월 일본의 아베 총리의 인도 방문시 일본은 경제·정치·안보를 아우르는 새로운 일본의 대인도 외교노선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아베 총리는 250여 명에 이르는 비즈니스 사절단과 함께 인도를 방문하여, 경제, 정치 및 안보·국방, 핵, 민간협력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동 방문시 협의된 경제통상 분야의 합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양국은 현재 1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규모를 2010년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FTA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4년간 일본 ODA의 최대 수혜국이었던 인도에 대한 ODA를 델리 지하철 사업을 비롯한 인프라 건설, 환경 및 에너지 협력 등 넓은 분야로 확대하여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델리-뭄바이 간 산업회랑(DMIC) 및 화물전용철도망 건설 사업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ODA 외에 인도 민간부문의 개발 자금으로 엔화표시 예탁증권(Japanese Depositary Receipt)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통화교환협정(Currency

Swap Arrangement)도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과 함께 정치, 안보 및 국방 협력도 논의했다.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인도-미국 간 민간 핵협정에 대해 일본은 공동 선언문에 민간 핵 에너지 개발에 협력한다는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일본 기업들이 인도의 원전 및 원전용 핵연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았다. 또한 일본과 인도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한 아시아의 위상 강화, 에너지 안보, 연구 역량 강화, 경제협력체 구축의 중요성 등 다자간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거의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표방하고 있는 일본의 대인도 통상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기업 차원에서 인도와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까지 양국 간 무역규모를 2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의 투자지 선정에 있어서 비즈니스 환경과 정치적 안정성이 중요 고려사항인 만큼, 일본기업은 인도정부가 인프라 구축, 경직된 노동시장 개선, 인력수급난 해결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해당지역의 주정부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국간 정부 차원의 무역 및 투자 논의는 일본기업에게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일본기업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 가능성은 먼저 일본이 투자 계획을 얼마나 확실히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물론 교역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인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가 양국 간 FTA의 조기 타결이 될 것이다.¹⁴⁾ 만약 양국 간 FTA가 조기 타결된다면 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14) 양국은 FTA 체결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2006년 6월 종료하고 2007년 6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

4. EU

가. 인도-EU 무역 및 투자

1) 무역

인도-EU 교역은 수출이 2000/01년 106억 달러에서 2005/06년 230억 달러로, 수입 역시 105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지난 5년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표 4-11. 인도의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역 및 국가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Europe	11,432.51	10,858.62	12,739.42	15,666.99	19,673.46	24,716.49	25,721.55
EU 25개국	10,569.71	10,136.31	11,847.87	14,443.58	18,118.30	22,948.39	23,765.48
기타 서유럽 국가	825.54	687.68	830.5	1,106.97	1,381.78	1,613.95	1,700.20
East Europe	37.27	34.64	61.06	116.44	173.38	154.15	255.87
Africa	1,801.46	2,161.03	2,457.83	3,076.69	4,218.24	5,584.21	7,334.63
America	10,865.38	10,058.46	12,889.83	13,392.11	16,793.25	21,168.23	21,634.00
North America	9,886.96	9,098.16	11,594.03	12,253.31	14,632.55	18,212.23	17,918.32
Of which USA	9,236.48	8,513.34	10,895.76	11,490.11	13,765.74	17,203.54	16,916.26
Latin America	978.42	960.3	1,295.80	1,138.81	2,160.71	2,956.01	3,715.68
Asia & ASEAN	17,051.61	17,614.45	23,400.22	30,391.02	41,347.45	49,776.28	56,186.62
East Asia	486.87	506.76	604.39	703.52	859.83	993.84	1,363.57
ASEAN	2,875.31	3,457.02	4,618.54	5,821.74	8,425.89	10,513.26	11,326.50
WANA	5,560.88	5,777.83	7,528.76	10,185.03	14,232.44	16,646.11	20,670.38
NE Asia	6,247.64	5,822.46	7,863.64	9,387.17	13,223.15	16,127.81	17,012.19
South Asia	1,880.91	2,050.38	2,784.90	4,293.55	4,606.14	5,495.26	5,813.97
CIS & Baltics	1,034.80	972.37	921.69	1,036.54	1,094.21	1,237.83	1,313.39
CARs Countries	79.74	68.78	85.56	151.83	174.18	165.71	171.04
기타 CIS	955.06	903.59	836.13	884.71	920.04	1,072.12	1,142.35
기타	1,889.77	2,161.79	310.44	279.61	409.33	242.06	247.48
전체	44,075.54	43,826.72	52,719.43	63,842.97	83,535.94	102,725.10	112,437.68

주: 2006/07년 통계는 2007년 3월을 제외한 수치.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EU는 인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수출은 2005/06년 기준 ASEAN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총 1,020억 달러 중 500억 달러로 50% 넘게 차지하였으나, 지역별로 세분화할 경우 대EU 수출인 230억 달러를 넘는 국가나 그룹은 없다. 수입의 경우에도 2005/06년 기준 ASEAN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총 1,420억 달러 중 500억 달러를 차지하였으나, 대EU 수입인 230억 달러를 넘는 국가나 그룹은 없다. 그러나 동년도 중국이 속한 동북아로부터의 수입이 22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6/07년에는

표 4-12. 인도의 지역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역 및 국가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Europe	13,768.80	13,643.56	15,340.50	18,786.71	25,621.37	30,145.45	33,183.56
EU 25개국	10,495.67	10,584.23	12,780.42	14,991.80	19,115.69	22,841.44	23,973.96
Other WE Countries	3,234.34	2,990.35	2,500.29	3,698.64	6,312.73	6,992.97	8,891.92
East Europe	38.8	68.97	59.79	96.26	192.95	311.03	317.68
Africa	1,603.55	2,112.58	2,889.31	2,735.05	3,354.42	3,875.11	10,437.94
America	3,943.74	4,685.22	6,055.91	6,953.42	9,831.87	11,082.47	15,903.86
North America	3,236.03	3,679.05	5,009.87	5,760.75	7,777.08	8,673.04	10,447.66
Of which USA	2,839.74	3,149.62	4,443.58	5,034.86	7,001.35	7,777.97	9,228.93
Latin America	707.71	1,006.17	1,046.04	1,192.67	2,054.80	2,409.43	5,456.21
Asia & ASEAN	14,296.30	16,157.85	18,494.01	27,636.00	40,362.15	50,155.32	98,817.03
East Asia	1,152.23	1,394.26	1,422.71	2,751.31	4,050.17	5,163.21	6,733.70
ASEAN	4,058.26	4,387.22	5,150.17	7,433.16	9,114.66	10,610.90	16,178.23
WANA	3,047.39	3,170.19	3,587.09	4,926.23	9,526.51	10,751.51	46,363.99
NE Asia	5,577.45	6,617.14	7,803.61	11,815.99	16,673.62	22,232.41	28,163.48
South Asia	460.97	589.04	530.43	709.32	997.19	1,397.30	1,377.63
CIS & Baltics	679.92	736.64	844.3	1,261.47	1,960.21	2,886.73	3,213.81
CARs Countries	30	28.5	39.22	50.79	62.43	71.18	135.03
기타 CIS	649.92	708.14	805.08	1,210.68	1,897.78	2,815.55	3,078.77
기타	15,682.43	14,077.43	17,788.11	20,776.97	30,387.41	44,271.19	765.63
전체	49,974.75	51,413.29	61,412.13	78,149.62	111,517.44	142,416.27	162,321.83

주: 2006/07년 통계는 2007년 3월을 제외한 수치.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동북아로부터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대 수입대상 지역의 위치에서 밀려났다.

2000년도 이후 양자간 교역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2005/06년 두 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 기간 중 인도의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인도의 대EU 수입 비중은 21%에서 16%로 오히려 줄어들면서 인도 시장에서 EU의 점유율은 감소하였으며, 인도의 대EU수출도 24%에서 22.3%로 감소하였다. EU 중에서는 영국,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프랑스의 6개국이 인도 교역의 주요 대상국이다.

2) 투자

1990년대 인도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2001년부터 2004년간 인도의 FDI 유입액은 매년 40억 달러를 기록해왔다. 2005/06년 77억 달러, 2006/07년에는 무려 2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1991년부터 2007년 3월까지 대인도 FDI 546억 달러 중 EU 15개 국으로부터의 FDI는 108억 달러로 24.8%를 차지하였다. 기간 중 모리셔스는 41.2%, 미국은 12.8%를 차지했다.

EU 국가 중에서 영국은 8.7%, 네덜란드 5.9%로 최대이며, 그 밖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까지 총 6개국이 EU FDI 중 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U의 해외 FDI 중 인도의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연평균 FDI가 3억 2,930만 달러였던데 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FDI는 7억 3,130억 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EU로부터의 FDI 승인액은 기간중 15억 3,742억 달러에서 9억 4,780억 달러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양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에 대한 EU 투자는 2003년 투자수익률(rate of return)이 13%로 전세계 평균인 6%의 두 배가 넘는 뿐만 아니라 극동 지방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보다도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EU 입장에서조차 대인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13. 인도의 FDI 유입 추이(1991년 8월~2007년 3월)

(단위: 백만 달러)

국가	FDI 유입액	비중
Netherlands	2637.86	5.94
UK	3857.25	8.68
Germany	1701.63	3.68
France	895.44	1.98
Italy	552.64	1.21
Sweden	478.01	1.05
Denmark	161.84	0.35
Belgium	232.93	0.52
Finland	47.07	0.10
Luxembourg	74.61	0.17
Austria	41.92	0.09
Spain	102.71	0.24
Ireland	33.60	0.80
Greece	2.86	0.01
Portugal	1.40	0.00
Total for EU15	10821.77	24.82
Mauritius	18146.81	41.24
US	5893.99	12.78
합계	54628.05	100.00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한편 인도의 투자는 1996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223억 달러 승인 중에서 실제 투자는 158억 달러가 이루어졌다. 인도의 해외 투자는 러시아, 미국, EU 15개국 및 모리셔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각각 12.7%, 12.42%, 19.4%와 9.65%의 비중을 차지했다. EU 15개 국 중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및 프랑스에 대한 투자가 동기간 중 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도의 대EU FDI는 EU의 총 FDI 유입액 중 1%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2000년부터 2003년 기간 중 EU 15개국으로부터 유입된 FDI의 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62%가 서비스 분야로 집중되고 있으며 제조업은 27.4%, 석유 등 에너지 부문이 9.4%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부문 중에서도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중개 및 통신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식품, 전기·전자 제품 및 기계류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EU 국가들이 인도를 제조업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수출형 FDI를 기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이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했던 투자의 패턴을 따라주기를 기대한다. 일본의 중국, 태국, 한국 및 싱가포르 4개국에 대한 FDI는 1994년 49%에서 2004년 78%로 증가했으며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동기간 57%에서 71%로 동반 성장했다.

표 4-14. 인도의 국가별 FDI 유입 비중 (2006년 10월말 누적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승인액	총 승인액중 비중
UK	2149.62	9.65
Netherlands	1524.81	6.84
Germany	103.01	0.46
France	114.90	0.52
Italy	57.30	0.26
Sweden	7.34	0.03
Denmark	25.56	0.11
Belgium	171.47	0.77
Finland	2.44	0.01
Luxembourg	18.25	0.08
Austria	77.75	0.35
Spain	13.32	0.06
Ireland	53.62	0.24
Greece	0.05	0.00
Portugal	3.01	0.01
Total for EU15	4322.43	19.40
Mauritius	2150.72	9.65
US	2768.30	12.42
Russia	2830.58	12.70
Total for India	22284.10	100.00

자료: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나. 인도의 대EU 경제협력 추진 분야

1) 인프라

인도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 그러나 인도에서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국내 경제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인프라 사업의 수익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특히 항구, 공항,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EU의 건설기업들에게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먼저 인도 정부는 항구 및 관련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총 12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공항의 현대화 및 시설 보수를 위해서도 2010년까지 9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미 European Aerospace and Defence Group (EADS)가 향후 15년간 총 24억 4,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이 분야에 대해서 EU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2) 에너지

인도의 에너지 분야는 수력발전, 석유 및 천연가스와 석탄 등 투자의 기회가 풍부하여 이미 FDI가 증가하고 있다. 동 분야에서 EU와의 협력은 청정석탄 (Cleancoal), Hydrocarbons, 다국적 에너지 협력 도모, 전력 송출 및 전달을 위한 기술 협력,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 협력, 재생에너지 공동 개발 등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인도는 EU와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3) 보건 및 제약

인도의 제약산업은 전세계 판매량 및 판매액 기준으로 각각 8%와 5%를 점유하고 있다. 인도 제약산업의 규모는 80억 달러이며 이중 25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 5억 달러 규모인 국내 시장은 2025년까지 5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EU 기업들은 인도의 저비용 전문인력과 축적된 연구 능력을 활용하여

인도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제약시장을 겨냥할 수 있다. 또한 인도와의 보건 협력은 인도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노령화되고 있는 EU 국가들의 보건 의료비 감소를 위해서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은 동 분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4) 정보통신기술

인도의 정보통신산업은 1999년 이후로 매년 28%씩 성장해왔으며, 2006/07년 동 분야 총 매출액 478억 달러 중에서 수출은 313억 달러를 기록했다. EU는 बैंकिंग을 비롯한 금융과 소매, 제조업 분야에서 인도의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인도는 EU 기업들과 합작함으로써 연구와 기술 수준을 보다 높일 수 있으며, 미국과 같이 전문인력의 EU 시장 진출도 가능하다. 인도의 통신분야는 EU 기업들에 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2010년까지 20%의 통신밀도 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 3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투자의 상당부분을 FDI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며, 그 중 EU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5) 환경

현재 인도의 환경산업 시장은 100억 달러 정도이며 공해 억제 설비 등 환경 관련 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매년 15% 가량 성장하여 2010년에는 150억 달러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분야에서 앞선 EU 기업들은 폐수처리, 재생, 공해억제, 위험폐기물 관리, 오염도 측정 및 감독기기, 환경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전망이 밝다. 따라서 인도는 EU가 동 분야에 적극 협력하길 원하고 있다.

다. EU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1)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EU의 인도와의 관계는 1960년대에 인도와의 외교적 관계를 처음 맺으면서 시작한 후 다섯 단계에 걸쳐 변화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1963년 인도와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간에 외교적 관계를 맺었다. 2) 1970년대에 인도와 EEC간에 통상협력협정 (CCA: Commercial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양자간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3) 1980년대에는 다섯 차례의 CCA를 수정·보완하면서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갔다. 4) 1990년대에는 일반적인 경제협력관계를 넘어서 경제동반자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동반자 및 개발협력 협정(Partnership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5) 21세기에는 2000년에 처음으로 EU-인도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하게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최근 EU가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급속하게 확대해 나가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첫째, EU는 안정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국제통상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EU는 국제사회에서 주요 영향력이 있는 국가 또는 세계에서 잠재적 영향력이 있는 국가와 좀 더 가까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인도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은 없지만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EU는 인도와의 협력을 중요시 하고 있다. 1991년 개혁과 개방이후, 인도경제는 2006년 세계 경제규모(GDP)에서 13위를 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경제 규모와 더불어 11억의 거대 인구,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인도는 장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행위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U는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당연하면서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둘째, 인도시장의 잠재성이다. 인도는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EU의 대인도 무역규모는 총 EU 교역규모의 1.8%수준이다. EU의 인도와의 교역 서비스 수준도 전체 서비스 교역 수준의 1.1%로 매우 낮다. 이는 EU가 인도와의 교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잠재성은 매우 크다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다. EU의 대인도 투자도 매우 비슷한 실정이다. EU의 대인도 투자는 EU 전체 FDI의 0.9%(11억 달러)이다. 더욱이 인도는 기초 인프라 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실정이다. 즉 인프라 개선 사업에 거대한 투자, 장비, 기술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도정부는 국가방어 및 안보를 위하여 급격히 예산을 확대시키면서 무기 및 방어 장비들을 프랑스, 독일 등 EU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EU국가의 대인도 무기 및 방하기구 수출은 EU의 주요 무역수지 흑자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예로 최근에는 프랑스의 에어버스(airbus) 등 항공기 수출이 확대를 들 수 있다. 인도가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 EU 갈릴레오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의 대인도 협력은 EU국가들에게 모든 면에서 이득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미국 요인이다. EU는 미국의 대인도 해외정책 목표가 EU 해외정책의 목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EU-인도관계도 같이 가까워지고 있다. EU가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핵에너지 민간개발 협력인데, 미국도 동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을 매우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이 동 분야에서 인도로 하여금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배제하고 쌍방간에만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한다는 점에서 EU는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만약 동 분야에서 미국과 인도간에만 협력을 추진한다면 EU-미국관계가 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와 미국은 경제, 정치, 안보문제 등에서 동반자적 이해관계자이다. 더욱이 EU는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하여 동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넷째, 중국요소이다. 중국의 아시아에서 균형자적 역할에 대하여 EU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서방국가와는 다른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EU는 인도가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하여 균형자적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EU가 지나치게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의 컨츄리 리스크(country risk)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시장으로써 인도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2) EU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EU는 인도와의 관계에서 네 가지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EU-인도 간 경제 및 국제관계 협력 확대이다. 즉 인도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인도가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거대한 시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EU는 인도와의 협력을 경제적·국제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다.

둘째, EU-인도간 협력은 각 지역의 안정성과 발전에 매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인도는 EU의 확대(enlargement)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EU는 남아시아 지역이 평화유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간 협력은 지역 안보 및 안정에 매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신 국제관계의 이해 창조이다. EU와 인도는 세계 체제가 양자간이 아닌 다자간 체제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공통적 국제관계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EU는 인도를 지지함에 따라 EU가 대외 및 국제관계에서 같은 지지를 인도로부터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WTO 등 다자간 국제무역 체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하에서 EU는 인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력은 양자간에 협력자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세계 질서에 영향력을 증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주의, 양자주의, 인권 등에서 EU는 인도의 협력을 받아 세계 무역 체제는 물론 정치체제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U는 인도와의 협력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EU-인도간 외교 메커니즘 강화, 둘째 정치적 협력 심화, 셋째 인력 및

문화교류 확대, 다섯째 경제정책 및 협력 확대, 여섯째 무역 및 투자확대이다.

이러한 EU의 대인도 전략은 양자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군사적 정치적 분야까지 폭 넓게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양자간의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EU의 대인도 투자도 증가할 것을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양자간의 협력이 중국, 미국 등의 국가와 이해관계가 복잡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EU가 인도에 무기를 판매하는데 대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EU가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인도를 지지함으로 인해 인도는 점차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은 EU의 대인도 정책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EU의 대인도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겠지만,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5.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평가와 한국 통상전략에의 시사점

가.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요약

인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EU와의 협력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장확대, 지역 통합 및 영향력 확대, 중국견제 및 미국과의 관계, FTA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인도와의 협력을 통하여 거대한 잠재적 시장으로 선점한다는 전략과 더불어 아시아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면에서 인도와의 협력관계에서 큰 이해관계의 격차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EU는 인도와 경제협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일부 전략이 미국과 겹치거나 미묘한 갈등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EU는 인도에 대한 통상협력에서 미국

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매우 복잡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적 헤게모니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협력 등은 미국, 일본, EU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묘한 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면서 인도와의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제협력도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의 과제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관계와 인도의 제조업 보호라는 문제 때문에 중국은 인도와의 FTA 체결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이러한 국가와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1991년 개방경제로 개혁을 실시한 이후에도 주변국가와 점진적으로 교역장벽을 완화하는 소극적인 통상정책을 실시해왔던 인도는 2000년 이후 주요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420억 달러에 불과했던 인도의 교역은 2006년 3,500억 달러로 확대되어 인도 GDP에서 상품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달한다. 또한 1991년 3월까지 1억 7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총 FDI는 2006년 220억 달러로 치솟았다.

먼저 미국과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1998년 핵실험 제재 중에도 증가세 유지), 2006년 수출 200억 달러 및 수입 111억 기록, 무역수지는 수입액과 비슷한 100억 수준(98억 달러)을 기록하여 대미 교역은 인도 경상수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인하를 위한 상품교역 자유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IT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수출과 투자유치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미국과는 투자협정 체결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 밖에 정치·군사적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군사협정이나 핵에너지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policy), 과학기술협정, 마-인 농업 지식이니셔티브, 고위급에너지회담, 군사협력 부문에서의 차세대전략적파트너십(NSSP: next steps in strategic partnership) 등을 통해 양국간 공동의 관심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무역 및 투자에서의 양국간 관계 역시 긴

밀해지고 있다. 마-인 경제회담, 하이테크협력그룹, CEO포럼,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마-인 농업동맹 등 제도화된 틀 안에서 진행되는 협력이 수년내 실질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은 2001년부터 해마다 1.5배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제조업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 무역수지적자는 1.8배로 압도적인 증가세를 기록(2006년 적자가 65억 달러를 넘음)하여 대중 교역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해외 직접투자의 투자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 실행국가이나 중국의 대외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아시아 국가 중 인도만 예외로 1991년부터 2007년 3월까지 누적투자 규모는 360만 달러에 불과했다.

현재 인도는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만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실질적인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인도 입장에서는 FTA는 될 수 있는 한 연기하고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지역무역협정(RTA)쪽으로 FTA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전략이 추진된다면 인도는 공산품분야에서 전면 개방을 할 필요없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되고, 또한 양국간 무역협정이 체결된다는 점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과의 협력은 민간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간 교역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03년부터 수입이 수출 증가세를 초과하여 2006년 37억 달러 수출에 수입이 49억 달러로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인도는 일본과의 FTA시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비롯하여 후생효과가 가장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2007년부터 빠른 속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들어 지난 7월 일본 대표 기업 22개사로 구성된 일본 비즈니스 사절단의 방문,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아베 총리의 국빈 방문, 일본-인도 FTA 협상 추진 등 일본의 대인도 외교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국은 현재 1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규모를 2010년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FTA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인도 투자도 총 투자 중에서 4.8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인도 기업의 일본 진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도는 자동차 부품 산업, 정보기술 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 보건서비스 부문의 전문인력이 일본에 진출하여 고령화된 일본 사회의 인력난을 보충하고 저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와 EU 회원국간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지녔으나 EU와의 관계는 1963년 당시 6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경제공동체(EC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개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부터였다. 이후 EU와 무역, 통상 뿐 아니라 문화면에까지 다각적인 교류를 유지해온 인도는 현재 EU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해관계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로 공표한 6개국(인도,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중국) 중 하나이다.

인도-EU간 교역은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EU는 인도의 최대 교역 대상지역이 되었으며, 투자에서도 EU는 모리셔스에 이어 인도의 두 번째 FDI 유입국이다. 기업인 대표들간의 정기적인 회담(India-EU business summits)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양자간 포괄적인 FTA가 논의되고 있어 양자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인도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EU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요청하는 한편 폐수처리, 재생, 위험폐기물 관리 등 인도가 취약한 환경분야에서 앞선 EU 기업들의 진출을 권장하고 있다.

나. 한국 통상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인도 대외 통상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인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인도의 양자 통상관계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도는 한국, 일본, ASEAN, 중국 등 미국을 제외한 주요 통상국들과의 교역에서 만성적인 무역수

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의 교역은 지난 2003년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2006년에는 9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연평균 20%를 넘는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인도는 2006년 27억 달러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일본과의 교역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03년부터 수입이 수출 증가세를 초과하여 2006년 37억 달러 수출에 수입이 49억 달러로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가장 빠르게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은 2001년부터 해마다 1.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 무역수지적자는 1.8배로 압도적인 증가세를 기록(2006년 적자는 65억 달러를 초과)하여 대중 교역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소폭의 적자로 반전하였으나 인도의 경상수지가 오랜 기간 흑자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상품수지의 적자를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해외 송금)가 보완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의 통상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수출 확대와 장기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원동력 발전 및 개발, 그리고 인력의 해외수출 확대를 통한 이전수지 증대 및 실업난 해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에 대한 수출 확대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에서도 양허 수준을 가지고 민감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최근 태국과의 FTA에 따른 82개 품목의 조기자유화로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선 이후 인도가 상품시장 개방에 매우 신중해져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인도와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적인 무역 및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에너지 및 자원, IT, 바이오 및 의약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IT, 자동차, 바이오 및 제약 등에서, EU는 에너지, IT, 인프라, 보건 및 제약,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협력하는 분야는 IT, 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 및 의약이다. 즉 인도는

통상 협력 중에서 지식기반 산업 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품 수출을 통한 시장 진출 외에 IT, 보건 등의 전문인력 수출을 통한 서비스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인도와의 협력분야를 선정하는데 있어 인도의 관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표 4-15. 인도-주요국과의 핵심 협력 추진 분야 종합

협력분야	미국	중국	일본	EU
농업	농업지식 및 기술			
에너지 및 자원	에너지 다각화, 청정석탄기술, 발전, 신연료 개발	국제송유관건설, 원유비축시설개발		에너지, 전력수출 및 배송
과학기술	우주, 기상관측, 연구인력			
I T	공동 교육 및 훈련, S/W개발, 인력교류	S/W, 신상품 공동개발, 공동교육 및 훈련	S/W개발	S/W 개발
인프라	도로, 교각, 항만, 경제특구			항구, 공항, 도로건설
통 신	통신기기 및 PC, 연구개발, DCMA & GSM 서비스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기술이전	
소매업	합작사업			
바이오 의 약 보 건		면역접종, 임상실험, 경제특구, 신약개발	제약 및 화학 공동사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인력이동	전문인력 활용, 폐수처리, 재생, 공해억제, 위험폐기물 관리, 오염도 측정 및 감독, 환경컨설팅 등
금 융		금융감독체계 구축		

주: 제3장 핵심 협력 및 유망분야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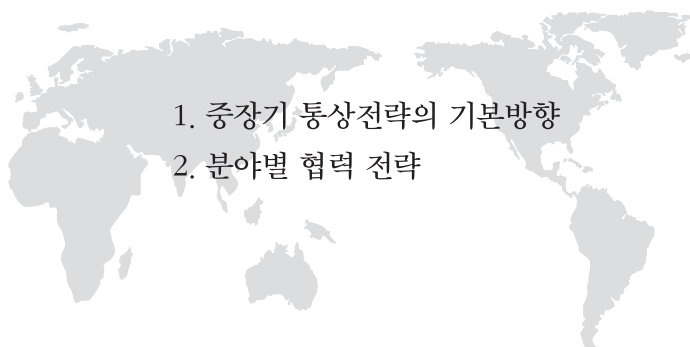
인도 국내 경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지닌 반면 매후 낙후된 분야가 공존한다. 무엇보다도 적절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도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국내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에 정부의 관심이 매우 크다. 현재 인도 정부가 인프라 건설을 위해 향후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민간 및 외국 자본을 통해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도로, 항만의 건설 및 전력공급 등 한국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현지투자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거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프라 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인도와 파트너관계를 구축하여 시장 진출과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협력방법 또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자동차 산업과 각종 소비재로 인도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으나, 인도가 최근 주요국과 다각적인 협력을 전개함에 따라 한국도 가장 실리적인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T, 항공산업 등 서비스산업에서 기업인간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인도의 에너지 산업에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는 형태로 공동의 개척 및 장기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부분적으로 인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5장

중장기 통상전략 기본방향 및 분야별 협력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협력 전략

중장기 통상전략 기본방향 및 분야별 협력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1) 거대잠재시장

인도는 11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으로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4위의 경제규모를 기록하여 소비시장으로써의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중장기적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중 하나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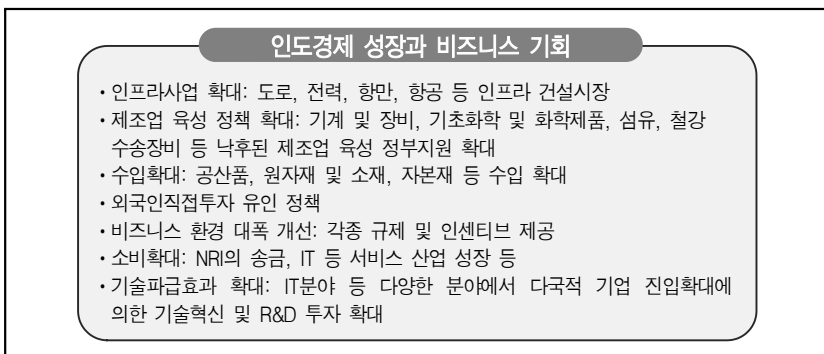
하지만, 산업구조상 제조업이 취약하고, 인프라 부족과 독특한 상관습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일본 등을 앞서 제조업 분야에서 인도 시장을 성공적으로 선점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선점식 투자, 적절한 브랜드 마케팅, 현지화 전략 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2위, 백색가전 분야에서 1,2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성과는 매우 높다.

인도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 기업들이 단순히 인건비 등의 요소비용 절감을 위해 진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인건비 수준은 거의 동남아 수준과 비슷하며,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거리가 멀어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든다. 따라서 단순히 인건비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은 인도보다는 동남아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이나 ASEAN과 수직적 분업관계 모델을 인도에 적용한다는 것도 인도의 제조업 부진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인도는 경제의 급성장속에서 중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개인소비로 공급증가가 소비수요 증가를 따라 잡지 못할 정도로 거대 소비 시장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인도에 생산시설 투자와 소비재와 자본재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프라 개선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정책 확대에 따른 사업 확대, 수입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 정책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대폭 개선, 소비확대, 기술과급효과 확대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도 진출이 요구된다.

■ 그림 5-1. 인도경제 성장과 비즈니스 기회 ■



자료: 이순철 외. 2006. 『인도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재정리.

2) 남아시아의 전략적 허브지역

인도는 세계 인구의 1/4인 15억 명의 인구, 5%대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신 중산층이 점차 증가하고, 역내교역도 부쩍 늘어남에 따라 내수시장이 서서히 형성되면서 새로운 잠재적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물론 남아시아는 종교, 국가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국가간·지역간 소득 격차가 심하고, 전반적으로 제조업 발전단계가 낮고 보호 장벽이 높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면서 남아시아가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남아시아에는 이 소비의 잠재성과 인력자원이 풍부하여 향후 세계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를 위해 개방과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제조업 육성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 제조업관련 사업들이 끊임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남아시아의 맹주로 통하고 있는 인도는 자국의 시장경제확대와 경제발전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적 동반자 협정(CEPA) 등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으로써는 남아시아가 우리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아시아의 대부분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500 달러도 안되고, 우리와의 교역수준도 2% 내외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남아시아와의 교역은 연평균 21%씩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아시아가 급속히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는 남아시아와 지역협력을 해야 할 처지에 있다. 남아시아가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더불어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주요한 허브라는 점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따라서 인도와의 협력이 잠재적 거대 남아시아 시장 잠재성은 물론 아프리카 유럽, 중동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

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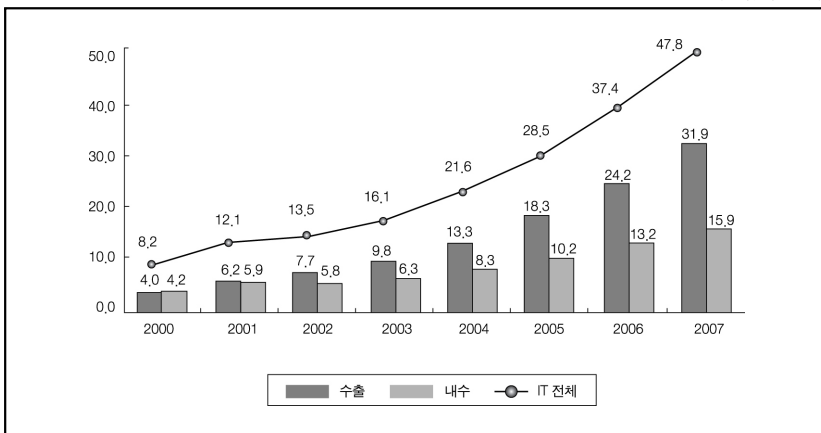
3) 지식기반산업부상

가) IT산업

인도는 미국 다음의 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IT산업이 앞으로 인도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의 IT 산업은 1998년부터 연평균 30%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2007년 현재 총 478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2001년부터 내수를 앞지르기 시작한 수출은 2007년 IT 시장의 67%에 달하였고, 이중 IT-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및 소프트웨어 수출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인도의 IT-BPO 및 소프트웨어 수출의 분야별 실적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수출 181억 달러, BPO 아웃소싱 83억 달러, IT서비스 49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36%, 31.7%, 22.5% 성장했다.

그림 5-2. 인도 IT산업 성장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이처럼 인도 IT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2001~06년간 전세계 IT 관련 아웃

소싱 시장에서 차지하는 인도 IT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62%에서 65%로, BPO 분야는 39%에서 4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포춘지 선정 전세계 상위 500대 기업 중 80%에 해당하는 400여개 기업이 인도에 지사를 보유하거나 아웃소싱을 의뢰하는 등 총 660여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당 매년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아웃소싱 계약을 맺고 있다. 인도의 IT산업은 전통적으로 축적된 기초 과학 지식이 풍부하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저임의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 인도 정부가 집중적인 Software Technology Park(STP) 등 IT 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기업 차원에서도 미국식 개발체계/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세계적인 SW 품질 보증 획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점 등이 인도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주요 고객인 미국과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어 시차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최근 인도 숙련인력 부족, IT 인력 임금 상승, 중국, 동유럽, 남아프리카 등의 저임금 국가들의 추격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나, 숙련된 IT전문인력의 기술수준과 세계적인 수준으로 부상한 Infosys, Wipro, Tata Consultancy와 같은 국내 IT기업들이 존재하는 등 IT강국으로서 인도의 입지는 향후에도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asscom-Mackinsey 2005년 보고서는 인도의 2010년 IT산업은 600억불 수출이 가능하고 약 230만 명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BT산업

인도는 일찍이 농업 및 보건분야 발전에 있어 BT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82년 국가BT이사회(National Biotechnology Board, NBTB)를 설립하였고, 1986년 동 이사회를 정식 정부 부처(Department of Biotechnology, DBT)로 승격시켰다. 이후 동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학 위해 2005년 국가BT개발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카르타나카주에 2,200만 달러 규모의 BT파크 설치를 승인하였다. 현재 인도에는 약 320여 개의 BT 기업이 있으며 그중 카르타

나카州에 175개로 가장 많은 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미 BT파크를 조성한 하이드라바드와 방갈로르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DBT는 줄기세포, 동물, 해양, 식품 및 영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BT 연구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과 인도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의 BT산업은 2004년도부터 3년 연속 35%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으며, 2005/06년 전년도에 14억 5,0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였다.

BT 연구·개발에 R&D 예산의 큰 부분을 할당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인도는 세계적인 개발 선발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2007년 5월 인도 정부는 국가바이오표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주도하에 바이오표제 생산을 장려하고 2009/10년까지 연평균 35.1%씩 성장함으로써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2007년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전체 농지당 생명공학 농작물(biotech seeds)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국가가 되었고,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와 함께 농업공학(agribiotech) 연구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¹⁵⁾ 그 밖에 인도의 BT 기업들은 저비용의 생산구조를 활용하여 제네릭 바이오의약품(generic biopharmaceutical)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인도는 BT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 NT산업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y, NT)산업은 나노미터¹⁶⁾ 크기의 물건 및 시스템을 생산하고 응용하는 산업을 총칭하며, 따라서 전기·전자 엔지니어링, 컴퓨터공학, BT, 화학 및 물리학 등 과학의 거의 전 분야와 결합할 수 있는 산업이다. 2003년 75억 달러에 불과했던 전세계 NT 시장 규모는 연평균 30%가 넘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2008년에는 287억 달러로 약 4개 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NT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인 미국, 일본에서 동 분야 연구에 대한 투

15)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 2007, 2

16) 나노미터(nanometer)는 10억 분의 1미터에 해당한다.

자는 각각 18억 달러, 11억 달러에 이르고, 이어서 독일과 한국이 각각 3억과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 현재 NT산업 규모는 1억 달러에 불과하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있지만 인도 정부는 NT산업을 지난 20년간 눈부시게 성장하여 세계적 수준에 오른 IT산업과 같이 인도경제성장을 이끄는 신동력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인도 정부는 제10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과학기술부(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주도하는 나노소재공학및기술주도(Nanomaterials Science and Technology Initiative, NSTI) 프로그램에 2,200만 달러를 책정하고 약 100여 개의 연구사업의 진행하는 등 동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큰 성공을 거둔 IT산업의 미국과의 협력모델에 따라 실리콘밸리와 인도내의 연구센터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Nanotechnology Research and Education Foundation과 같은 비영리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있다.

벤처자금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NT가 성장하기에 시장이 미성숙한 점 등은 인도 NT산업 발전에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수학 및 과학기술 교육을 받은 전문엔지니어 수가 많고 이들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컴퓨터 및 관련 기기 운영 비용이 저렴한데다 정부가 강력한 육성의 의지를 갖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며 따라 NT도 IT처럼 인도경제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한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기본방향

1) 양국간 산업구조 보완관계 활용 극대화

양국간 무역 통계를 기초로 교역비교우위를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류 등에 비교우위에 있는 반면 인도는 비금속광물, 의류, 곡물 등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간 산업구조가 매우 보완적 관계라는 보여주고 있다. 즉 양국간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양

국간 산업협력이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산업 구조 조정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내구소비재, 기술 등을 공급하고 인도는 기초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또한 자원, 재료 등 원자재 공급은 물론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하다.

■ 표 5-1. (RCA분석에 따른) 한-인도간 교역확대 가능분야 ■

구분		우리나라	인도
교역제품	높은 비교우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류	비금속광물, 의류, 곡류, 어류 등
	낮은 비교우위	섬유, 화공, 철강, 금속제품	섬유사, 직물, 모피
비교역 제품	비교우위	일부가공식품, 철도, 특수선박, 오디오 등	철강, 고무제품, 유기화학물

자료: KIEP(2005), “인도의 대외 경제정책과 한-인도경제협력 강화방안”.

한편, 양국간 교역품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양국간 교역을 확대해 나갈 잠재성이 매우 높다. 3장 [표 3-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6년 양국의 교역품목을 비교해보면 매우 제한적인 부문에서만 수출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과 인도의 전세계 수출입은 HS 4단위 수준에서 1,200여개 품목에 이르고 있지만 양국의 교역은 약 600여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도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양국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최대 600여개 품목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정부는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개방전 80%대의 관세율을 최근 10%대까지 하락시켰으며, 외국인투자 한도도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 자동 승인 제도로 전환하여 기업투자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양국간 교역을 우리 측은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인도는 원자재 및 기초산업 제품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양국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적극 활용함에 따라 최근 5년간 대인도 수출이 3.5%, 수입이 2.1배 상승하는 등 대인도 교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철강 등 내구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 투자의 시너지 효과 확대

인도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과 우리의 우수한 기술의 현지투자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11억 인구와 우리의 1/7~1/8 임금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제조업의 낙후되어 전형적인 초과공급이 존재하고, 인프라 개선사업, 제조업 육성 정책 등 시장 진출 기회 확대되고 있다.

향후 투자 가능분야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개선 사업, 에너지 및 발전 산업, 섬유가공분야, 농식품 가공분야, 유통업, 내구소비재 등 제조업 분야, 정보통신분야, 천연자원개발 분야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개선사업은 인도경제 발전을 안정적이면서도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인도정부도 인프라 건설 및 확충규모가 3,500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도로부문에서는 황금사각고속도로 건설 및 개선사업(90% 완공), 10,000km 4차선 고속도로 건설, 20,000km 2차선 고속도로 건설, 그 외 우회도로, 지방도로, 서비스 도로 등이 계획되고 있다. 철도는 최근 화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화물전용선을 확충하고, 도시내의 도심철도 건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항만은 항만 효율화를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공항은 민영화를 통한 국제공항 개선 및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간 연결을 위한 공항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전력부문은 인도정부가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화석 및 석유에너지 사업, 지역간 전송 시스템 사업, 수력,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공급 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인도정부는 매년 8%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6년 12만 7,700MW 전력생산량을 2032년까지 77만 8,000MW로 생산량을 늘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5-2. 최근 인도정부가 발표한 인프라 사업 사례

도로	10,000km 4차선 고속도로 건설(NHDP)
	동북부지역 7,600km 도로개선 및 신도로 건설
	20,000km 2차선 고속도로 건설(NHDP Phase V)
	우회도로, 서비스 도로, 차선분리 시설 등 도로관련 시설 개선 및 개발사업(NHDP phase-VII)
철도	동부화물전용선(Ludhiana-Son Nagar, 1,280km)
	서부화물전용선(JNPT-Tughlakabad/Dadri, 1,483km)
	East-West, North-South, East-South and South-South 연결망 (발표 예정)
	뉴델리, 뭄바이, 방갈로 등 도시철도 건설
항만	13개의 항만 효율화 사업(266.2억 루피) 계획 발표
	24개의 항만 효율화 사업(791억 루피) 계획 (발표 예정)
공항	Navi Mumbai, Kerala의 Kanner, Sikkim의 Pakyong 등 공항개선 및 개발 사업 추진 * 뭄바이 및 뉴델리 국제공항 개선 및 확장 사업은 현재 추진 중
전력	4,000 MW Ultra Mega Power 사업
	2012년까지 11,450MW에서 37,150MW 지역간 전송 시스템 완비
	비전력 사업 399잠재적 사업 계획 및 조사(107,000 MW), 이 중 162개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47,930MW)

주: NHDP는 인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National Highways Development Project의 약자임.

자료: WTO (2007), Trade Policy Review, Government of India 자료 직접 정리.

이러한 분야에 이미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령 두산중공업인 경우 인도내에서 가장 큰 발전사업을 수주하였다. 두산중공업은 인도 뭄바이의 문드라(Mundra) 화력발전소 건설하기 위하여 12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여 4,000MW 생산가능 초대형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동 기업은 인도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담수 플랜트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또한 동기업의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도 인도 건설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인도 굴삭기 공장 건설을 위한 법인도 설립할 예정이다.

2002년 9월에 개통된 델리 지하철에 우리 기업인 로템이 도시철도 차량을 공급하였으며, 향후 지하철 구간 확장 공사에도 차량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삼성건설이 동 지하철 구간 확장 공사를 수주하였다. 쌍용건설 역시 제3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의 경제특구 진출도 고려할만 하다. 인도정부는 2005년 6월 SEZ설치 및 입주 시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입주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Act, 2005)을 제정하고 2006년 2월에 경제특구시행령(Special Economic Zone Rules)을 발효하였다.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편중적인 성장을 하는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발전과 기대이하의 인프라시설 개선 등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산업투자를 통한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확대의 시급한 점도 SEZ 개발에 대한 요구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2005/6년 새로 도입된 통합법과 세제혜택으로 처음에 도입될 당시 150개 정도의 SEZ만을 허가하고 40만 달러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넘어서 2007. 1월 현재 267개의 SEZ가 승인되고 304개가 허가를 기다릴 정도로 2005/6년 경제특구법은 경제특구 개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와 행정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SEZ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SEZ에 입주한 기업은 외환순수취의무(positive net foreign exchange earning)만 달성하면 되고 제조, 무역,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므로 SEZ로의 입주 수요는 끊임없이 폭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인도의 SEZ 진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고해야 할 것이다.

3) 우수한 인력 교류 및 활용

국제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과학자와 기술자의 능력 세계 최고 수준(1위), 경영교육기관의 질 6위, 외국 기술허가의 보급 9위, 수학 및 과학 교육의 질 11위 등으로 나타났다¹⁷⁾.

인도에는 15,000여개의 대학이 있으며, 2005년에만 8,700명의 박사를 배출

17)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

하였다. 2003년 기준 대학졸업자수는 과학(science) 전공자 327,000명, 상업 372,000명, 엔지니어링 및 기술 127,000명, 의약 38,000명이며, 대학원 졸업자 수는 과학 74,000명, 상업 94,000명, 엔지니어링 12,000명, 메디슨(medicine) 8,000명이다. 2003년 총 대학원 졸업자수는 54,000명이며, 대학원과 대학졸업자 수를 합한 총 졸업자수는 259,000명에 이른다. 이러한 졸업자수와 달리 직업학교, 특수대학원 등의 전반적인 졸업자수는 몇 십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들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¹⁸⁾. 이러한 인력들이 인도의 IT, 제약, 식품, 우주항공 등 인도의 주력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기초 및 응용과학 기술 역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BT, NT, ET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하고 높은 기술의 지식기반을 상호 활용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인도에는 제약, 항공우주, BT, 기초과학분야 등에 세계 최고의 과학 및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인도와의 적극적인 인력 협력을 통해 우리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 역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분야별 협력 전략

가. 시장확대

1) 한 · 인도 CEPA 추진

인도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양국간 협상 중에 있는 한 · 인도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간 CEPA 협정을 할 경우 GDP는 0.17% 증가하고, 대인도 수출은 80% 증가하고, 대인도 수입은 30% 증가해, 양국간 교역 활성화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유태환 외,

18) 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5). 한국은 인도와의 CEPA로 33억 달러 이상의 교역증대, GDP 1조 3천억 원 증가, 국내고용 약 4만 8천 명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CEPA 조기 타결을 통해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실질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여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먼저 거대인도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크다.

■ 표 5-3.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2004년도 국내기준) ■

구 분	변동액
국내총생산(GDP)	↑ 0.17%
1인당 국민소득	↑ 3만 원
가구당 평균소득	↑ 5만 원(0.17%)
대인도 교역량	↑ 33억 달러(60%)
대인도 수출	↑ 28억 달러(80%)
대인도 수입	↑ 5억 달러(30%)
무역수지	↑ 23억 달러
국내 취업자수 (제조업)	↑ 4만 7,600명

자료: KIEP 보고서 및 외교통상부 공청회 자료.

한편, 한·인도 양국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 5~6일간 서울에서 CEPA 공동연구를 최종합의하였으며, 2월 서울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간 정상회의에서 3월부터 CEPA 공식협상을 개시하여 늦어도 2008년 초에는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¹⁹⁾.

한국과 인도 양국이 CEPA 협상을 공식 개시하게 됨으로써, 양국은 GATT 및 GATS 정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모든 교역과 비관세장벽의 한계를 넘어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투자·경제 협력, 제도적 협력 등 양국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을 목표로 하는 FTA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9)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인도내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국간 합의에 의해 상품무역자유화의 일반적 개념인 FTA를 벗어나 경제·기술 협력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포괄한 협정을 의미

구체적으로 한·인도 CEPA 협상의 주요 내용은 △ 공산품 및 농축산물을 포함하는 상품교역분야 △ IT관련 서비스, 금융, 통신, 건설, 운송 등 상당한 범위의 서비스 분야 △ 무역원활화 조치 △ 투자분야 △ 이중과세방지법, 과학 기술협력, 관세협력, 기업 및 전문인력의 이동, 기업간 협력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인도와의 CEPA협정을 체결은 우리나라 수출주도형 대외개방정책에 부흥하는 것으로써 남아시아지역의 시장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인도와의 FTA체결은 미국, 유럽 다음으로 거대경제과의 체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높다. 무엇보다도 인도와의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이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2) 투자확대

가) 인프라 투자

인도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도로, 고속도로, 다리, 항만, SEZ 등 다양한 분야에 외국인 투자 100% 허용하였으며, 민간합작 투자 장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도정부는 인프라 개선사업에, 향후 5년간 3,200억 달러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 및 방면에서 인프라 개선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다. ①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scheme)을 통한 고속도로, 교량, 철도 및 대중교통, 공항, 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② SEZ 개발, ③ 세계은행, ADB, IFC 등의 은행 자금 활용 투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분야에 우리의 기술협력, 전문가 파견, 기술자 교육, 해외인력 연수, 타당성 조사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농업

인도의 농업은 GDP의 20%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도의 총 식품소비규모는 약 1,900억 달러, 가공식품 소비

규모는 1,000억 달러로 총 식품소비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우리 기업이 진출 가능한 가공식품(즉, 부가가치화된 분야)분야의 소비규모는 약 400억 달러로 추정된다(2004년 기준). 가공식품분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매년 7.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인도 식품시장은 매년 7~10% 이상의 성장을 보여 2015년에는 약 1,400억 달러, 2020년에는 약 2,0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식품시장은 ① 고소득 중산층 확산, ② 서구 식품 접촉 증대, ③ 도시 소매업 지속 변화, ④ 패스트푸드 체인망 증대, ⑤ 도시화 및 여성 근로자 증가, ⑥ 수입대체 식품 가공산업 확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코카콜라, 펩시, 하인즈, 젤로그 등 우수 식품관련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로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로는 롯데제과만이 현지에 투자하고 있지만, 오리온 등 몇몇 제과업체들이 껌, 비스킷, 파이 등을 위탁가공 수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급 품질에 낮은 가격과 더불어 우리 제품이 인도인의 식품선호도와 일치하여 지속적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진출방안으로는 국토의 넓이, 도로 및 운송 등을 포함한 물류 및 인프라 시설, 지역적 정치·사회·문화·종교 등을 고려하여 거점도시별 진출이 효과적이다. 특히 열악한 인도 가공식품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의 농식품 가공률이 2% 이내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에 절대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소득 증대와 더불어 식습관이 점차 변화됨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인도 가공식품 진출에 대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력가능분야를 구분해 보면 ① 교역활성화 JSG 운영, ② 농업기술 교류 및 교역 지원(농가공 및 마케팅, BT 및 수자원관리, 농기술, 유전자관련 농법, 품종관리 및 씨앗개발 등), ③ 농업가공분야 투자 진출, ④ 인도농업 수출 가공구개발, ⑤ 식품가공기계분야 진출 등이 있다.

다) 섬유

인도 섬유산업의 규모는 약 350억 달러로 인도 GDP의 6%와 수출액의 12%, 총 노동력의 20%를 기여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최대 면화 생산(세계 3위, 900만 ha), 실크 생산 세계 1위 등 세계적인 섬유 생산국이다. 섬유산업의 시설 및 기계설비는 매우 노후화되어 있거나, 매우 전통적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수동직기 의존율은 현재도 12% 수준이다. 면직물과 섬유제품은 각각 18.6%와 10.2%의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모직, 견직 및 합섬 섬유분야는 -0.1%의 상당한 성장 둔화세가 관찰되고 있다(2005년 기준).

인도 섬유산업의 강점은 방직 생산능력, 강한 원자재 기반, 막대한 수의 숙련공의 인적 자원이며, 약점은 다양한 목화의 종류로 인한 품질 저하, 오랜 동안 왜곡된 재정정책 지원, 낮은 기술 수준, 높은 에너지 비용 및 경직적인 노동법, 취약한 인프라 구조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인도 섬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품목은 HS54(인조장 섬유), HS 59(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HS 58(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과 HS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등이 있다.

그 외 인도섬유분야에 협력가능한 분야는 이미 노후화되거나 경쟁력이 없는 공장을 인도에 이전할 수 있다. 방직기(8448), 방직준비기(8445) 등 인도는 섬유기계류 진출 시장으로서 상대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출도 고려해 볼만하다.

3) 지역경제통합 협력

인도는 남아시아경제통합 및 경제자유화공동체의 선도국가로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회원국이다. 또한 1975년 방콕협정에 조인하였으며, BIMSTEC, ASEAN 등 주변국가와 다자간/양국간 경제통합 및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와의 협력은 주변국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남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인도는 아프리카, 중동,

유럽의 허브지역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와 FTA와 동일한 한·인도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하고 있으며,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SAARC와는 제14차 SAARC 정상회의(07.4.3~4)에 옵저버로 최초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SAARC 국가와 농촌개발, 물류센터설립, 빈곤퇴치를 위한 기술교육, 건설기술자 연수, 중소기업 경영자 연수, 인적자원개발 사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우리 기업의 남아시아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IT, 개발경험 전수 등도 좋은 협력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4. 한국의 대SAARC회원국과의 수출입 현황

(단위: 천만 달러, %)

국가	2005		2006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인도	4,597,837	2,112,076	5,532,797	3,640,789
파키스탄	661,876	315,591	673,153	340,925
방글라데시	611,137	45,495	648,316	68,894
스리랑카	204,871	38,083	193,245	38,711
네팔	13,756	778	12,390	936
부탄	3,087	36	1,821	0
몰디브	2,164	4	3,219	17
총액	6,094,728	2,512,063	7,064,941	4,090,272
(비중)	2.1	1.0	2.2	1.3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서비스업 협력

1) IT

인도 IT관련 산업은 영어사용, 저임의 풍부한 인력, 축적된 기초과학 지식, 정부의 IT 산업 육성정책, 미국식 개발체계 및 교육, 미국과의 지리적 특성 등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IT분야 매년 30%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나라에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포춘지 500개 기업 중 3/4가 인도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매년 16만 명 이상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 인도의 IT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5번째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매년 동분야에 20%씩 성장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화신청자수 2007년 3월 2억 700만 가입, 이중 이동통신 1억 6,600명 가입하여 거대한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와 우리의 강점인 하드웨어를 적극 활용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04년 기준 인도의 IT 신규인력은 16만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의 전체 IT 인력 15만 명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2007년 IT분야 총 고용 인력은 163만 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인도 IT 인력의 우수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SW, 보험, 카드, 제약, 통신, 자동차, 항공운수업, 의료, 금융 분석 등 IT 서비스관련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인력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력가능분야는 ① 은행, 안보,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제공, ② IT 및 ITES 관련 투자 확대, ③ 교육의 IT응용,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버 범죄 및 안보 연구 개발, 사이버 사고관리, 고도의 전자, 반도체, 항공우주 등 분야 협력, ④ 통신 및 컴퓨터 하드웨어 제공, 주요 통신망 시설 제공, R&D 협력, 인터넷 시설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2) 금융

인도의 금융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본시장이 없는 중국에 비해 인도는 영국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완벽한 금융시스템을 구비했고, 세계 금융계의 인적 자원을 장악할 정도로 금융 선진국이다. 최근 인도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인도 부자 증가율이 19.3%로 한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고, 한국과 달리 현금이나 예금의 보요 비중은 낮고 주식과 대체투자에 대한 비중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도인들은 금융소비형태는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부동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산은 금을 중시한다. 인도 자산 운용시장은 매년 60% 이상씩 성장하고 있을 정도이나, 그 규모는 한국의 1/4수준이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펀드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역외펀드의 허용으로 인도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인도 뮤추얼펀드 시장 규모가 지난 3년간 2배 이상 성장하여 총 운용자산이 48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다만 외국 금융사(다국적 기업)가 인도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현 금융시스템하에서는 인도 재벌의 갑작스러운 문제 발생 및 금융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2006년 현재 인도에는 40여개 외국계 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은 225개의 지점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16개의 외국 증권사, 15개 외국기업의 뮤추얼 펀드에 진출해 있다²⁰⁾. 인도의 은행분야는 외국은행이 진입할 수 있으나 소유권 74%까지 허용되어 있으며, 인도의 은행시장의 대부분이 정부소유(80% 이상)임에 따라 외국은행의 진출이 쉽지 않다. 향후 잠재력이 높은 보험 분야도 소유권의 49%까지 진출 가능하다.

협력가능 분야로는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우선 증권업협회의 진출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는 미래에셋이 현지 자산운용사가 진출해 있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증권업 협회에서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인도 시장에 연락사무소와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관 확보 및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

인도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세련감이 있고 이미 세계적인 player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바, 틈새시장으로 진출하여 특화해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 에 따르는 중산층 급증으로 Mutual Fund와 주식 투자분야가 유망하다. 특히 인

20) 권경덕 외(2006), 『우리나라 증권업계의 동남아·인도 금융시장 진출 방안』, KOTRA

도의 부유층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중산층도 2~3억 명으로 추산되며, 화이트칼라 계층을 중심으로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인도의 선진 금융시스템의 근간인 인력을 교류하고, 보험 및 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소매업

인도의 소매시장은 세계 2위의 소매업 잠재력 보유하고 있다. 인도의 소비는 GDP의 60%를 소비하는 높은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조직화된 소매업은 전체 소매업의 3%로 매우 낮다. GDP 대비 가계소비는 2003년 기준 중국 44.5%에 비해 인도는 64%로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11억 인구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1.6%씩 증가하여 생산계층의 지속적인 인력공급은 물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계층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이러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휴대폰, 승용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소매업 성장은 매년 25~30%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2,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AT Kearney에 의하면 글로벌 신흥 유통시장 매력도가 2006년 기준으로 러시아(2위), 중국(3위), 베트남(4위)을 앞서 1위를 차지하였다²¹⁾. 현재 식료품의 신업태화 비율은 1%에 불과하지만, 신업태 부문은 연평균 25~3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²²⁾

특히 인도정부가 향후 소매업부문을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도 소매업 시장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단일브랜드에 한하여 51%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1~2년 이내에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문구류 등에 대한 복수 브랜드 진입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영국, 유럽 등 많은 다국적 소매업체를 가진 국가들이 개방 압력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인도 정부도 조직화되지 않은 소매업 부문에 대한 개혁과 자본 및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머지않은 기간내에 전분야의

21) AT Kearney, 2006,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22) Citigroup

복수 브랜드 진입 허용 등 완전개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가능분야는 ① 직접 투자, ② 프랜차이즈 경영 등이 있다.

4) 항공산업

인도의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여객서비스는 3년동안 24%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10년까지 2005년 7,400만명 여객수송에서 1억 이상으로 증가 예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항공화물도 2010년까지 336만톤의 수송(2005년 138만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항공수요 급증과 더불어 인도정부는 항공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개방하였다.

협력가능분야는 ① 공항개발 사업 협력, 항공제조업 협력, 항공기술 소싱, 각종 부품 조달 허브, ② 항공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③ 민간항공 서비스 사업 협력, ④ 교육 및 훈련 및 컨설팅, ⑤ 카고 시설 개발 등이 있다.

다. 발전 및 에너지 산업

인도는 세계의 3.7% 에너지를 소비하여 세계 5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다. 또한 세계 1인당 최저 에너지 소비국으로 잠재성이 높다. 만약 매년 8% GDP 성장을 할 경우 매년 5.2%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0년 경 석유 90% 수입의존(중국 74%), 가스 수입의존도 40%(중국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중국과의 에너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양국간 에너지 안보 및 개발 협력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도정부는 핵에너지 3,360 MW에서 2020년 20,000 MW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에너지 및 발전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및 발전 산업에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① 에너지 안보 협력,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태양,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 즉 에너지 개발 및 생산 분야 ② 에너지 전송, 유통 및 활용 분야 협력, ③ 신에너지 개발(수소에너지 개발), ④ 장기적으로는 민간용 핵에너지 개발, ⑤ 가스파이프 라인 공사(이란,

중앙아시아, 미얀마 등 연결), ⑥ 에너지 분야 기술 및 과학분야 지원 및 정보 교류, ⑥ 그 외 에너지 효율성 증가 방안, 에너지 저장, 정제 에너지, 구에너지 시설 현대화 등이 유망하다.

라. 지식기반산업

1) 과학 및 기술 개발 협력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인도는 연간 5천명의 박사와 20만 명의 기술자를 배출하는 등 풍부한 과학기술인력과 함께 기초과학분야에서 높은 과학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 및 생산기술력을 갖춘 한국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특히 기초과학, 우주항공,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인도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경우 인도의 풍부한 과학 기술 고급인력 활용과 함께, 상호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표 5-5. 인도의 주요 과학기술분야 및 협력 가능 분야 ■

구분	추진방향	주요 강점분야 및 협력 가능 분야
우주과학	우주기술개발, 국가안보 강화	위성통신프로그램, 기상서비스 프로그램, 지구관측 프로그램, 우주발사체, 운영체계, 기상예측, 재해완화
핵과학	핵연료 자립역량구축 및 핵심요소 연구 개발 및 적용	연료 및 원자로기술, 재처리 및 폐기물 관리, 방사성 응용기술 프로그램 등
생명과학 및 공학	식품 및 영양, 생물화학, 유기화학, 약물학	식품/영양 안정성, 생물자원 최적 활용, 유전체, 보건, 분자의약, 환경, 바이오제품 상용화
나노기술	새로운 첨단기술 등 과학기술화	나노 구조체, 상업화, 소재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가능한 분야는 ① 과학자 및 관련 아이디어 교환, 프로젝트 수행, high-tech 공동 판매, 공동 연수제도 수행 등, ② 인도과학기술부와의 협력(날씨, 농업분야, 백신 개발, 과학자 교환 프로그램, 과

학기술포럼, 각종 펠로우쉽 운영, ③ 각종 안보관련 기술 및 제품 판매 및 구매, 판매전략 등 협력 등이 있다.

2) BT/의약/보건 협력

인도의 BT분야는 클리닉, R&D, 분자합성, 정제 화학물 등의 낮은 비용과 높은 기술 보유, 특히 IT 적용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현재 세계 1%의 시장규모에서 향후 5년내 10%로 증가, 소비면에서 2007년 15억 달러에서 2010년 45억 달러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의 BT산업은 영어구사가 가능한 바이오테크 분야의 기술 인력이 풍부하고, 소비시장도 성장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의 BT 연구기반 역량을 살펴보면, 전국 100여개 이상의 국립개발연구실험실에 수천 명의 과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 300개 이상의 대학 수준 이상의 생명공학, 생명정보학 및 생명과학 분야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관으로부터 매년 50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매년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분야에서 30만 명 이상의 대학원 졸업생과 1,500명 이상의 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포유동물종의 7.6%, 조류종의 12.6%, 어종의 11.7%, 꽃식물종의 6%가 인도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미 국제경쟁력을 갖춘 IT기술과의 연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의 대인도 BT 진출은 LG Life Science India, 진단용 시약개발 전문 중소기업인 SD 바이오 등 일부 업체가 있다.

의약품은 80억 달러 시장규모로 양적(volume) 규모로는 세계의 8%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1.5%규모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대비 50%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의약분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는 바이오와 제네릭 의약품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공유하는 한편 인도를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제약업

체들도 인도에 최근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와 인도제약협회는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대웅제약은 현지 연구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녹십자는 인도 현지 제약사와 공동 R&D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향후 의약 생산 및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SK 케미컬도 인도 연구원을 영입하는 등 인도 의약계 인력 활용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표 5-6. 제약업체 인도 진출 현황

업체(단체)	진출내용	인도 진출의 이점
한국제약협회	상호협력협정	세계 생명공학허브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생산량 4위 저임금 고급두뇌 풍부
대웅제약	현지연구사무소	
녹십자	공동R&D, 생산, 마케팅	
SK케미칼	인도연구원 영입, 공동임상	

자료: 헤럴드경제(2007. 7. 3).

이렇게 인도로 진출하는 이유는 원료의약품의 합성 및 제제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미국계 업체들이 인도로 진출하면서 미국의 신약개발 기술 등을 접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미국 FDA 인증 우수약품 제조기준(cGMP)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 진출이 용이하다. 특히 인도의 연구역량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임금 수준은 낮아 인력활용에도 매력을 가지고 있다.

협력분야로는 ① 인력, 기술, 정보, R&D 교류 등을 통한 각 종 BT 및 의약, 유전자 공동연구 ② Industrial biotech(예, enzymes(효소), 백신(해파타티스 B), 진단학, 수의학, 농생화학 등, ③ 각종 제약, 비타민, 향생물질 개발, ④ 의학과 관련 특화 SEZ 개발, ⑤ 보건 서비스, 엔지니어링, 간호사, 의사 교류 및 인적 자원 교류, ⑥ 각종 의료관련 특허 사업, 의료교육 등이 있다.

마. 자원 및 환경분야 협력

1) 금속 및 광물 자원 확보

인도는 세계 최대의 철강과 석탄을 보유하는 것을 물론 구리, 클롬 및 아연, 금, 망간광 등 다양한 금속 및 비금속류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석탄 및 광산 또는 석탄 발전소의 설립 및 운용은 100%, 탐사 및 채굴은 74%까지 허용되고 있다. 또한 철광석, 망간광, 유황, 금, 다이아몬드, 주석, 납, 아연, 몰리브덴, 텅스텐, 니켈, 백금 등 13개 핵심광물에 대해서 민간부문에겐 허용되고 있다. 다만 석면, 보크사이트, 아연, 클롬광, 구리광, 망간광, 금, 철광석, 귀석 등 10가지 주요 광물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광권을 허가할 때 연방정

표 5-7. 인도 주요 비연료 광물의 매장량 및 예상 수명

S.No.	광물명	매장량(2000.4.1 현재) Figure in million tonn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예상 수명(년)
1	Bauxite	2,462 [*]	211
2	Copper metal(tonnes)	5,297,000	80
3	Lead metal(tonnes)	2,381,000	45
4	Zinc metal(tonnes)	9,707,000	45
5	Gold metal(tonnes)	68 [*]	Not Estimated
6	Iron ore	13,460 [*]	131
7	Chromite	97	46
8	Magnesite	245 [*]	542
9	Manganese	167 [*]	47
10	Limestone	75,679 [*]	254
11	Phosphorite(Rock Phosphate)	142	79
12	Sillimanite	516 [*]	Very large
II	Garnet	52 [*]	90
16	Kyanite(tonnes)	2,817,000 [*]	265
17	Dolomite	4,387 [*]	438
18	Diamond(Thousand carats)	982 [*]	19

자료: Ministry of Mines, 주인도대사관(2006), 『인도 통상·투자 진출안내서』P.173 재인용.

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2000년 2월 이후에는 다이아몬드 및 귀석(74% 까지 자동승인)을 제외한 모든 비연료 및 비핵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은 FDI에 대하여 100% 완전개방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의 경우 포스코가 인도의 천연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오리사주에 120억 달러를 제철소 투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협력분야는 천연자원 개발 및 가공사업, 귀금속 가공 및 판매/수출 등이 유망하다.

2) 환경협력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캘커타 등 인구 1백만 이상이 거주하는 인도의 대도시는 생활용 연료 소각, 공장 및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 등으로 세계적으로 오염이 심한 도시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질 역시 매우 오염되었으며, 물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토양도 인도 영토의 53%가 황폐화 징후를 보이는 등 인도의 환경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³⁾

인도 정부는 중앙오염통제위원회를 두고 산업부문의 오염 예방 및 관리, 수자원 관리, 교육 및 의식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보호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인도의 환경부문은 이미 상당히 개방된 상태이다. 장비 제조와 환경 관련 컨설팅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투자 허용하고 있다. 이에 다국적 기업들이 합작 진출 및 기술이전 형식을 취하여 100개 이상이 진출해 있다.

인도의 환경시장은 100억 달러 규모로 2010년까지 1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도심·도시·하수처리, 산업폐수 처리, 대기오염 통제 등의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의 환경기술력은 공해 장비 제조산업과 방지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 중심의 비조직적인 산업 여건을 갖추고 있다.

23) KOTRA (2006), 『인도의 환경산업·시장 황조사 및 성공적 진출전략 수립』

협력가능 분야는 ① 수자원 관리, ② 수자원 재생 및 공중위생 및 하수, ③ 공해관리, ④ 의약분야 처리 및 관리, ⑤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⑥ 고효율 소각로, 비용 효율적 매립 기술 등의 고형폐기물 관리 분야 등이 있다.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대 공해 산업국이 많은 지역과 환경관련 지출액이 큰 지역을 동시에 고려할만하다. 이러한 지역으로는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등의 주(state)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바. 원조사업

인도는 개도국원조를 주로 일본에서 받고 있으나, 한국으로부터는 원조를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조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현재 각 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원조의 대부분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인도는 우리나라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원조는 받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프라 개선, 농업부문개선, 섬유산업 발전 등은 인도가 매우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인도에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분야에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대인도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인도경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특징이 어떤가를 비교할 때, 천연자원이 풍부한가, 소비시장의 잠재성은 어느 정도인가, 값싸고 질이 좋은 인력은 풍부한가,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자원확보, 시장확대, 비용절감, 기술확보 등의 목적 또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도는 인구 11억, GDP 기준 세계 12위(2006년 기준), 실질구매력 평가(PPP) GDP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91년 이후 개혁과 개방 이후 연평균 6%의 성장, 특히 최근 8%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는 시장확대형 경제협력 국가로 규정할 수 있다.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여타 개도국과는 달리, 제조업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서비스 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와는 매우 보완적 경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양국간 경제협력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또한 인도는 값싸고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여 현지에 투자 및 진출할 경우 비용절감에도 용이할 수 있다²⁴⁾. 그리고 자원도 풍부하고 IT, BT, 우주항공, 기

24) 하지만 값싸고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구상무역을 전제로 인도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도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거리가 멀고, 동남아 국가들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도 않다.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여 구상무역적 전략을 인도와의 협력에 적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

초과학 등 기술적 활용도도 높아 인도의 진출 및 경제협력은 내부시장 진출, 인력활용, 자원활용, 기술적 요소,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허부적 요소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경우 인도는 우리와의 경제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투자확대, 교역증진, 자원활용, 인적 및 과학기술력 활용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대인도 통상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제시된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 대인도 통상전략 방안을 참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무역자유화를 통한 통상확대 전략에서 한·인도간 CEPA 체결은 매우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 및 무역확대는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중단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국간 교역규모가 100억 달러에서 중단기적으로는 2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국간 FTA를 추진할 경우 수출은 80% 정도 증가하는 데, 이를 추정해 보면, 200억 달러 교역을 달했을 경우, 한국의 GDP는 대략 2%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국간 500억 달러 이상의 교역이 발생하여야 대인도경제협력 산업이 탈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를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IT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최근 아시아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금융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인도는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허브지역임으로, 인도를 동 지역에 전략적 진출을 위한 허브화함과 동시에 지역통합에 같이 동참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SAARC, WTO, ASEAN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인도를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업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 보건/BT/의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주, 항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개발해야할 분야가 많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인프라, 농업, 섬유 등의 분야에서 그리고 우리의 강점인 전자정부 등의 분야에서 개발경험을 전수함과 동

■ 표 6-1. 단계적 대인도 통상전략(안) ■

구분	중단기	중장기
무역자유화 • CEPA • 투자 및 무역		
	교역: 200억 달러	교역: 500억 달러
서비스협력 • IT 협력 • 금융 협력		
지역경제통합 및 전략적 허브화	SAARC, WTO, ASEAN	동아시아
지식기반사업협력	과학/기술, BT/의학/보건	항공/우주
개발경험전수 및 경험	인프라/농업/섬유	항만/철도
	도로/발전/전자정부	
자원개발협력	금속/광물	에너지
환경개발협력	공공위생	기후변화 등 공동협력

시에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고려할 만하다. 장기적으로는 항만개발 및 고속철도 등의 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

자원개발은 이미 POSCO가 진출하여 초석을 다지고 있다. 따라서 금속 및 광물개발은 중단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핵에너지 등의 분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인도의 위생은 세계적으로 취약한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의 배기가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환경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세계 환경문제에 관한 논의시 공동대응 및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권경덕 외. 2006. 『우리나라 증권업계의 동남아·인도 금융시장 진출 방안』. KOTRA
KIEP. 2005. 보고서 및 외교통상부 공청회(2006) 자료
- 이순철 외. 2006. 『인도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서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이순철·양평섭. 2007. 「중국·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오늘의 세계경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태환. 2005. 『인도의 대외 경제정책과 한-인도경제협력 강화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주인도대사관. 2007. 『인도 통상·투자 진출 안내서』. 뉴델리: 주인도대사관
- _____. 2006. 『인도 통상·투자 진출안내서』. 뉴델리: 주인도대사관
- KOTRA. 2006. 『인도의 환경산업·시장 현황조사 및 성공적 진출전략 수립』

• 외국문 자료

- Ahluwalia, Montek S. Y. V. Reddy, S. S. Tarapore. 『Macroeconomics and
Monetary Policy - Issues for a Reforming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 AT Kearney. 2006.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 Datar, Asha. 1972. 『India'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USSR and the Easter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 FICCI. 2006. 『India-China business and economic relations』. November. Delhi: FICCI
- _____. 2006. 『Enhancing India's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with Japan』.
December. Delhi: FICCI
- _____. 2005. 『Diversifying India's exports to China - An assessment』. July. Delhi:
FICCI.
- Government of India. 2006. 『Report of the India-Japan Joint Study Group』. Delhi: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 _____. 2006. 「Joint statement - Towards Japan - India Strategic and Global

- Partnership』. December 15, available at [http://www.kantei.go.jp/ foreign/ abespeech/2006/12/15joint.pdf](http://www.kantei.go.jp/foreign/abespeech/2006/12/15joint.pdf)
- _____. 2006. 『US -India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Report of the US-India CEO Forum (March), available at <http://planningcommission.nic.in/reports/genrep/USIndia.pdf>.
- _____. 2006. 『India - US Joint Statement』, New Delhi (March 2), available at <http://pmindia.nic.in/India-US.pdf>
- _____. 2005. 『Report of the India-Russia Joint Study Group』. Delhi: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 _____. 2005. Address by Mr. Kamal Nath, 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at the India - Japan Economic Partnership Meet September 25, 2006 available at <http://www.ficci.com/media-room/speeches-presentations/2006/sep/sep25-japan-kamal.htm>
- _____. 2004. 『Report of the India-China Joint Study Group』. Delhi: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 _____. Export Import Data Bank,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_____. SIA Newsletter (Various issues),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IMD. 2006. 『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IEA. 2004. 『World Energy Outlook 2004』
- Jalan, Bimal. 1992. 『The Indian Economy -Problems and Prospects』. Penguin.
- Lavin, Franklin L. 『Expanding the US-India Commercial Relationship』.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of Commerce, available at <http://newdelhi.usembassy.gov/pr112806.html>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05. 『The Emerging Global Labour Market』
- NASSCOM. 2005. 『Strategy Review 2005: The IT industry in India』
- Tsukamoto, Hiroshi. 2006. 『Japanese Investment to India - Current trend and future prospect』. New Delhi, available at [http://www.ficci.com/ media-room/speeches-presentations/2006/jan/JETROpresentation.ppt](http://www.ficci.com/media-room/speeches-presentations/2006/jan/JETROpresentation.ppt)
- UN. 2005. 『World Population Prospect : The 2004 Revision』
- World Trade Organization. 2007.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및 Government of India

.....

Executive Summary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for India

Soon-Cheul Lee and Yoonjung Choi

The Indian government, after its independence in 1947, pursued a clos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policy brought about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low productivity in its economy and, as a result, the Indian economy was trapped in the so-called “Hindu growth rate” of 3–5%. This trend changed dramatically after the Indian government adopted an open and reformative economic policy in 1991. From 1991 to 2002, the Indian economy experienced over 6% growth and expanded further after 2003 at more than 8% growth rate per year.

India's GDP in 2006 was \$826 billion, ranked 13th globally, and when estimated at purchasing power parity, its GDP ranked fourth after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World-renowned economic forecasting agencies, such as Goldman Sachs, estimate that the Indian economy will grow at more than 8% in the short term, and by 5–6% in the medium and long terms, outpacing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by 2015. Backed by the rapid growth rate, the Indian economy is expected to outperform Japan to become the third-largest economy afte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y 2020.

In addition to the rapid growth of the Indian economy,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also entered a new phase. Their bilateral trade has expanded more than 20% per year for the last five years. Korea's exports to India grew 20% annually since 2004 to reach \$5.5 billion, while imports. The growth pattern was far more dramatic in the case of imports from India, which was less than 1% in 2002, but witnessed a brisk upward trend since 2005 to reach 14.2%, and in 2006, 72.4% to reach \$3.5 billion. Moreover,

Korea is India's seventh-largest recipi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 total of 271 transactions and \$1,089 million.

Korea also strives to forge a strong partnership with India in various areas such as customs, energy resources, science and technology, security, and construction. Among others,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have negotiated an FTA, the so called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which is expected to be a stepping stone for a closer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dia is regarded as key partner for making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for most majo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has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India, including bilateral trade promotion, energy security, joint space development, military exercises, and joint efforts to contain the expan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rough these various measures, the US is expecting hi-tech cooperation, alliances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restraint of China and Russia, and maintenance of its influence in East Asia.

For China, India is of strategic importance to check the unilateral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thereby strengthening its status in the region. In addition, China is pursuing an FTA with India in an effort to expand trade with new markets, as it expects to lessen trade friction with the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S. To secure an energy supply for its rapidly growing economy, China is pursuing cooperation rather than a rivalry with India in terms of energy procurement or exploration.

As for Japan, India is considered a new consumer market, as well as an export base to European or Middle Eastern countries. Japan is pursuing this collaboration to bring about synergy effects through IT cooperation, and to check the regional influence of China in association with India. To this end, Japan is also pursuing an FTA with India while other cooperative efforts in diverse area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provision of nuclear fuel and related technology, joint military exercises, ODA, and the attainment of UN Permanent Security Council membership are ongoing.

Even for EU, based on politico-economic considerations such as the potential for the growth of the Indian market and the checking of the growth of the

US and Chinese presences in the Asian region, India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strategic country. The EU established detailed strategies, namely (1) strengthening EU-India diplomatic mechanisms, (2) deepening political cooperation, (3) expanding human and cultural exchange, (4) expanding economic policy cooperation, (5) expanding cultural exchange, and (6) increasing trade and investment.

With the rise of the Indian economy, Korea will have to establish diverse trade strategies and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by considering comprehensively its diplomatic and econom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basic trade strategy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India should consider the fact that India is (1) a potential large market, (2) a strategic hub country in South Asia, and (3) strong in knowledge-based industries. Korea should focus on (1) maximizing compensatory industri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2) increasing synergy effects in investment, and (3) utilizing and exchanging high-quality labor forces.

In order to realize such strategies, it is necessary to sign a Korea-India CEPA as soon as possible in short- to mid-term basis, utilize compensatory relationships to expand trade and investment, and pursue cooperation in fields such as IT; science and technology; health, biotechnology, and medicine; metal and mine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n a mid- to long-term basis, Korea should forge a strong partnership with India in areas of finance, South Asia economic integration, space and aeronautics, infrastructure such as port development and high-speed rail, nuclear energy, and the environment on a global scale.

KIEP 발간자료목록 | 2006~2007. 12

■ 연구보고서

-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 · 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 · 이홍식 외
-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 · 김혁황 · 김민성 · 박철형
-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 07-06 한 · 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 · 박제훈
- 07-08 한 · 중 교역 특성과 한 · 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 · 이장규 · 박현정 · 여지나 · 배승빈 · 조현준
- 07-09 한 · 중 금융 · 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구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
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 · 오용협 · 원동욱 · 나승권
- 07-10 한 · 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
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 · 이형근
-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 · 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 · 최윤정 · 정재완 · Prabir De
-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 · 채 욱 · 한홍렬 · 신현준

-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제민 · 이 근 · 이상철
-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홍중 · 신정완 · 이상호
-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 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 · 강성진
-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월라 · 박현정 · 이 근 · 은종학
-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 2007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곽재성
-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
양평섭 · 여지나 · 박현정 · 배승빈
- 07-03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07-04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
권율 · 정재완 · 이재호
- 07-05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
김한성 · 배희연
- 07-06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
이순철 · 최윤정
- 07-07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
박복영 · 박철형
- 07-08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
박영호 · 허윤선
- 07-09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
이준규 · 김종혁 · 교회채 · 오민아
- 07-10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김원호
- 07-1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
김박수 · 홍유수 · 이철원 · 김균태 · 오태현

■ 지역연구시리즈

- 07-1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 이재영·한종만·성원용·이광우
- 07-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 이재영·신현준 편저
- 07-01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박상남
- 07-02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웨어 통상 전략 / 이 근
- 07-03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최의현·김완중
- 07-0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 훈
- 07-05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s / Anjan Roy
- 07-06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 인남식
- 07-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의 전수를 중심으로 / 전승훈·허길행·유철·최미애
- 07-08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안덕근
-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 주재우·김민수
- 07-10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정 훈
- 07-1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 임배진
- 07-1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 김영철
- 07-13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 하상섭
-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 전개 / 이상현
-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한종만

■ 무역투자연구시리즈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07-16 주요국의 대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 · 강명구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07-02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 Korea FTA / Zhang Jianping 07-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 신현준 · 이광우 · 김정훈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 김진오 · 유성준 07-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정제완 · 김동현 · 박근형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 권기수 · 지윤정 07-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 박영호 · 박범준 07-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 박철형 · 권세영
---	--

07-07 인도의 주요 산업 / 최윤정 · 박민준 · 김정현

■ 세미나자료모음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 박세훈 · 정옥주 · 이성수
-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양평섭 · 구은아
-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 07-06 한·뉴질랜드 경험방향과 통상전략 / 김한성 · 배희연
-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복영
-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
도의 실효성 검토 / 송영관 · 안준성
- 07-09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 방호경
- 07-1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 이준규 · 고희채

- 07-11 EU의 세계통상전략 / 김세원
- 07-12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 윤창인
-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 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 이성봉 · 김관호 · 이준규 · 현혜정

■ Working Papers

- 07-01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 07-02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 Inkoo Lee and Jonghyup Shin
- 07-03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Gravity Model / Hea-Jung Hyun and Hyuk Hwang Kim
- 07-04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The Necessary First Step / Kyung Tae Lee and Deok Ryong Yoon
- 07-05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 Hongshik Lee and Joon Hyung Lee

- 07-06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 / Chul Chung and Bonggeun Kim
- 07-07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Count Regression Analysis / Jung Hur and Backhoon Song
- 07-08 Experiment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 / Hankyoung Sung
-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단행본

-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외교통상부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홍중·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순철(李淳喆)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

인도응용경제연구원(NCAER) 객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sc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인도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공저, 2006)

『한·인도 CEPA 양허안·민감품목 작성을 위한 산업별 분석』(공저, 2006)

『인도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방안』(공저, 2007) 외

최윤정(崔允瀾)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박사과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yjchoi@kiep.go.kr)

저서 및 논문

“Exchange Rate System in India: Recent Reforms, Central Bank Policies and Fundamental Determinants of the Rupee-Dollar Rates” (공저, 2006)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ndia” (2007)

『2007년도 KIEP-KOTRA 공동연구: 인도의 주요산업 분석』(공저, 2007) 외

연구자료 07-17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2007년 12월 25일 인쇄

2007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2128-1 94320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D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